

2002 연구보고서 210-26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오 정 진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문 미 경 (연구위원)

발 간 사

1990년대 후반 이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와 영향을 세심하게 인식하여 정책을 입안·집행·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1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제도를 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조세제도는 공평성과 중립성을 그 이념으로 표방하고는 있지만 남녀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세법상의 처리문제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던 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인식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와 관련한 연구도 매우 미진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세제인 소득세제를 살펴보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단 공제제도나 부부재산관련세제만이 아니라 과세단위와 과세범위 등 소득세 전반에 걸쳐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 불평등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한편, 외국의 세제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세제의 성 평등성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조세제도에 대한 좀더 면밀한 성 인지적인 분석과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아울러 그러한 노력이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2003년 1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I. 연구배경 및 목적

세금은 현대국가의 필수적인 원동력이거니와, 조세제도는 개개인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소득세는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적 납세의무자로 하는 대중세로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편,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이유로 공평성·중립성·효율성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은 소득세제에 있어 특히 긴요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소득세의 누진적 구조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세제는 항상 중립적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세제는 그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책적인 효과가 미세한 부분까지 달라진다. 예컨대 남성세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소위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소득세제는 의도한 바가 없더라도 결혼제도밖에 있는 이들이나 가족내 존재인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세의 범위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형태를 달리 하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인식하에, 현재의 소득세제가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이상을 적절히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관한 세제상의 처리가 성 평등의 관점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좀더 성 평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삶과 남녀평등에 보다 관련성이 짙은 소득세 과세범위, 과세단위, 소득공제 등을 다루었고 부부간의 재산이전과 관련된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를 검토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재정포럼』을 비롯한 한국조세연구원의 관련 자료 및 선행 연구를 봤으며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또 그간의 소득세법규 및 소득세기본통칙 등 국세청 예규, 심사결정사례, 심판결정사례, 국세판례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종사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조사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III.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1. 과세단위의 비적절성

우리나라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를 해 오다가 2002년 8월 29일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다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종전의 부부합산비분할과세는 주로 여성인 제2차 소득자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결혼에 대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개인단위주의 역시 세대간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부가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성맹적(gender-blind)인 비과세소득 범위

우리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 여성의 삶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즉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규정한 개정 모성보호관련법이 2001년 1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추가된 1월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게 되었지만 이는 다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달리,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고려 미약

현행 소득세법은 가사노동을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한 증여세공제수준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그나마 간접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가사노동의 가치도 일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부부 사이에 불거지는 세부담의 불공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도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즉 여성가장)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즉 소득이 있는 주부)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 5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즉 취업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연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하고 있다(소득세법 51조). 그러나 이 정도의 소득공제금액은 현실적인 가사노동의 가치에는 비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평등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다른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4. 전형적 남녀관계의 고착

남성가장과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남녀관계가 소득세법에 상당 부분 잔재해 있어 그런 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남녀의 나이에 5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부양가족공제,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녀자추가공제, 기본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전제에 의한 자녀양육비공제전제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IV.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외국 소득세제의 시사점

1. 공평과 자율성에 입각한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외국의 소득세제에서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개인단위주의와 합산분할주의 중 과세단위를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상 어떤 과세단위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선택가능성의 부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과세단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구간의 공평 도모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과세단위에 따라 과세등급을 달리 하거나 세율을 달리 함으로써 어떤 과세단위를 따르건, 가족구성 및 가구경제활동을 달리 하는 가구간에 공평성이 증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사노동을 고려하는 세제

맞벌이부부와 전업주부가정간의 세부담 공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가사노동을 평가하여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측정이 어렵고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서구에서도 이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맞벌이가구의 가사 및 육아비용에 대해 실제의 비용을 전부 또는 설정된 한도까지 소득공제하고 있거나 일정 한도를 설정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고려가 좀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삶을 반영한 과세소득 범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삶 중 중요한 활동과 여성이 담당하는 주요한 활동에 따른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세제상 고려해 넣음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녀수당 및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한 급여에는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실상을 보듬어 안고 있다.

4. 육아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상 지원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자녀 부양에 대한 공제는 실질적인 양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돌봄노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그런가 하면 독일이나 호주에서는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소위 돌봄노동(care labour)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돌봄

노동의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만하다.

6.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폐지 추세

선진국에서의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의 흐름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을 필두로 하여 혼인중의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물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하는 등 부부의 공동생활성과 처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부의 자율성을 진작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V. 성 평등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1.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소득세제는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개정하되 여성의 삶을 고려하고, 적절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며,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육아비용을 보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며, 세제상으로도 모성보호를 지원하고, 부부간 재산이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청된다.

2. 과세단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1) 이분이승제의 선택적 도입

가구간의 수평적 형평과 함께 부부의 공동성을 인정한다면, 부부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다음 그 나눈 소득금액에 초과 누진구조의 소득세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세액에 다시 2를 곱한 금액을 부부가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이분이승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과 더불어 가족의 공동경제생활성, 그리고 과세단위간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미국처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주의 중 이분이승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맞벌이부부에 대하여는 한쪽이 버는 부부보다 추가비용 및 일실한 귀속소득을 고려하여 일정한 특별공제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율표는 규모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복수세율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세범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1)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비과세

2001년 11월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추가된 1월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근로소득이 주어지지 않는 기간의 것이고 더구나 모성건강 및 육아비용보전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급여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세대 1주택 판단의 남녀평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서도 남녀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결정에서 호주승계인을 삭제하여 남녀 모두 같은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남녀의 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제제도의 구체적 개편방안

1)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남녀 연령 차이 폐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두고 있는 남녀의 5년의 연령 차이는 폐지하여 남녀 공히 6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배우자공제 폐지

결혼에 대한 중립성 및 남녀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과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적은 공제금액으로 전업주부에 의한 남성지원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배우자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녀자 추가공제 폐지

배우자가 있는 근로소득여성, 즉 맞벌이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1인당 50만원씩의 부녀자 추가공제는 기혼여성의 육아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의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독신여성과 기혼여성간도 차별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4) 여성세대주 추가공제의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로의 전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부녀자 추가공제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다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세대주와 대우를 달리 할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폐지하되, 대신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모두 적용되는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녀양육비 공제의 남녀 공동 혜택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소득자 및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1인당 50만원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양육비에 대한 보전의 의미는 있지만 여성이 육아를 전담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므로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

궁극적으로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하여 공제혜택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근래 출산율 저하현상과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선진국처럼 부양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을 향상시킴으로써 출산장려책의 효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세대주 위주의 주택자금특별공제의 조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고 있는 주택자금특별공제는 독신자와 기혼자를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혼인관계중 대체로 세대주가 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산권획득과 세제혜택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일정연령 및 소득 이상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8) 기부금전액 특별공제시설에 청소년성보호관련시설 포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역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기부금도 전액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동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주로 여성청소년이 그 보호를 받는 시설이므로 여성인권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9) 특별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의 기부금 추가

사회단체에의 기부는 소수 부유한 계층만의 의무이자 특권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자연스러운 공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역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그간 기부를 통하여 사회단체활동을 해 온 주부들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의미도 가지게 될 것이다.

5. 부부재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안

1)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원칙적 면세

부부는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감안한다면 미국이나 영국의 예처럼, 원칙적으로는 부부간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산소득도 부부개별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인위적인 자산은닉이 우려되므로,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차후에 배우자 협력분을 평가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배우자 상속세의 원칙적 면세

배우자의 협력의 가치와 그 중요성은 혼인중 배우자간 재산이전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을 통해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일어날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혼인중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 원칙적 면세와 조응하여 상속으

로 인한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면세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간 상속세를 완전히 면세하기 전 단기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간 재산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타방 배우자의 협력을 먼저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몫을 분할한 후 자신의 지분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산분할 관련 지방세의 조정

(1)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의 비과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에 2%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므로 비과세해야 한다.

(2) 재산분할로 인한 등록세의 세율 인하

재산분할로 인한 등록세도 실무상 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역시 공유물의 분할이므로 0.3%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4) 이혼위자료 양도소득세 폐지

이혼시 받는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위자료조의 부동산이나 주식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과해 왔는데, 같은 위자료에 대해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위자료의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7
II.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8
1. 연구목적	8
2. 연구대상 및 보고서의 구성	10
III.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11
1. 연구방법	11
2. 연구의 한계	12
제2장 조세제도 및 소득세제 개관	15
I. 조세이론	17
1. 이익설(Benefit Approach)	17
2. 능력설(Ability to pay Approach)	18
II. 조세의 기본원리	21
1. 조세법률주의적 접근방법	21
2. 경제학적 접근법	22
3.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28
III.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30
IV. 소득세제 개관	32
1. 소득세의 의의	32
2. 소득세의 연혁	34
3. 우리나라의 소득세 연혁	48
4. 소득세의 과세체계	56

제3장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제의 내용 및 문제점 61

I. 소득세 과세단위	63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종류 및 내용	63
2.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제 이념의 검토	65
3. 성 평등과 과세단위	72
4. 한국 소득세제와 과세단위	75
II. 과세소득 범위	85
1. 과세소득의 개념	85
2. 가사노동과 소득세	86
3. 소득세 비과세대상과 성 평등	88
III. 공제제도	97
1. 공제제도의 의의 및 내용	97
2. 기본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02
3. 추가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07
4. 특별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10
IV. 부부재산관계와 세제	113
1. 혼인중 부부간의 소득·재산문제와 과세	114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118
3. 이혼 위자료와 과세	120
4. 배우자 상속과 과세	121
V. 소결: 우리 소득세제의 문제점	122
1. 과세단위의 비적절성	122
2. 성맹적(gender-blind)인 비과세소득 범위	124
3.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고려 미약	127
4. 전형적 남녀관계의 고착	130

제4장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외국의 소득세제 131

I. 소득세 과세단위	133
1. 각국의 과세단위의 변화	133
2. 미국의 과세단위와 혼인세 논쟁	138

3. 영국	145
4. 독일	146
5. 일본	150
6. 프랑스	151
II. 과세소득 범위의 성 평등성	152
1. 미국	152
2. 기타 국가	159
III. 공제제도와 성 평등	160
1. 미국	160
2. 영국	164
3. 독일	166
4. 일본	169
5. 기타 국가	176
IV.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각국의 세제	178
1.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공제	178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187
V. 소결: 성 평등 관점에서의 각국의 소득세제의 정리 및 시사점	187
1. 공평과 자율성에 입각한 과세단위	187
2. 가사노동을 고려하는 세제	188
3. 여성의 삶을 반영한 과세소득 범위	189
4. 육아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상 지원	190
5. 돌봄노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	192
6.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폐지 추세	192
제5장 성 평등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193
I.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195
1. 남녀차별적 규정의 개정	195
2. 여성의 삶을 고려한 과세	196
3. 적정한 과세단위의 채택	196

4.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육아비용의 보전	198
5.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 확대	198
6. 모성보호에 대한 세제상 지원	199
7. 부부간 재산이동에 대한 원칙적 면세	200
II. 과세단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201
1. 이분이승제의 선택적 도입	201
2.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202
III. 과세범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202
1.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비과세	202
2. 1세대 1주택 판단의 남녀평등	203
IV. 공제제도의 구체적 개편방안	204
1.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남녀 연령 차이 폐지	204
2. 배우자공제 폐지	204
3. 부녀자 추가공제 폐지	204
4. 여성세대주 추가공제의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로의 전환	205
5. 자녀양육비 공제의 남녀 공동 혜택	205
6.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	206
7. 세대주 위주의 주택자금특별공제의 조정	206
8. 기부금전액 특별공제시설에 청소년성보호관련시설 포함	206
9. 특별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의 기부금 추가	207
V. 부부재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안	207
1.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원칙적 면세	207
2. 배우자 상속세의 원칙적 면세	208
3. 재산분할 관련 지방세의 조정	209
4. 이혼위자료 양도소득세 폐지	209
참고문헌	211
부 록	217
<부록 1> 연말정산개요(2002년)	219
<부록 2>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223

표 목 차

<표 1-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4
<표 1-2> 우리나라 편부모가족 형태 증가 현황	6
<표 1-3> 우리나라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증가 현황	6
<표 1-4> 우리나라 여성 미혼자 비율	6
<표 2-1> 조세부담배분의 근거 및 기준	27
<표 2-2> 우리나라 국세 체계	31
<표 2-3>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31
<표 2-4>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주요개정 변천내용	54
<표 2-5> 소득의 종류	56
<표 3-1>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규정의 개정 전후	82
<표 3-2> 국민연금 가입종별·성별 가입현황(2002년 9월 현재)	93
<표 3-3> 종합소득공제의 구분	101
<표 3-4> 기본공제의 내용	103
<표 3-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현황(1994~2000)	106
<표 3-6> 추가공제의 내용	108
<표 3-7>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하에서 부부소득의 세부담 비교	123
<표 4-1> 주요국의 과세단위비교	137
<표 4-2> 미국의 연방개인소득세율	139
<표 4-3> 미 연방소득세의 부부 개별 및 공동신고 세부담 상대비교 (2001년 귀속)	142
<표 4-4> 독일의 독신납세자에 대한 세율	149
<표 4-5> 독일의 부부 합산 납세자에 대한 세율	149
<표 4-6> 미국의 부양자녀수에 따른 수취소득세액공제액(1999년 기준)	159
<표 4-7> 영국의 개인소득세 기초공제	165
<표 4-8>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국제 비교	180

그림 목 차

<그림 3-1> 과세단위의 종류	64
-------------------------	----

제1장



서론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II.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8
III.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11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의 출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조금씩 개선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1세기는 감성과 섬세함, 유연성을 요구하는 창의적인 지식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과거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방치되어 있던 여성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여성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기존의 산업인력과 여성인력을 총동원해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매킨지 보고서(2001)는 2010년 한국의 강대국 진입 비전은 여성인력 활용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여성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을 남녀평등이라는 상징적 차원이 아닌 방치되어 있던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율을 살펴보면, 1965년 37.2%에서 2000년에는 48.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보육인프라나 남녀차별근절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2010년까지 약 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¹⁾하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²⁾

(단위: %)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42.8	41.9	47.0	48.3	49.5	47.0	47.4	48.3
	남성	76.4	72.3	74.0	76.5	75.6	75.2	74.4	7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넓은 의미에서 공식적인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서 규정하는 경제활동 참가는 소득을 유발하는 경제활동에만 국한됨으로 가사노동은 물론이고 농촌이나 소상인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보조적인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의 불공평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요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소득활동이 가족 내에서도 사회에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³⁾

확실히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가고 있고, 그에 따른 독립적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불이익도 참고 견디는 것이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경제적인 부분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자립 능력은 향상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직장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따른 사회적 지위향상은 다양한 가족

1) 김태홍 외, 『여성과 국가경쟁력』, 2001, 17면,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9주년 기념 심포지엄.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1, 155면 재정리.

3) 최광,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권 확립과 세제면에서의 보완방안』, 1994, 8면, 정무장관(제2)실, 정책자료 94-2.

형태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성들이 받아왔던 사회적 불이익이나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따른 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여성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득세제에 대한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의 분석도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 가족형태의 다양화

과거 우리사회의 통념적인 시각에서 정상적인 가족이란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이 또는 몇 대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고 가족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 및 실질적 권리의 향상과 궤를 같이 해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가부장제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아울러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가족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가족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가족의 기능에 대한 재고까지 필요할 정도로 큰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여성의 취업확대와 더불어 맞벌이부부 가족이 증가하면서 부부각자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지를 정한 후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만나는 주말부부나 월말부부 유형의 가족형태의 증가이다. 19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비율은 33.4%로 꽤 높은 수준이다. 이 맞벌이 부부비율 전체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는 편부모가족의 증가이다. 편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데 대개는 모자가정을 가리킨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 핵가족 가운데 편부모 가족의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9.4%였다. 이런 편부모 가족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은 미혼모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모자가정의 어려움은 모친이 취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이혼

율의 증가와 함께 재혼가족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세 번째는 기존의 결혼 및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채 완전히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결혼자체로부터 자유로운 독신가구와 결혼의 법적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운 동거가족을 들 수 있다.

<표 1-2> 우리나라 편부모가족 형태 증가 현황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편부모와 미혼자녀	9.7	8.7	8.6	9.4

<표 1-3> 우리나라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증가 현황⁵⁾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이혼율	5.9	10.3	11.4	16.5	35.9

<표 1-4> 우리나라 여성 미혼자 비율⁶⁾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미혼율	28.7	28.1	27.8	25.7	25.1

이와 같이 직장으로 인한 별거가족이나 편부모 가족, 독신자, 동거부부의 가족형태는 기존의 사회통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구성체 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사회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중 요청되는 것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이라 하겠다.

4) 한국여성개발원, 2001b, 앞의 책, 71면.

5)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이혼수/혼인수*100, 한국여성개발원, 2001b, 앞의 책, 64면.

6) 한국여성개발원, 2001b, 앞의 책, 49면.

2. 연구의 필요성

세금은 현대국가의 필수적인 원동력이거니와, 조세제도는 개개인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조세 문제는 모든 개인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직장을 갖느냐 가정에 머무르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재산에 대해 별개의 소유권을 갖느냐 마느냐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재산의 이전을 받는 경우 생전에 받느냐 생후에 받느냐 하는 등등의 일생의 중대한 결정 거의 모두에 세금문제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여성이 가정에만 머물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 지위에 있고 여성에 의한 재산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하여 조세정책상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변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세제에 수용하라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⁷⁾

그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에 제기되고 현실의 변화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기에 여성의 세법상의 처리 문제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으며⁸⁾ 관련 연구⁹⁾도 축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인식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7) 최광, “세법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1990, 21면.

8) 캐나다의 경우는 1999년에 재경부 소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금 및 양도시스템이 부양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여성들에게 미치는 세액 혜택과 과세 조치 개선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성인지적 예산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가 협조하고 노력한 결과라 할 것이다.

9) 三木義一(1983), “資産所得合算課税制度の合憲性,” 『租税判例百選(第2版)』, 別冊ジコリスト No.79, 有斐閣, May; 清永敬次(1980), “夫婦合算果税,” 『憲法判例百選 II』, 別冊ジコリスト No.69, 有斐閣; Bittker, Boris I.(1975),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27, *Stanford L. Rev*; Nyberg, Anita.(1998), *Women, men and Incomes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Independence*, Government Official Reports 1997, Ministry of Labor; Ruttenberg, Ruth. & Amy A. McCarthy.(1991), “Women and Tax Policy,” in Mary Lou Kendrigan(ed.), *Gender Differences*, Greenwood Press 등 참조.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다만 주로 인적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의존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설정한 것을 비판하거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연구¹⁰⁾가 일부 있었고, 여성단체 중에서는 2000년 이후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부부간 재산이동에 관한 세제에 관심을 갖고 여성차별적 규정의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¹¹⁾ ‘한국여성민우회’가 최근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¹²⁾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비단 공제나 부부재산문제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법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조세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성 평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1. 연구목적

조세는 1960년대 이래 세수 증가 외에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목적, 즉 배분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운용되고 있는데¹³⁾ 조세로 인한 이러한 배

10) 이양자, “개정가족법과 세법상의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학회』 제5호, 1990; 최광,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권 확립과 세제면에서의 보완방안』, 정무장관(제2실), 1994; 정승은,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본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등 참조.

11) 동 단체 홈페이지(www.hotline.or.kr/project/project1.asp) 및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2000.10.26) 자료집 참조.

12) 여성의 경우 생리대는 필수용품이므로 다른 필수용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온라인서명(<http://moonfree.womenlink.or.kr>)도 전개하고 있다. 명진숙, “생리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2002년 9월호, 14-17면 참조.

13) 북구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세금은 사회급여와 더불어 독신과 부부간, 자녀를 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1인의 자녀를 둔 가정과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간의 소득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도숙, “북구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재정포럼』 2000년 12월호, 46-47면.

분적 효과는 주로 직접세에 의해 달성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과세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의 다과, 부양가족의 수와 같이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응부담의 원칙(Leistungsfaehigkeitsprinzip)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는 인적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의 채택에 의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조세의 자동적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소득세는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적 납세의무자로 하는 대중세로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각국의 세제에 있어 중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러한 중추적 위상 때문에 소득세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개 국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공평성·중립성·효율성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이 소득세제에 있어 특히 긴요하게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세의 누진적 구조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세제는 항상 중립적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세제는 그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책적인 효과가 미세한 부분까지 달라진다. 예컨대 남성세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소위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소득세제는 의도한 바가 없더라도 결혼제도밖에 있는 이들이나 가족내 존재인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세의 범위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형태를 달리 하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과세범위, 과세단위, 소득공제 등 현재의 소득세제가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이상을 적절히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관련한 세제상의 처리가 성 평등의 관점에서 적절한지도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세제상의 성 평등이라 함은 우선, 어떤 性이 명목상은 물론 실제상 불평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통상적으로 여성에게 영향이 큰 혼인과 가족관계에 대해 세제가 중립적이어서, 세제에 의해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가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¹⁴⁾

2. 연구대상 및 보고서의 구성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의 네 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계산에 있어서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등을 한 후 과표를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최종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삶과 남녀평등에 보다 관련성이 깊은 소득세 과세단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공제 등을 다루었다. 과세단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공제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누진세율과 더불어 그것들이 소득세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항목이며,¹⁵⁾ 뒤에서 보듯이 부부를 한 단위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과세단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나 혼인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사노동을 과세소득의 범주에 묶어 공적으로 평가할지 어떨지 혹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항목이 여성의 삶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여부(과세소득의 범위)도 중요하며, 공제제도의 경우(소득공제)는 그간 꾸준히 남녀불평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¹⁶⁾ 때문이다. 또 부부간의 재산이동과 관련된 세제문제로는 비단 소득세

14) 이이노 야스시, “세제상의 남녀불평등”, 테레사 쿨라빅 외 저,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15) 예컨대 김완석의 2002년도판 『소득세법론』(광교아카데미)은 제1편 소득세의 기본이론으로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과세단위, 인적공제제도, 누진세율구조, 자본이득, 負의 소득세 등을 담고 있다. 위 책 목차 참조.

16) 최광,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권 확립과 세제면에서의 보완방안』, 정무장관(제2실), 1994; 정승은,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본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

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에 한정되지 않고 증여세, 상속세 등을 같이 언급했는데, 이는 그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부분이자¹⁷⁾ 성 평등의 관점에서 조세제도를 분석해 보는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응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구성으로는, 먼저 제 2장에서는 소득세제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이념과 체계를 개관하고 그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음 제 3장에서는 성 평등의 관점에서 과세단위, 과세소득 범위, 공제제도 등 현행 소득세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혀내는 한편,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관련되는 세법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 4장에서는 외국의 소득세제를 검토함으로써 성 평등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에서는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조세제도상 좀더 성 평등이 보장되고 여성의 삶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통계검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월 나오는 『재정포럼』 및 각종 관련 보고서를 비롯한 소득세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점검하면서 성 평등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또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등 통계자료를 검토

사학위논문, 1995; 정영진,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9 등 참조.

17) 이양자(1990), “개정가족법과 세법상의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5호; 정승은(1995), 위의 논문; 한국여성의전화연합토론회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2000.10.26) 자료집 등 참조.

하였다.

2) 국내·외 법제 및 판례 분석

법제처(www.moleg.or.kr)의 현행법령 및 법령연혁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간의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를 통하여 소득세기본통칙 등 국세청 예규, 심사결정사례, 심판결정사례, 국세판례 등을 점검하였다.

3) 관계자 면담 및 자문

금융기관 종사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조사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자문을 받음으로써 소득세제의 성 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 연구의 한계

1) 연구대상의 제한성

그렇지만 본 연구는 성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다루는 관계로 소득세율의 높고 낮음 등 세율에 대한 것은 연구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인 소득세 부담 문제, 소득재분배문제와 연결되는 세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¹⁸⁾ 소득세제의 성 평등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에

18) 적절한 세율 및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는 늘 요청되는 과제이고 그 때문에 2001년말 소득세법 개정에서도 최근 경쟁력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 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수준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등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했다. 국세청, 『2002년 개정세법 해설』, 9면.

대한 언급을 피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조세우대 조치 역시 본 연구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소득세법이 다루고 있는 일종의 소득유형이지만 山林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인 산림소득은 임업에 한정되는 소득이고 그 비중 또한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2) 연구자료 및 방법의 제한성

그간 국내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축적되었지만 성평등의 관점에서의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는 일천했던 만큼, 선행 연구를 통한 발전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밖에 외국의 근래의 소득세법규와 제도에 대해서는 주로 근래 나온 문헌에 의존한 관계로 최근의 제도의 구체적인 면모를 분석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제2장



조세제도 및 소득세제 개관

I. 조세이론	17
II. 조세의 기본원리	21
III.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30
IV. 소득세제 개관	32



I. 조세이론

조세이론의 핵심은 공평(equity)과 효율(efficiency)이라는 2가지 목표로 집약되고 있다. 즉, 공평이란 사회정의 및 배분의 공정과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효율이란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원배분을 최적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의 공평과 효율은 과세의 합리적 추구이념인 이익설과 능력설의 과세이론에서 연유된다. 이 두 학설의 주된 차이점은 이익설은 납세자와 국가간의 관계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향유하는 개인의 편익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반면 능력설은 개개인의 소득, 재산 및 소비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두 이론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익설(Benefit Approach)

이익설은 국가가 국민각자에게 베푸는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민이 향유하는 편익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과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간에는 일종의 교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를 교환설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편익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듯,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자발적 교환이론에서 연유되고 있다. 각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부담을 분배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국가가 경찰 및 소방 등과 같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서 그 비용을 과세로 지불하거나 또는 도로, 교육, 보건위생, 기술개발연구 및 정보제공 등 정부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편

익과 직결되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수익에 비례하는 수익자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하다는 이론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얻는 편익의 크기를 줄여서 표출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편익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고, 각 납세자들의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접근법은 재분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세부담의 분배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다면 분배 측면에서의 개선은 영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용재의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익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료나 전기료와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것이다.

2. 능력설(Ability to pay Approach)

조세는 납세자의 지불능력, 즉 부담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학설은 유기체적인 국가관에 입각한 의무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국가를 떠나서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국민 없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으므로 국민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무상의 의무라고 한다. 능력설에 의하면 국가와 개인간에는 급부 및 반대급부에 따라 조세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담능력인 재산, 소득 및 소비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이론이다.

이 접근법이 갖는 장점은 재분배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세 및 지출의 운용을 허용하게 된다는 데 있다. 반면에 이 접근법은 정부지출에 의한 혜택과

조세부담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힘든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평한 과세의 원칙으로서 이 접근법이 갖는 호소력은 편익원칙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원칙적으로는 능력원칙을 채택하고, 이익설은 사용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막연하다는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도 우선 경제적 능력과 조세부담의 크기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부담분배의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조세부담의 공평기준을 동일한 지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균등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지불능력이 다른 사람들은 조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능력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J. S. Mill에 의하면 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소득의 일부를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담능력은 곧 납세자의 희생의 감수라고 보고 있다. 조세부담을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능력설 또는 주관적 희생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E. R. A Seligman은 『객관적 능력설』을 제시하여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자신의 본래의 소득 또는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상속 등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의 소위 조세부담의 능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⁹⁾

1) 수평적 공평성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수평적 원칙은 바로 이 기본원칙과 상통하는

19) 이준구(2001), 『재정학』, 다산출판사, 338-341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려 할 때 어떤 사람을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어떤 두 사람도 모든 측면에서 똑같지 않은 이상 특정한 측면만을 골라내어 여기에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측면의 차이를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특별히 우대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별로 없다.²⁰⁾ 그러나 결혼 여부나 납세자가 얻고 있는 소득의 종류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차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차별해야 할 것인지도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된다.

2) 수직적 공평성

쉽게 말해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얼마나 누진적으로 세금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과 조세부담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도록 세율구조를 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다 더 혹은 덜 누진적인 세율구조가 되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은 앞에서 언급했던 수평적 공평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세제도가 수직적 공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수평적 공평성이나마 충족되어야 차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20)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제상의 장애인공제라든가 부양가족공제의 규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우대하려는 한 예이다.

못이다. 수직적 공평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만을 충족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변덕스러운 차별대우를 방지한다는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²¹⁾ 그런데 두 원칙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완전히 무작위한 조세(random taxation)를 부과해도 변덕스런 차별 정도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²²⁾ 한 원칙만 충족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원칙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II. 조세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조세원리란 국가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경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토록 마련된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원칙은 역사의 발전과정에 따라 그의 접근방법도 상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는 법률적 측면인 조세법률주의적 접근이고, 둘째는 경제학적 측면인 재정학적 측면이다.

1. 조세법률주의적 접근방법

근대 조세가 갖는 조세원리의 중요한 접근 중 하나는 조세법률주의이다. 이에 의하면 조세법은 납세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그를 실현시키는 절차

21) 수직적 공평성이 결여되고 수평적 공평성만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월 소득이 500만원인 사람들은 10만원씩 세금을 내는 반면, 월 소득이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은 20만원씩의 세금을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만은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변덕스런 차별대우를 의미하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조세부담의 분배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22) 무작위한 조세란 제비를 뽑은 결과에 의해 각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세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어떤 공평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납세자가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법으로 나눈다. 전자는 납세의무자가 먼저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는 신고행위를 뜻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그 신고내용에 의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법의 실제적 사항과 절차적 사항을 가능한 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여 법규의 유추나 확대해석을 금함은 물론 과세의 임의적 행위도 가능한 한 최소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국가에 있어서 법률 없이는 조세 없다는 사상 또는 대표 없이는 조세 없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2. 경제학적 접근법

조세원리는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바 경제학적 관점은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조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을 대표할 수 있는 A. Smith, A. Wagner, R. S. Musgrave, J. E. Due의 조세원리의 핵심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A. Smith의 조세원칙

A. Smith는 1776년 『국부론』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설을 전제로 조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세원칙²³⁾을 제시하였다.

- ① 공평의 원칙(equality)
- ② 명확의 원칙(certainty)
- ③ 편의의 원칙(convenience)
- ④ 국민경제적 원칙(economy)

23)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pp. 1777~1779. 한규수(1986), “조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대 논문집』 20-2집, 83~84면에서 재인용.

공평의 원칙은 능력설 및 이익설로서 국가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고 그리고 국가의 보호 밑에서 향수하는 수입에 비례하여 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개인의 수입원천은 임금, 이윤, 이자 및 지대로 구성되고 있는 바 이들 각 수입세원에 대하여 어느 한쪽에만 치우침이 없이 모든 수입에 대하여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명확의 원칙과 편의의 원칙은 확실 및 편의의 원천으로서 이는 각 개인이 지불하는 과세는 확실하고 편리하며 자의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 지불금액, 방법 및 시기는 명백하고 편리하게 지불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적 원칙은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액과 국민이 실지 지불하는 과세액과의 차이를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극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Smith의 조세원칙은 보호적 국가관이 지배적이었던 자유방임경제주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과세의 근거를 국가보호에 대한 보상에 있다고 보고 경제적 중립성을 갖는 조세가 이상적인 조세라고 하는 조세관을 대표하고 있다.

2) A. Wagner의 조세원칙

A. Wagner는 사회정책적 이론을 재정학에 도입하여 스미스의 4원칙을 포함하여 4개의 대원칙과 9개의 소원칙을 주장하였다. Wagner의 조세원칙²⁴⁾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정책상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신축성의 원칙

세금의 국고적 목적을 강조한 원칙으로, 세금 수입은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과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에 이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축성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② 국민경제상의 원칙: 세원선택의 원칙, 세종선택의 원칙

세금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세금에 의하여

24) 한규수, 앞의 논문, 85~86면.

국민경제가 저해되지 않는 세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세원선택의 원칙과, 국가가 세금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부담을 반드시 돌아가도록 세금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세종(稅種)선택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즉, 세원선택의 원칙이란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하여 세원이 되는 재산 원본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세원에는 소득이나 재산 또는 자본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재산이나 자본에 과세하게 되면 끝까지 세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세금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오게 된다. 1618년 보닛츠(J. Bornitz)가 “암탉을 아예 잡아먹어 없애면 달걀은 영영 맛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말은 여기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원은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공정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 또는 각 개인의 능력에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상 신분과 특권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과,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납세의무를 가지며 그 부담이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성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사회정책적인 배려에서 비례세에 의한 평등보다는 누진세에 의한 평등을, 최저생활비에 대해서는 면세를, 그리고 재산소득보다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세무행정상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편의성의 원칙, 최소징세비의 원칙

세무행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실시하려는 원칙으로, 세금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세금납부의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편의성의 원칙 및 세금을 거두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최소징세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Wagner의 조세원칙은 일종의 능력설로서 조세가 재정수입의 강제적 획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및 국민자산의 분배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R. A. Musgrave의 조세원칙

Musgrave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조세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조세부담·배분의 공평성

세금부담의 배분은 공평해야 하며, 모든 납세자는 그 정당한 몫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시장경제에 대한 중립성의 유지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액 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세금액 이상의 부담, 즉 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부담은 자산의 보유, 소득의 획득,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최적의 상황에서 이탈시키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세금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과세의 교정적 기능

④ 경기조절적 기능

⑤ 명확성 및 자의성의 배제

조세체계는 공정하고 자의성이 없는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의 명확성, 확실성, 납세의 편의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⑥ 징세비의 최소화

세무행정비와 납세이행비는 다른 목적과 양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무행정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따른 인건비·물건비를 말하며, 납세이행비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따른 납세협력비다. 그런데 납세자가 과세 당국의 징수 업무를 협력하는데 따른 비용, 즉 납세이행비(납세협력비)는 과거의 아담 스미스나 아

돌프 바그너의 징세비 최소의 원칙에는 없던 것으로, 머스그레이브가 세제 원칙에 포함시켰다.

Musgrave²⁵⁾의 제1원칙은 공평의 원리로서 각 납세자 상호간의 조세부담은 소득, 재산 및 소비 등에 대하여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2원칙은 중립성의 원칙으로서 조세가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3원칙은 과세의 교정적 기능을 뜻하는데, 조세정책이 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과세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제4원칙은 조세가 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구조는 경제안정과 성장은 물론 경기조절기능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법인세의 변경, 소득세기초공제의 변경 및 매상세율의 변동, 과세수준의 변화를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됨을 뜻한다.

제5원칙은 세무행정상의 원칙으로 조세의 명확성 및 확실성과 납세의 편의성 그리고 과세의 자의성을 배제함을 뜻한다. 그리고 제6원칙은 최소 징세비의 원리를 뜻한다.

이와 같이 근대사회에 있어서 세 학자들의 조세원칙을 살펴 본 바 핵심적 내용은 효율(efficiency)과 공정(equity)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가) 효율의 원칙

효율의 원칙이란 시장경제에서 조세부담을 배분할 때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과세의 중립성이라 칭한다. 조세의 부과가 개인의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액을 징수하는데 이때 필요 이상의 조세를 부과하면 개인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초과부담이라 하며 과세의 중립성은 이러한 초과부담

25) R. A. Musgrave & P. M.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 Practice*, New York, McGraw Hill, 3rd, 1980. p.235.

을 부담시키지 않거나 가능하면 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효율의 원칙은 또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제도를 이용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의 중립성이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 있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혼합경제체제하에서는 자동조절기능이 시장에만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후생경제정책을 중요시하는 경제에서는 중립적인 조세부담 분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더욱 경제적 효율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공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이란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소득분배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공평의 원칙은 다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언급될 수 있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적 공평성은 동일하지 않은 조건하에 있는 사람은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평의 원칙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응능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효율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을 조세이론과 조세부담의 원칙 및 근거를 상호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조세부담배분의 근거 및 기준²⁶⁾

조세의 근거	조세부담배분의 근거	부담배분의 기준	
		효율	공평
이익설	이익에 의한 공평(응익과세원칙)	+	-
의무설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원칙)	-	+

26) 이신우, “조세제도의 소득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1997, 5면,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는 크게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등 2가지의 조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의 4가지 원칙으로 구분된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14조).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15조).

다)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제16조).

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

정부가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

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지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17조).

2)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원칙의 4가지 원칙으로 구분된다.

가)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 1항).

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제18조 2항).

다)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의 원칙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제19조).

라) 기업회계의 존중 원칙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제20조).

Ⅲ.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경제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공수요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몇 가지의 세금만을 가지고도 공공수입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회가 분화되고 공공경비가 팽창됨에 따라 세금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구조도 복잡하게 되었다. 즉 어떠한 세금이라도 그 세금 하나만으로는 그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각 조세는 고유한 성질·작용이 있으므로 어느 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세라도 다른 원칙에는 배반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세금을 그 성질과 경제적인 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조세체계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경제 및 사회 여건의 변동에 맞추어 계속 정비 개선되어 왔으며, 현행 조세체계를 보면 과세권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대별하고 있다. 국세는 과세물건이 국경을 통과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고, 내국세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보통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세금들은 대부분 보통세에 속하며, 목적세에는 교육시설 및 교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교육세와 도로 및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교통세, 그리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내국세 중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의 세목이 있으며, 목적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표 2-2> 우리나라 국세 체계

구분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군세(구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의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구분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IV.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의 의의

1) 소득의 개념

소득세의 세원은 소득이며, 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경제주체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이는 주기설 또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또는 경제력증가설로 구분된다. 주기설 또는 소득원천설은 소득의 원천과 결부하여 규칙적·주기적으로 획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소득은 그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순자산증가설 또는 경제력증가설은 원천설과는 대조적으로 일정기간의 규칙적 소득 외에 증여 등 우발적 성격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반면, 자산감소의 요인이 되는 경비·채무이자·재산상실 등을 공제한 순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본다.²⁷⁾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무엇이 소득인가”하는 소득개념의 문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나 재정학자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서로 대립되어 왔고 또 다른 학설로는 flow of service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원천설: 뉴우먼(F. Neumann)과 휘스팅(B. Fuisting)이 주장한 학설이다. 내용은 소득의 원천과 결부되어 주기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우발적 성격을 가진 소득은 그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²⁸⁾ 소득이란 각 개인이 일정한

27) 서희열, 2002, 『소득세법』, 세학사, 30-31면.

기간 내에 각종의 근로,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얻는 계속적 수입 중에서 이것을 획득함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으로 보며 복권당첨수입, 도박이익과 같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물론 토지매각 등으로 인한 자본이득 등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²⁹⁾

나) 순자산증가설: 독일의 샨츠(G. V. Schanz)에 의해 주장되고 그 후 미국의 헤이그(R. M. Haig)와 사이몬스(H. C. Simons)에 의해 지지된 학설이다. 이 내용은 소득이란 일정기간에 개인이 종래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스스로 추가한 처분능력인 동시에 급부능력으로 모든 순이익, 자가이용, 제3자의 급부, 유산, 유증, 추첨이득, 보험금 등 모든 종류의 경기변동이윤이 포함되는 한편, 모든 채무이자와 재산의 상실이 공제되고 남은 것을 종래의 기본재산에 새로이 부가한 것을 소득으로 보는 학설이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개념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늘날 각국에서 지배적인 소득개념으로 채택되고 있다.³⁰⁾

다) flow of service설³¹⁾: 이 설에 의하면 소득이란 개인이 향유하는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순소득은 자신의 효용 내지 만족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충당된 소비 지출액에 비화폐적 또는 심리적 소득을 가산한 것과 같다고 본다. 즉, 개인이 얻은 각 연도의 소득 중 효용 내지 만족의 원천인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소비 지출된 부분만을 소득으로 인식하므로 투자나 저축이 되는 부분은 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³²⁾

28) 류한성, 1985, 『재정학』, 박영사, 483면.

29) 吉國二郎, 『法人税法』, 財經詳報社, 1975, 65-66面.

30) R. M. Haig(1921), "The Concept of Income, Economic and Legal Aspects", *Reading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1959, p. 59.

31) 우리나라에서는 용역유동설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종남, 1975, 『조세법연구』, 법조문화사, 17면.

32) 이종남, 앞의 책, 40면.

2)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³³⁾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인데,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라고도 한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물건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므로 공평부담의 이상에 일치하는 조세라 할 수 있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세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각국의 세제에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수기여도가 높고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큰 세목이다.³⁴⁾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상여·퇴직급부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인 것이다.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1974. 12. 24. 법률 2705)에서는 납세의무자를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의 4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2. 소득세의 연혁³⁵⁾

소득세제는 크게 보아 1) Haig-Simons의 소득개념, 곧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벌었든, 부가 늘어난 만큼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식의 소득개념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2) 직접세제로 3)누진율을 따른다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

33)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실정법상 전자를 소득세, 후자를 법인세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세만을 다룬다.

34) 김완석, 2000, 『소득세법론』, 광교아카데미, 25면.

35) 이창희, 2001, 『세법강의』, 박영사, 164-177면.

져 있다.

오늘날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에 대하여는 대체로 좋은 세제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주듯이, 언론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주장이 늘상 나온다. 이는 곧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아 거기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소득세가 세상에 처음 생길 때에는, 소득세라는 것이 지금처럼 세제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소득이라는 개념이 온 사회로 퍼져 국가의 살림살이에 드는 돈을 국민 사이에 나누어 부담시키는 기준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소득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영국사회는, 전비를 마련한다는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득세를 입법하기는 하지만 이를 괴물 같은 제안으로 여겼다.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소득세란 국가가 개인의 삶을 뒤져서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내어야만 하는 제도인 까닭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득세는 현실적으로 세제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당위로서도 바람직한 세제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설명하는가? 역사는, 그 동인이 민주주의의 성장이었음을 보여준다. 근대사, 특히 미국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세기 초 이래 약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누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따져 그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에게 퍼져나가고, 한편 같은 세월동안 핏줄이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수가 법의 존재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득세야말로 공평한 제도라는 생각이, 소득세는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제도라는 비판을 밀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 역사는 소득세가 관세나 소비세 따위의 간접세를 밀어내고, 소득의 개념이 이른바 소득원천설, 제한적 소득개념 내지 분류과세 제도로부터 순자산증가설, 포괄적 소득개념 내지 종합과세 제도로 바뀌어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같은 세부담을 짐은 불공평하고,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법제 속에 뿌리박히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득세의 역사는 좋게 말하여 민주주의, 나쁘게 말하면 인민주의의

역사이다.

소득개념은 오로지 소득세제만의 산물은 아니다. 오늘날 소득이라는 개념이 이같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람이 번 돈이 얼마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쟁 사회적 필요가 생긴 까닭이다. 이 필요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소득세라는 새로운 세제였고, 다른 하나는 회사라는 새로운 산업조직의 등장이었다. 이 제도들은, 일정 기간별로 소득, 곧 사람이나 기업을 단위로 삼아 그 부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계산할 필요를 낳았다. 이렇게 태어난 소득개념은 복식부기라는 틀과 합쳐지면서 소득의 계산 내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정한 회계관행을 형성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득개념이 소득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득세제를 비롯한 근대적 사회제도가 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1) 영국의 소득세

소득세제는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비용을 대기 위한 새로운 세원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긴 데에서 비롯한다.³⁶⁾ 전쟁이 터지기 전 영국의 재정수입은 수입물품에 붙는 관세, 특정 물품의 매매에 붙는 물품세(excise tax) 및 토지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³⁷⁾ 관세와 물품세는 마차·설탕·맥주·비단·양초 등 사치품에 부과되었고, 생필품은 대체로 면세되었다.³⁸⁾ 1793년 나폴레옹 전쟁이 터지자 그 때까지의 세제로는 전쟁에 드는 돈을 댈 길이 없었고, 1797년에 영국정부의 재정은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³⁹⁾. 이에 1799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William Pitt(小 Pitt)는 비상수단으로 소득세(duties on income)를 입법하게 된다.⁴⁰⁾

36) Stephen Dowell(1884), *A History of Taxation and Taxes in England*, vol. II, p. 209, p. 534.

37) Edwin R.A. Seligman(1914), *The Income Tax*, pp. 57-60.

38) 세수 통계는 Dowell, 앞의 책, pp. 206-207.

39) Dowell, 앞의 책, pp. 208-217.

40) An Act to Repeal the Duties imposed by an Act, made in the last Session of

각자 버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내용의 1799년 소득세⁴¹⁾는 엄청난 비판과 조세저항을 맞는다. 비판은 주로 이 새로운 세제에서는 “영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각자 제 살림살이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데 집중되었다.⁴²⁾ 여태까지는 각 개인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여 얼마의 돈을 버는가가 국가가 상관할 바 아닌 사생활의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가를 국가가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생활 내용을 조사하여 정직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알아내어야 한다. 이런 제도 속에서는 정직한 이는 손해를 보고, 거짓말 잘하며 소득을 잘 감출 수 있는 이가 덕을 보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일단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신고가 정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납세자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새로운 세제는 치욕적·야만적 압제로 여겨졌다.

소득세가 정말로 나쁜 제도라는 점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이는 적어도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전쟁은 치러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는 1799년 입법되었다. 이 소득세는 누진율을 갖추고 있었으나, 누진세 역시 부의 재분배 기능으로 이해된 것은 아니다. Pitt 자신이 말했듯이 부의 재분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었고, 누진율은 사회질서를 흔들고 재산권을 흔드는 문명사회의 파괴자로 여겨졌다.⁴³⁾ 그러나 어쨌든 전쟁은 치러야 한다는 필요덕에 누진세도 받아들여졌다. 이런 ‘악마 같은’ 소득세는 1802년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조약을 맺자마자⁴⁴⁾ 열 하루만에 바로 폐지되었다.⁴⁵⁾

그러나 연이어 1803년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전쟁을 벌였다. 영국은 다시

Parliament, for granting an Aid and Contribution for the Prosecution of the War; and to make more effectual Provision for the like Purpose, by granting certain Duties upon Income, in lieu of said Duties of Jan. 9, 1799, 29 Geo. 3, ch. 13(1799).

41) 상세는 Piroska Soos, *The Origins of Taxation at Source in England*(1997), pp. 147-152.

42) Grossfeld and Bryce, "A Brief History of the Origins of the Income Tax", 2 Amer. J. of Tax Policy 211(1983) pp. 215-217.

43) Henry C. Simons, *Personal Income Taxation*(1938), p. 60.

44) Treaty of Amiens, 1802. 3. 25.

45) An Act for Repealing the Duties on Income, 42 Geo. 3, ch. 42(1802).

전비를 마련해야 했고, 당시 수상이었던 Addington은 종래의 제도를 손보아 소득세제를 다시 들여오게 되었다.⁴⁶⁾ 1799년의 소득세법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 각자 제 소득을 모두 신고하라는 데에 있었던 까닭에⁴⁷⁾ Addington의 세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 납세자가 한해 동안 번 돈이 얼마인가를 묻는 대신, 소득을 전형적 원천별로 분류한 뒤 원천마다 따로 과세하였다. 소득의 원천은 땅·금융자산·사업소득 등 노동의 산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 등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⁴⁸⁾ 땅에 관계되는 소득은 다시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던 까닭에 1803년 세제는 소득의 종류를 Schedule A에서 E까지 다섯 가지 별표로 나누게 되었다. 소득은 별표별로 각각 과세하였고,⁴⁹⁾ 합산하지 않았다.⁵⁰⁾ 자산의 양도차익이나 수증(受贈)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이득은 별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표에 없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⁵¹⁾ Addington의 세제의 두 번째 특징은 각 원천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애초에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몫을 국가에 바로 납부하게 하는 원천과세 내지는 원천 징수 제도를⁵²⁾ 들여와 세수를 원천에서 걷었다는 점이다.⁵³⁾ 이 제도는 연금·이자·임대료·공무원 급여 등 돈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에 적용되었다.⁵⁴⁾ 원천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은 '부정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사생활의 노출'⁵⁵⁾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제도 하

46) An Act for granting his Majesty until the first Day of May next after the Ratification of a Definitive Treaty of Peace, a Contribution on the Profits arising from Property, Possessions, Trades and Offices of Aug. 1, 1803, 43 Geo. 3, ch. 122(1803).

47) Dowell, 앞의 책, p. 203 참조.

48) An Exposition of the Act for a Contribution on Property, Professions, Trades and Offices, First Part, p. 5, reprinted in Seligman, 앞의 책, pp. 90-93.

49) 분류과세를 뜻하는 'Schedular Taxation'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50) 다만, 인적 공제 등의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었다. Soos, 앞의 책, p. 154.

51)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20.

52) 그 당시 영국법에는 경제적 효과는 비슷하나 법률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 상세는 Soos, 앞의 책, pp. 11-16, pp. 157-180 참조.

53) Soos, 앞의 책, p. 36에 따르면 원천에서 세금을 걷는 제도는 17세기의 토지세에도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1512년이라고 한다.

54) Seligman, 앞의 책, p. 90.

에서 국가는 소득을 지급하는 주요 원천(은행·기업 등)을 관리함으로써 세수의 상당부분을 걷을 수 있었다. 또 원천에서 생긴 소득자료가 언젠가는 납세의무자별로 집계될 것에 대비하여 각 납세의무자도 정직하게 신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신고의 정직성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었다. 한편 원천에서 소득자료가 생기지 않는 소득, 곧 자산의 양도차익이나 수증같이 어찌다가 한번씩 생기는 소득은 아예 과세되지 않았다. 이런 소득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뒤지지 않고서는 알아낼 길이 없는 까닭이다. 이런 구조를 띤 까닭에 Addington의 소득세는 인세보다는 물세에 가까운 세제였다. 돈의 흐름에 세금이 붙지만, 그 돈을 버는 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국정부 스스로 이를 소득세(duties on income)라 부르지 않고 “재산 및 생산적 노동에 대한 세금”(taxes on property and productive industry)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 까닭이다. 이같이 이름까지 바꾸어 낸 까닭이 Pitt의 1799년 소득세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⁵⁶⁾ Pitt의 소득세에 비할 때, Addington의 소득세는 굉장한 성공작이었고, 곧 세율까지 낮출 만큼 세수를 넉넉히 걷을 수 있었다.⁵⁷⁾

전쟁이 끝난 얼마 뒤 1816년에 소득세법은 폐지되었다.⁵⁸⁾ 소득세가 각 개인의 담세력에 잘 맞는 세제라는 주장은 일부 소수의 급진좌경의식화 분자의 과격한 주장으로⁵⁹⁾ 그대로 묵살되었다. 소득세가 다시 부활한 것은 1842년 재정위기 때문이다. 당시 수상이었던 Peel은 Addington의 소득세를 한시세로 부활시켰다.⁶⁰⁾ 이 한시세가 그 뒤 여러 차례 연장되다가 마침내 1874년 Disraeli 시대에 이르러 소득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잦아든다.⁶¹⁾ 소득세가 이미 몇 십년이나 이어 온 까닭에 영구세로의 전환은 그다지 큰 충격

55) Seligman, 앞의 책, pp. 90-93에 있는 앞의 Exposition.

56) Seligman, 앞의 책, p. 92.

57)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20.

58)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21.

59) 예를 들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Three Most Important Objects Proposed라는 문서가 나돌기도 했다. Seligman, 앞의 책, p. 108.

60) Dowell, 앞의 책, pp. 322-326.

61) Seligman, 앞의 책, pp. 173-175.

은 아니었다.⁶²⁾ 누진율에 대해서는 시비가 계속되었으나 대략 1894년 이후에는 누진율도 점차 세제의 일부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1909년 이후에는 누진율에 대한 도전도 거의 사그라진다.⁶³⁾

1842년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소득 가운데 하나로 “장사나 전문직업에서 생기는 이윤과 이득의 금액 전부”⁶⁴⁾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각 사업연도에 귀속될 소득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둔 바가 없었다. 1842년 소득세법의입법 당시 이 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한시법으로 여겨졌음을 생각한다면, 소득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각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는 문제가 무시된 것은 별로 놀라울 바는 못된다.

2) 독일의 소득세

근대 사회제도 가운데 다수가 그러했듯이 Addington의 소득세도 영국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Addington 세제의 특성 가운데 분류과세와 원천징수는 독일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신고납세제도는 그대로 실시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변형되게 된다.

독일의 소득세는 1808년 동프로이센과 리투아니아가 Addington 소득세를 수입해 온 데에서 비롯한다.⁶⁵⁾ 얼마 뒤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의 일부를 점령하고 군비를 물리자, 프로이센은 비상수단으로 소득세를 온 나라에 매겼으니 이것이 1811년 법⁶⁶⁾과 1812년의 개정법⁶⁷⁾이었다. 이 소득세는 1814년 나폴레옹이 망하자 곧바로 폐지되었다.⁶⁸⁾ 이 세제는 Pitt의 소득세에 가까운

62) Seligman, 앞의 책, p. 185.

63) Seligman, 앞의 책, p. 181.

64) 원문은 full amount of the profits or gains from a trade or vocation.

65) Reglement des Kriegsschuldenwesen der Provinz Ostpreußen und Lithanien und der Stadt Königsberg insbesondere betreffend, Februar 23, 1808, Gesetz Sammlung für die Königlichen preußischen Staaten(1806-1801), p. 193.

66) Edikt über die Erhebung der Beiträge zur Verpflegung der Französischen Truppen in den Oder-Festungen und auf den Marschen, mittels einer Klassensteuer, Dez. 6, 1811, 같은 책 (1811년 분), p. 361.

67) Edikt wegen der Erhebung einer Bermogen- und Einkommensteuer Mai 24, 1821, 같은 책 (1821년 분), p. 49.

제도로 거짓말과 감추기에 능한 사람이 덕보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⁶⁹⁾ 이 경험은 그 뒤 1820년의 프로이센 신분세 제도에 반영된다. 신분세는 각 국민에게 재산 기타 파악된 자료에 따라 사회신분을 부여한 뒤 신분별로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세채무는 실제 소득금액과 무관하였으므로 신고납세나 세무조사는 필요 없었고, 납세의무자는 금액이 얼마든 국가가 매기는 세금을 그대로 내면 되었다. 크게 본다면 신분세는 “사람의 부는 대체로 잘 사는 신분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속속들이 뒤져내어야 한다”는 단점을 피하려는 제도였다.⁷⁰⁾

제대로 된 소득세가 생겨난 것은 1851년으로, 1842년에 부활된 영국의 소득세가 큰 말썽 없이 굴러가자 독일도 이에 힘입어 소득세를 들여왔다.⁷¹⁾ 1851년의 프로이센 소득세는 하층민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분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층신분에만 소득세를 적용하는 이원적 제도였다.⁷²⁾ 이런 제도를 생각해 낸 까닭은 신분세를 고안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스스로 신분을 낮추는 사람이 많았음이다. 이제 세상은 신분의 세상에서 돈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런 일을 당하자 국가는 일정 수준을 넘는 부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를 들여오게 되었다.⁷³⁾ 그러나 1851년의 소득세는 상층신분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세금을 알아서 매기는 부과과세라는 점에서⁷⁴⁾ 영국의 소득세와 큰 차이를 보였고, 신분세의 잔

68) Edikt wegen der Erhebung einer Vermögen- und Einkommensteuer Mai 24, 1821, 같은 책 (1814년 분), p. 83.

69)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29.

70) Klassifikations-Merkamale und Allgemeine Bestimmungen nach denen bei Veranlagung der Klassen-Steuerpflichtigen dem Sek. 3 der Gesetzes von 30 Mai d. J. gemäße zu verfahren ist.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30에서 재인용.

71) Gesetz, betreffend die Einführung einer Klassen- und Klassifizierten Einkommensteuer, Mai 1, 1851, Gesetz-Sammlung für die Königlichen Preussischen Staaten(1851), p. 193(이하 “1851년 법”).

72) 1851년 법 제2조.

73)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31.

74) 1851년 법 제23조.

재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각 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귀찮게 조사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었다.⁷⁵⁾ 금액이 얼마든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그대로 내면, 조세채무는 그로써 종결되었다.⁷⁶⁾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소득에 비해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다고 납세의무자가 다투는 경우에만, 그것도 마지막 수단으로만 허용되었다.⁷⁷⁾ 이런 인정과세 방식에서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의 파악율은 실제 소득의 1/3도 못되었다고 한다.⁷⁸⁾

프로이센 온 나라에 걸친 근대적 소득세는 1891년에 실시되었다.⁷⁹⁾ 1891년의 소득세는 분류과세와 신고납세라는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소득의 원천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납세의무자는 이 네 가지 분류표에 나와 있는 소득을 신고 납세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⁸⁰⁾ 영국과 마찬가지로 원천에서 소득 자료가 생기지 않는 소득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 뒤 1차 대전 후 1920년 독일 온 나라에서 소득세법이 실시되었다.⁸¹⁾ 1920년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추가함으로써⁸²⁾ Addington의 소득세를 거의 통째로 수입한 셈이 되었다.

1891년의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제한적 소득개념을 채택하기까지는 제법 논란이 있었다.⁸³⁾ 대략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독일의 세법학자들은 Addington류의 세제가 소득세가 나아갈 방향인가에 대해 열띤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다수의 학자들은 Addington류의 소득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인 이

75) 1851년 법 제23조.

76) 더 연구할 과제이기는 하나 조세채무의 성립원인을 요건사실의 충족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보이는 독일 행정법식 발상은 여기에서 태어난 듯하다.

77)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33.

78)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34.

79) Einkommensteuergesetz, Juni 24, 1891, Gesetz Sammlung für die Königlichen Preussischen Staaten(1891), p. 175.

80) Grossfeld and Bryce, 앞의 글, p. 236.

81) Reicheinkommensteuergesetz, März 29, 1920, Reichgesetzblatt 1920, I.

82) Kapitalertragsteuergesetz, März 29, 1920, Reichgesetzblatt 1920, I. HALBj., No. 57.

83) 일반론으로 Henry Simons, *Personal Income Taxation*(1938), pp. 44-48; Klaus Tipke/Joachim Lang, *Steuerrecht*(13. Aufl. 1991), pp. 200-201 참조.

른바 소득원천설(Quellentheorie)을 주장하였다. 소득이란 “원물의 손상 없이 일정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재화의 합계”라는 Hermann의 소득개념(소비자금설)에서 출발한다는⁸⁴⁾ 이런 견해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라야 소득이 된다는가(반복성설),⁸⁵⁾ “어떤 고정된 원천으로부터의 순소득으로 규칙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합”이라야 소득이 된다는가(원천설)⁸⁶⁾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19세기 후반 프로이센실정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소득의 범위에서 공통적 요소를 추려 내어 이를 소득의 개념으로 삼은 것들이다.⁸⁷⁾ 경제학의 국민소득 개념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소득이란 국민소득 가운데 각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라는 견해도 이미 존재하는 재산의 가격변화나 매매에서 생기는 차손익·이전지출 등을 개인의 소득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결론은 소득원천설과 같다.⁸⁸⁾ 소득원천설에 반대하고 순자산증가설(Reinvermogenszugangstheorie)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Schanz이다.⁸⁹⁾ “우리의 관심사는 한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독립적 경제력을 얼마나 늘렸는지, 제 재산을 해하거나 남에게 빚지지 않으면서 이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⁹⁰⁾ “소득이란 제3자가 준 것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를 뜻한다.”⁹¹⁾ “순수입, 제3자가 준 급부, 수증, 상속, 복권당첨, 보험금, 모든 시세차익 등 이런 것은 모두 소득에 포함되고, 지급이자나 재산손실은 공제해야 한다.”⁹²⁾ 그러나 Schanz의 노력

84) 사실은 Hermann의 소득개념은 각 개인의 과세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민 소득에 관한 것이다. Hermann, *Staat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1870), 특히 제 9장, p. 583. Simons, 앞의 책, p. 48, pp. 63-64.

85) Gustav Cohen, *Grundlegung der Nationalökonomie*(1885); Adolph Wagner, *Grundlegung der Politischen Ökonomie*(3rd. ed. 1892).

86) B. Fuisting, “Die Preussischen Einkommen Steuern”, *Grundzüge der Steuerlehre*(4. Bd., 1902).

87) Simons, 앞의 책, p. 67.

88) Simons, 앞의 책, pp. 44-48.

89) G. v. Schanz, “Der Einkommenbegriff und die Einkommensteuergesetz”, *Finanz Archiv* 13(1896).

90) Simons, 앞의 책, p. 5.

91) Simons, 앞의 책, p. 23.

92) G. v. Schanz, 앞의 논문, p. 24.

은 헛수고였고, 1891년의 프로이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 내지 제한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였다. 19세기 말 독일의 소득세의 사명은 세수의 확보였던 것이다.

3) 미국의 소득세

미국의 소득세도 처음 생길 때에는 영국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한시적 제도로 태어났다가 바로 없어졌다. 그러나 그 뒤 20세기 첫 무렵에 이르러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과세하는 관세나 물품세는 불공평하고, 부자라면 세금을 더 내는 소득세라야 공평하다는 인민주의적 공평의 이념이 퍼지면서 미국의 소득세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소득세가 처음 생긴 것은 남북전쟁이라는 비상재정수요 때문이다.⁹³⁾ 1861년에 남북전쟁이 터지자 그 이듬해 북군측 정부가 3%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미국 소득세의 첫걸음이다. 이 세제는 철도회사⁹⁴⁾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받는 이자 및 공무원보수 중 일정액을 넘는 금액을 3% - 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세금은 모두 원천에서 징수했다.⁹⁵⁾ 뒤이어 1864년에는 누진율을 10%로, 원천징수세율을 5%로 올렸다.⁹⁶⁾ 이 소득세는 전쟁이 끝난 뒤 얼마 있다가 1871년에 폐지되었다.

소득세가 되살아난 것은 1894년이다.⁹⁷⁾ 1894년 소득세는 인민주의적 공평 이념에서 태어났다.⁹⁸⁾ 미국 남서부의 농촌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관세를 줄이고 그 대신 소득세를 걷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쓰는 사람 모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세금,’ ‘사람의 부가 아니라 필요에 물리는 세금’이며, 이제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소

93) Seligman, 앞의 책, p. 431.

94) 미국 개척 당시 철도회사는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다.

95) Act of July 1, 1862, sec. 89, 12 Stat. 432 가운데 p. 473.

96) Act of Junu 30, 1864, sec. 116, 120, 122, 123, 13 Stat. 223 가운데 pp. 281-285.

97) Act of Aug. 27, 1894, sec. 27, 28 Stat. 509(1894) 가운데 p. 553.

98) Seliman, 앞의 책 pp. 493-508.

유하는가에 세금'을 물려야 할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⁹⁹⁾ 이런 의미에서 관세 중심인 당시의 세제는 국민 다수의 희생 위에 동북부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어 미국정부는 1894년에 관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매기기에 이르렀다. 이 소득세는 부자라면 세금을 더 내야 마땅하다는 식의 인민주의에 터잡은 것이었던 만큼 일정금액을 넘는 '이득, 이윤 및 소득'을 모두 과세하였고,¹⁰⁰⁾ 부동산의 양도차익,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따위를 모두 과세하였다.¹⁰¹⁾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좁은 만큼 원천징수의 범위도 매우 제한되었다.¹⁰²⁾ 그러나 1984년 소득세는 이듬해인 1895년 미국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대법원은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판결¹⁰³⁾에서 1894년 소득세는 직접세이므로 연방정부의 과세권의 둘레를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¹⁰⁴⁾ 판시 이유는 미국헌법에 특유한 연방제 문제였지만,¹⁰⁵⁾ 국민대중은 이를 국가재정의 *Dred Scott* 판결¹⁰⁶⁾로 여겼다.¹⁰⁷⁾ 흑인이 국민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나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나 모두 법원의 보수반동적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정서였던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바뀌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고, 남은 길은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¹⁰⁸⁾

다시 십 수년이 지난 1909년에 역시 민주당의 주도 속에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법인특권세,'¹⁰⁹⁾ 곧 법인이라는 법률형식을 이용하는 특권에 대한 대가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 역시 위헌여부가 문제되었지만, 법원은

99) 미국 상원 Ways and Means Committee(재무위원회) 위원장 McMillin의 연설, Seligman, 앞의 책 497에서 재인용.

100) Act of Aug. 27, 1894, sec. 27, 28 Stat. 509(1894) 가운데 p. 553.

101) Selgman, 앞의 책, pp. 508-509.

102) 1984년 소득세법 제33조.

103) 157 US 429(1895).

104) 당시 미국헌법에 따르면 각 주의 직접세부담은 인구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었다. 1909. 7. 2. 개정 전 미국헌법 제I(9)(4)조 및 제I(2)(3)조.

105) 상세는 Selgman, 앞의 책, pp. 531-589.

106) *Dred Scott v. Stanford*, 60 US 393(1856).

107) Selgman, 앞의 책, p. 589.

108) Selgman, 앞의 책, p. 589.

109) Corporate Excise Tax. Act of Aug. 5, 1909, sec. 38, 36 Stat. 11.

Flint v. Stone Tracy Co. 판결¹¹⁰⁾에서 법인세는 직접세가 아니므로¹¹¹⁾ 연방 정부의 과세권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1909년에 개인소득세를 매기기 위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1913년까지는 36개의 주가 찬성하여 제16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¹¹²⁾ 바로 뒤 이어 같은 해에 소득세가 입법되었다.¹¹³⁾ 1913년의 소득세는 1% - 6%의 누진세율로 ‘모든 순소득’을 과세하였다. 미국의 소득세가 태어난 배경이 부자가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는 인민주의적 사고 내지 공평의 이념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모든 소득을 누진율로 과세하도록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의 부가 증가한다면, 그 사람의 담세력이 그만큼 늘어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운명은 아직은 불안했다. 제16차 개정헌법이나 1913년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이라는 말이 반드시 순자산증가설을 뜻한다고 밝힌 바 없었던 까닭이다. 이리하여 소득의 개념은 다시 법원에 맡겨지게 되어 법원은 소득세의 본질을 고민하는 긴 항해를 시작하였고, 법원이 공평의 이념을 모조리 받아들이기까지는 다시 몇 십년의 세월이 흐른다. 소득세의 본질에 관한 갈등이 드러난 초기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1920년의 Eisner v. McComber 판결¹¹⁴⁾이었다. 이 판결의 논점은 주식배당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가였다. 법원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득’이란 자본이나 노동이 받는 보수라는 식으로 소득의 개념을 정한 뒤 자본소득은 원본에서 분리 또는 실현되어야 소득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헌법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였을 뿐이므로 주식배당을 과세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주식배당의 과세가 옳은가는 일단 접어놓고¹¹⁵⁾ 판시이

110) 220 US 107(1911).

111) 영미에서는 법인세는 직접세가 아니라고 생각함이 보통이다. 물론, 직접세, 간접세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달려있다.

112) 개정헌법은 소득세는 주별 인구에 관계없이 걷을 수 있도록 정했다. 1909년 7월 2일 제16차 개정헌법.

113) Tariff Act of 1913, Sec. II, 38 Stat. 114(1913) 가운데 p. 166.

114) 252 US 189(1920).

115) 법인에 유보된 소득은 주주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반면 현금배당은 주주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원적 제도를 전제로 한다면, 주식배당의 과세여부는 주식배당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가의 문제가 된다. Marvin A. Chirelstein, *Federal*

유로 소득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서 이를 ‘헌법’개념으로 정리한 것은 종합과세의 발목을 잡는 일이었다.

종합과세 내지 순자산증가설이 발판을 굳히기까지는 1938년에 출판된 Henry C. Simons 의 『*Personal Income Taxation*』의 힘이 크다. 그전에도 1921년 R. M. Haig가 순자산증가설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고,¹¹⁶⁾ 미국대법원도 1931년이 U.S. v. Kirby Lumber 판결¹¹⁷⁾에서 회사채의 초기상환에서 생기는 차익은 소득이 된다고 판시하여 순자산증가설의 경향을 보여준 바 있다. Simons는 소득의 정의문제를 불특정다수의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조세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풀어내기 시작한다.¹¹⁸⁾ 소득(적어도 과세소득)이라는 말이 각 개인의 담세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내지 계산결과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¹¹⁹⁾ 이는 개인이라는 인적 차원에서 정의해야 하고¹²⁰⁾ 일찍이 독일에서 Schanz가 내세운 순자산의 증가가 과세소득을 정하는 바른 지도 이념이 된다.¹²¹⁾ 일정한 원천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이라야 소득이라는 견해는 무엇이 소득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애매한 태두리를 갖는다.¹²²⁾ 바른 질문은 무엇이 소득인가가 아니고 소득이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다.¹²³⁾ 각 납세자를 놓고 그에게 물릴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가, 그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물어야 한다면, 납세자의 인적·주관적 상황을 떠나 원천이 무엇인가, 자금의 흐름이 반복적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소득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그르다.¹²⁴⁾

1940년대 이후 미국의 판결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이 확실히 굳어졌다. 1940년의 Helvering v. Brunn판결¹²⁵⁾은 임대토지 위에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가

Income Taxation(7th ed. 1994), pp. 76-77.

116) R. M. Haig(1921), “The Concept of Income”.

117) 284 US 1(1931).

118) Simons, 앞의 책, pp. 1-3.

119) Simons, 앞의 책, pp. 79-80, p. 203.

120) Simons, 앞의 책, p. 77.

121) Simons, 앞의 책, pp. 60-61.

122) Simons, 앞의 책, pp. 62-77.

123) Simons, 앞의 책, p. 78.

124) Simons, 앞의 책, p. 79.

125) Helvering v. Brunn, 312 U.S. 37 (1942).

치가 임대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소득이 되는가 라는 논점과 관련하여 투자 원물에서 분리되지 않은 이득이라도 소득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1955년의 CIR v. Glennshaw Glass Co. 판결¹²⁶⁾은 실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¹²⁷⁾ 그 차액이 소득인가라는 논점을 판단하면서 Eisner v. McComber 판결의 제한적 소득개념을 사실상 폐기하고¹²⁸⁾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따랐다.

3. 우리나라의 소득세 연혁¹²⁹⁾

1) 일정아래서의 소득세제

1926년 조선총독부 안에 설치한 세제조사위원회가 일반소득세를 조세체계의 중추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기술, 부담형편 및 실행상의 이유 등으로 도입이 연기되었다가 1934년에 비로소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1934년에 도입한 일반소득세는 제1종 소득세(법인소득)¹³⁰⁾ · 제2종 소득세(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원천과세소득) 및 제3종 소득세(제 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서 종합과세의 대상임)로 구분하여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다.¹³¹⁾

특히 제3종 소득세의 경우에는 최저 0.3%에서 최고 27%까지의 2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가족단위 합산과세 제도를 채택하여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세제는 중·일 전쟁 및 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비조

125) 309 US 461(1940).

126) 348 US 426(1955).

127) 미국법에는 이른바 'punitive damage'제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

128) 348 US 426 가운데 pp. 430-431. 이 판결은 punitive damage의 과세여부를 넘어 비과세로 명시되지 않은 한 경제적 이득은 모두 소득이 된다는 뜻으로 넓혀져 읽히게 되었다. Boris I. Bittker and James S. Eustice(1990),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3.5[1]절.

129) 재무부, 『한국세제사』, 상권, 1979.

130) 법인소득세는 이미 1916년 8월에 신설되었던 것인데, 1934년에 소득세 안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131) 강인애, 『소득세법』, 진영사, 1981, 55면.

달을 목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미군정기의 소득세제

미군정기 초기에는 일정 아래에서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7년 6월 21일과 1948년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소득세령의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제를 개편하였다.

먼저 1947년 6월 21일의 개정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의 현실화와 소득세율의 인상(최저 1%부터 최고 53%까지의 누진세율에서 최저 3%부터 최고 90%까지의 누진세율로의 인상)이 있었다.

다음으로 1948년 4월 1일의 개정에서는 제 3종 소득의 추가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에 의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액을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제 1종 및 제 2종 소득 중 갑종에 대한 비례세율은 인상하되, 제 3종 소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은 최고세율을 90%에서 70%로 인하하였다.

3) 건국후의 소득세제

1948년 정부수립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15일에 소득세법(법률 제 33호)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소득세를 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법인세로 독립시켰다.

둘째, 소득세를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배당소득 등)와 특별소득세(청산소득분배금·퇴직급여소득·비영업대금이자소득·일시소득·공채 및 사채이자소득·은행예금이자소득 등)로 구분하였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종합과세하였고, 특별소득세는 소득원천별로 초과누진세율 또는 차등비례세율에 의하여 분류과세하였다.

셋째, 종전에 과세소득의 범위 안에 포함하였던 양도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던 세제는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1950년 12월 임시조세증징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 세법을 고쳐 모든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과세에 처음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자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 환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고, 1954년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에서는 전시체제의 전형적인 세법인 임시조세증징법과 조세특례법이 폐지되고, 소득세를 비롯하여 많은 세종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즉 분류소득세에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하는 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도 소득원천별로 부동산·배당·산림·급여·퇴직·양도 및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류소득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54년 6월과 1956년 12월의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제는 그 적용범위가 점차 축소되었다.¹³²⁾ 1957년 초부터 시행된 1956년의 세제개혁의 특징은 부흥세제에 있다. 이 부흥세제의 핵심은 기업자본의 축적과 주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담의식이 흐린 간접세 중심으로 이행하려는 것이었다. 1957년 자산재평가세가 신설되었고, 1958년 임시외환특별세·교육세·자동차세 등이 신설되었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종합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59년 음성세원의 양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혁을 거쳐, 1960년 초 조세체제가 완성되었다.

132) 강인애, 앞의 책, 56면.

4) 경제개발기 이후의 세제

가) 1961년 소득세법의 제정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시를 눈앞에 둔 1961년의 세제개혁은 경제개발계획의 지원적 세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행하였다. 즉 1961년 12월 8일에 구소득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세법(법률 제 821호)을 제정하였는데, 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의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의 요소를 제거하여 완전한 분류소득세로 전환하였으며, 둘째, 과세소득을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셋째,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5%에서 30%까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7%에서 25%까지)을, 배당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을 적용하였다. 넷째, 외화획득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한 전략업종을 중요산업 감면업종으로 추가하였다.

1961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주로 세율에 관하여 행하여졌고 제도의 근본적인 골격에는 변동이 없었다.

나) 1967년의 소득세법의 제정

1967년의 세제개혁은 경제현실과 시정방향의 변화에 순응하여 종전의 세제가 지니고 있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투자재원의 조달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으로 1967년 11월 29일 종전의 소득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세법(법률 제 1966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소득세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종합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분류과세제와 일부 종합과세제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등의 소

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신설하고 위약금·배상금 및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에 추가하는 등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충하였다.

셋째, 세율의 세분화와 최고세율의 인상 등의 주정이 있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계급을 다단계화함과 아울러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였으며,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도 최고세율을 55%로 인상하였다.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비례세율인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12% 또는 10%에서 각각 15%씩으로 인상하였다.

넷째, 일부 세액공제제도의 신설과 원천징수제도의 확장이 있었다. 투자 및 수출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중요산업 감면 또는 외화획득감면제도를 투자세액공제제도 또는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면세, 공개법인의 이익배당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주택자금세액공제제도가 채택되었다.

다섯째,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산세 및 세액공제를 개선하고, 원천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세율의 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71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장기적인 세제전망과 관련하여 기존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납세회피를 봉쇄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장래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즉, 분류소득세제 중심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5) 1974년 소득세법의 전면개정

1974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직접세 계통에 종합소득세제가 채택되어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 2705호로 공포되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

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개인별로 종합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 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세대단위로 합산과세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8년이래 시행하여 오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소득세제 안에 흡수·보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였다. 특히 양도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저 8%에서 최고 70%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통합하였다.¹³³⁾

6) 1994년 소득세법의 전면개정

1993년 8월 12일자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1996년부터 정부과세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즉 부부단위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단위를 종래의 세대단위에서 부부단위로 개정하였다.

셋째, 종합소득세 등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세율구분도 종래의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필요경비적 공제, 개인적 지출에 관한 공제, 특별공제 및 인적공제를 통합·단순화하였다.

넷째, 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의 확정방식을 종래의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다.

133) 김완석, 2000, 앞의 책, 29면.

다섯째, 총수입금액 등의 귀속연도와 자산 등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기준 등을 소득세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기업회계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였다.¹³⁴⁾

이상은 소득세법 중 중요 개정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좀 더 자세한 개정내용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주요개정 변천내용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49. 7. 15	- 일반소득과 특별소득으로 구분하고 일반소득은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1954. 3. 31	- 분류소득세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종합과세제 실시
1958. 12. 29	- 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완전분류과세제로 환원
1960. 12. 30	- 외국항행소득과 외국선박소득의 면세규정 신설 - 과소신고 및 무신고가산세제도 신설
1961. 8. 24	- 자진신고납부공제제도를 신설 - 과소신고 및 무신고가산세제도 신설
1961. 12. 8	- 경제개발정책의 지원을 위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도입
1962. 11. 28	-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를 확대
1967. 11. 29	- 일정소득이상자에 대하여 종합과세제 실시 - 지상배당과세제도의 도입
1970. 1. 1	- 근로소득공제제도 신설
1973. 2. 10	-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자를 투자공제대상에 포함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필요경비에 불산입
1973. 3. 3	-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직접감면제도 폐지 -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규정 신설 - 수출손실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규정 신설

134) 김완석, 2000, 앞의 책, 30면; 서희열, 2002, 앞의 책, 71면.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74. 12. 24.	- 소득의 분류를 전면조정하고 종합과세제도로 전환
1988. 12. 26	- 종합소득세율체계의 간소화(16단계→8단계, 최저세율 6%→5%, 최고세율 55%→50%) - 비실명 금융자산 차등세율 폭 확대 - 자동부과율 과세대상 범위 확대
1989. 12. 30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신설
1990. 12. 31	- 세율체계 조정(8단계→5단계)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범위 확대
1992. 12 . 8	- 소득세 신고 및 결정체계의 개선
1994. 12. 22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도입 - 신고납부제 도입 - 종합소득세율 구조개편 및 각종공제 조정
1998. 1. 1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유보
1999. 12. 31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001년 귀속분부터 재 실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2000. 12. 29	-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제도 신설 -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 하여 과세기반 확충
2001. 12. 31	-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9% 내지 36%로 평균 10%씩 인하 -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율을 조정
2002. 8. 29	- 자산소득부부합산과제에서 개인단위로 전환
2002. 11.	-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폐지(부부합산과표 4,000만원)→ 개인별과세(개인별 4,000만원) - 의료비, 교육비, 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 -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 인상 -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강화-

출처: 국세청, 『국세청 삼십년사』, 1996, p.297; 서희열, 『소득세법』, 2002, pp. 71-72.

4. 소득세의 과세체계

1) 소득의 종류

과세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 소득으로 구분된다.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으로 한 해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세금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류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그 특징은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의 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으로부터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근래 부부자산합산과세가 다시 개인단위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소득의 종류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			소득의 내용
종합 소득	부부 합산	이자소득	- 예금, 유가증권 등의 이자
		배당소득	- 주식,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 건물 등의 보증금의 이자와 임대료
	소득자 별합	사업소득	- 개인사업 및 자유직업소득 등
		근로소득	- 월급 등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소득
		기타소득	- 원고료 등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소득
		일시재산소득	- 서화·골동품·예술품·영업권 등의 양도소득
개별과세	퇴직소득	- 퇴직금	
	양도소득	-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산림소득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 과세분류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대별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여기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크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단점은 소득을 종합하여 징세해야 하는 복잡성과 납세의무자에게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분류소득세(schedular income tax)는 개인소득을 지대·이자·임금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각 소득에 대하여 개개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분류소득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원천징수 과세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같은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를 행하는 점뿐만 아니라 소득원천에 비례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행하는 점 및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개혁으로 종합소득세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본고 제 2장 IV. 3. 우리나라의 소득세 연혁 참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1항),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 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간을 통하여 소득이 집적·형성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단위로 합산하여 분액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표준과세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소득세 과세체계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조세체계는 과세대상, 과세단위, 과세기간, 과세구간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과세연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소득세의 기본체계이다.¹³⁵⁾

가) 과세대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득세 과세의 근거는 경제적 능력이 많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져야 하는 능력원칙이다.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전형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 임대료, 이자, 배당 등의 소득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이 있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분류과세되고 있는 위의 3가지 종류의 소득은 소득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경상소득의 성격을 지닌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차이가 있다.

나) 세율구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누진도의 정도는 과세의 공평성 제고에 따라 좌우된다. 누진율은 많은 부분 소득세제상 과세구

135) 이전소득이나 이월소득도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과세 환급금처럼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에게 이전한 소득은 세후소득이므로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 등은 소득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볼 수 있지만 벌과금이나 과태료 등은 회피가 가능한 지출이므로 법규위반에 따른 지출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박기백,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1999년 6월, 11면.

간과 누진세율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누진율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누진율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과세단위

과세단위는 각 개인의 과세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다. 개인들에 대한 조세 부과는 국가마다 다양한 과세단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개인, 혼인부부, 또는 가계(families) 중 하나를 과세단위로 삼고 있다. 부부나 가계를 과세단위로 삼는 경우,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과세단위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공제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인이야말로 표준적 소득세제 하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단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과세단위의 문제는 세율구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일 소득세제가 완전비례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과세단위의 선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율구조상 최소과표구간에 상당히 큰 면세구간이 있거나 상당히 낮은 저세율구간이 있을 경우 소득의 합산·분할 및 별도 과세단위 사용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커진다. 따라서 과세단위의 선정은 세율구조의 선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단위와 세율구조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수평적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일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들에는 세부담이 동일하게 지워져야 한다, 두 번째로 결혼의 결정이 조세측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결혼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변할 경우 결혼에 대한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감안하여야 할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부부합산과세가 근로소득에 적용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세율체계의 조정이 없다면 여성의 근로의욕은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율구조와 과세단위의 선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라) 공제제도

납세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각 개인에 따라 일정액의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금액과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각 개인이 벌어들이는 일정액의 소득에 대해 각종 비용 공제 및 필요경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제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는 크게 필요경비공제적 성격을 지닌 것과 필요지출에 대한 공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필요경비공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는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하여 소득을 얻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경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비용의 실제금액을 공제해 주는 실액공제제도와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다. 불가피한 지출의 비용처리를 위한 것으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 외에도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 가운데 특별한 조건을 갖춘 일부 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가 있다.

소득공제의 구조와 수준은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가피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지출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불가피한 인적공제에 대한 과세 제외는 조세우대조치 또는 조세법상의 보조금 교부가 아니고 개인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과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조치인 것이다. 최저생활비의 면세는 헌법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 또는 기본권 보장의 목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최저한의 조건인 것이다.

제3장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제의 내용 및 문제점

I. 소득세 과세단위	63
II. 과세소득 범위	85
III. 공제제도	97
IV. 부부재산관계와 세제	113
V. 소결: 우리 소득세제의 문제점	122



I. 소득세 과세단위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종류 및 내용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라 함은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를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개인단위(individual unit system)로 할 것인가 부부(marital unit)나 가족(family unit)과 같은 소비단위(consumption unit system)로 할 것인가는 소득세의 크기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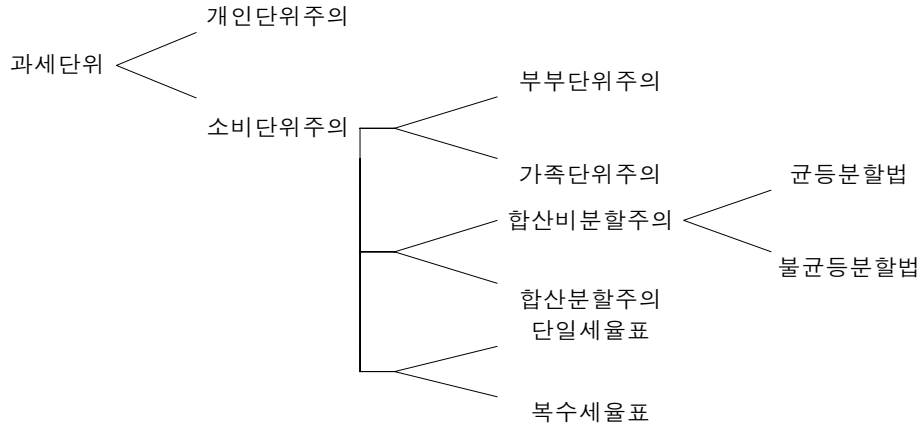
개인단위주의를 택할 때는 각각의 소득자에게 과세를 하면 되지만 소비단위로 할 경우에는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할지, 부모 등을 포함시킬지에 따라 단위가 달라진다.

또 소비단위주의를 택하더라도 소득의 분할여부에 따라,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합산분할주의와, 소비단위의 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합산비분할주의로 나뉘어진다. 나아가 합산분할주의의 경우는 균등분할주의와 불균등분할주의로 다시 세분된다.

한편, 소비단위주의의 채택에 있어 적용할 세율표로는, 독신자·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는 단일세율표주의와,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복수세율표주의가 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과세단위의 종류



자료: 한국조세연구소,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이냐 부부와 같은 소비단위로 할 것이냐는 조세정책적인 문제지만 그 어느 쪽도 완벽하지는 않다. 개인과세단위의 경우 혼인의 중립성은 존중되지만 부부의 생활공동체적 성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가계간 소득분배의 불공평문제를 야기하고, 부부단위의 경우 혼인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개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나아가, 포괄주의 과세제도로의 이행을 생각한다면 과세단위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이 가족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본의 축적이 가족내에서 발생하므로 가족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유인을 상당히 제공하고 있고, 행정적 편의성과도 그 방향이 일치하여 과세단위 역시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녀는 과세상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발견되고 이 경우는 자녀에게 부모의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¹³⁶⁾ 어떤 과세단위가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36) 이철인,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재정포럼』 2000년 1월호, 9-10면.

2.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제 이념의 검토

이처럼 과세단위의 문제는 과세의 공평성·효율성·간편성·부부재산제와의 관계·결혼에 대한 중립성 및 사생활 보호 등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소득세제 이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⁷⁾

1) 공평성

어떤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는 부부 내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각각 과세하기보다는 부부 내지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하겠다. 포괄적 소득세의 채택을 제안한 대표적인 보고서인 캐나다의 카터 보고서에서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제적·재무적 주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기본적 단위로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³⁸⁾

예컨대 합산한 소득금액이 다같이 3천만원이기는 하나 남편만의 소득이 3천만원인 A부부, 남편과 처가 각각 1천 5백만원씩인 B부부, 남편 2천만원과 처 1천만원인 C부부에 대하여 개인단위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각 부부간에 현저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수, 혼자 버는 부부와 맞벌이부부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위의 세 부부는 동일한 담세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보다 공평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단위주의가 개인단위주의보다

137) 이에 대해서는 김완석, 2000, 앞의 책, 72-78면을 주로 참조했다.

138) Kenneth Le M. Carter et 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Taxation of Income*, Vol. 3, 1966, p.124.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소비단위주의에 있어서도 소비단위의 크기(부부단위주의와 가족 단위주의), 소득의 분할(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 및 세율표의 차등(단일세율표주의와 복수세율표주의) 등에 따라 과세의 공평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소비단위주의에 있어서도 부부와 가족 중 어느 쪽을 과세단위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대 중에서 자녀 등이 소득을 가득하고 있는 상태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만을 합산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카터 보고서에서는 가족이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의 단위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과세단위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카터 보고서는 부부, 21세 이하의 미혼자녀 및 21세를 초과하는 박약자인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을 과세단위로 하되, 다만 21세 이하의 미혼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별거하면서 전업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합산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⁹⁾

둘째, 소비단위주의에 있어서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가 문제이다. 합산비분할주의는 결혼 후의 부부의 소득세 부담을 결혼 전의 2인의 독신자의 소득세 부담보다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혼인에 대한 제재(marriage penalties)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제 2차 소득 가득자(주로 처)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임으로써 노동의 공급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합산비분할주의만큼 불공평하고 부도덕하며 반사회적인 제안은 없다”라는 극단적인 비판론¹⁴⁰⁾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합산분할주의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합산분할주의의 일종인 미국과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2분2승제는 부부는 소득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각각의 소득의 ½을 자기소득으로 하고(2분) 그것을

139) Kenneth Le M. Carter et 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Taxation of Income*, Vol. 3, 1966, pp.144~145.

140) D. Smith, *Federal Tax Reform*, 1961, p.44.

기초로 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2승)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써, 부부의 공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정도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단순히 2분2승을 하기 때문에 혼인에 의한 규모의 이익(economics of scale)을 통한 비용의 절감효과를 무시함으로써 기혼자를 독신자보다 지나치게 우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¹⁴¹⁾ 또 2분2승의 이익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에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점도 이 제도의 약점이다. 그런가 하면, 2분2승제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처가 얻은 소득은 합산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관련한 귀속소득(imputed income)에 대하여는 측정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합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보다 어느 한쪽만 버는 부부를 우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른 규모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마련한 복수세율표를 시행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세대간의 공평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규모의 이익을 객관적·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에 달려 있다.

2) 효율성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과세단위가 노동의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주로 문제된다. 소비단위주의 중 합산비분할주의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합산대상가족 또는 배우자의 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소득취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합산대상가족 또는 배우자의 노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상황¹⁴²⁾에서는,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에 대하여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할 경우 제 2차 소득가득자, 특히 여성의 노동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여성의 사회진

141) Boris I. Bittker,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27, *Stanford Law Rev.*, 1975, p.1423.

142) 2000년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여성이 48.7%인 데 비해 기혼남성은 84.3%이다.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155면.

출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과세단위의 선택이 제 2차 소득가득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¹⁴³⁾

3) 간편성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세무행정 또는 세무집행의 간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 중 어떤 과세단위를 채택하더라도 세무집행상 상당한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다.

먼저 소비단위주의에 있어서는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이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무행정의 부담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과세단위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또는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세무행정면 또는 납세협력면의 부담을 격증시키게 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징세비(administrative costs) 및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s)과 같은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연말정산절차에 의하여 종결되고 있는 사정 아래에서 소비단위주의로의 전환은 엄청난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는 주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이행과 그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단위주의에서 소비단위주의로 전환함에 있어서 맞벌이부부 또는 과세단위 안의 다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문제가 된다. 합산분할주의 또는 합산비분할주의의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부담 및 과세관청의 세액환급사무의 부담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단위주의의 경우에는 부부 또는 가족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하여 높은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면함으로써 소득세의 부담을 경

143) IFS,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George Allen & Unwin, 1978), p.377.

감·회피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자산 명의의 형식적인 변경에 의한 자산소득의 분산, 가족조합(family partnership)을 가장한 소득의 분산, 가족간의 거래에 의한 소득의 분산 및 사용인으로 가장한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에 따른 사업소득 등의 분할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대응하여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처분을 행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4) 부부재산제와의 관계¹⁴⁴⁾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부부재산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부부의 소득의 귀속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결국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¹⁴⁵⁾

우리의 경우는 민법상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그 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829 ①), 현행 법상 부부별산제가 법정재산제이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따라서 부부재산의 귀속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명실공히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특유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 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고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수익 및 각자의 장신구나 의복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재산은 혼인해소의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가 되며,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144) 김완석, 2000, 앞의 책, 76-77면.

145) 그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분한 것이 각각 부 및 처의 소득이기 때문에 부부는 합산소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Poe v. Seaborn* 282 U.S. 101 (1930).

둘째,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명의는 부부의 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재산으로서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대지 기타의 부동산,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는 예금·주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위의 부부재산의 귀속형태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셋째 유형으로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유로 해석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남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로서 처가 직접 이에 협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남편의 활동에 직접 협력하지 않고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명의로 얻어지는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¹⁴⁶⁾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제도(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사실상의 공유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고,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여분제도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다른 배우자의 일방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우리의 현재의 부부재산제도하에서는 세제상의 소비단위주의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개인단위주의와도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⁴⁷⁾

- ① 먼저, 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사 당해 소득이 명의상으로는 부부의 일방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쌍방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실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② 처는 오로지 가사에 전념하고 남편만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남편만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14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1, 146면; 김덕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고시계』 통권 430호(1992. 12.), 144~145면; 吉良實, 『所得課税法の論点』, 中央經濟史, 1984, 190~191面.

147) 吉良實, 1984, 앞의 책, 190~191面.

왜냐하면 처의 가사노동이 있음으로 인하여 남편의 노동력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남편이 얻은 소득은 부부의 공동노동의 성과로서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5) 결혼에 대한 중립성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문으로서, 혼인당사자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에 대한 자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이다. 즉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가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⁸⁾

그런데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소득세제는 결혼에 대하여 중립성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산비분할주의는 두 사람의 소득의 합산으로 그 금액이 커짐으로써 누진세하에서 결혼에 대한 제재(marriage penalties) 또는 결혼세(marriage tax)로 작용하며, 합산분할주의는 두 사람의 소득이 균분되는 효과를 내어 종래 소득금액이 큰 개인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므로 결혼에 대한 은전 또는 보너스(gifts or bonuses)로서 기능하게 된다.¹⁴⁹⁾ 이와 같이 소비단위주의를 채용할 경우에는 결혼의 유무가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세제가 결혼에 대하여 억제적(합산비분할주의)이거나 촉진적(합산분할주의)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⁵⁰⁾

148) IFS, 1978, 앞의 책, p. 377.

149) Boris I. Bittker,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Vol. 4, 2nd edition(Warren, Gorham & Lamont, 1981), p. 111-50.

150) 稅務經理協會編, 『稅制の抜本改革』, 稅制調査會 第2・第3特別部會中間報告, 稅務經理協會, 1986, 30面.

6)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

근래에 이르러 기혼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점차 처가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단위주의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 관한 한 개인 단위주의가 우월하다.

3. 성 평등과 과세단위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제의 이념 중 성 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억제하지 않는 과세단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결혼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소비 단위주의 중 합산비분할주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우선 배격되고, 결혼에 대한 중립성 때문에 소비단위주의인 합산분할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선호되게 된다.

그렇지만 과세단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함께 고려하면 개인단위과세라는 결론이 바로 내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i) 누진세하에서, 즉 수직적 공평을 이루면서 ii) 가구(사람들의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와 가구사이에 수평적 공평을 이루고 iii) 혼인의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곧 세제가 혼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의 세 가지의 동시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⁵¹⁾

151) 예를 들어 수평적 공평이 이루어지려면 ① 한 해에 2천만원을 버는 여자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남자(편의상 “0”원이라 하자)로 이루어진 부부와, ② 각각 1천만원을 버는 부부가 같은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한편, 혼인의 중립성이라는 가정에 의하여 ①의 부부가 내는 세금은 한 해에 2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과 한 해 0원을 버는 남자가 내는 세金的 합과 같아야 하고, ②의 부부가 내는 세금은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남자와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金的 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해 0원을 버는 남자가 내는 세금은 0원이다. 그렇다면 한 해에 2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은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남자

그런데 누진세는 지금까지 소득세의 역사에서 생겨난 이념이고 오늘날 국민의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념이다. 부부 또는 가족 단위로 같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가치이다. 국가가 사람들이 혼인을 하든 말든 이혼을 하든 말든 거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수긍할만하다.

결국,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유지하고 어느 것을 희생할 것인가?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나라마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누진세 제도를 없애버리기는 어렵다. 소득세를, 국가가 납세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직접세라는 비싼 제도로 운용하는 이유가 바로 누진율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혼인의 중립성과 가족 단위의 공평 가운데 어느 하나를 희생하게 된다.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독일법은 한 때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을 합산과세하여 세 부담이 혼인 전보다 높은 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 선언한 바 있다.¹⁵²⁾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고¹⁵³⁾ 미국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이른바

가 내는 세금과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의 합과 같아야 한다. 결국 무슨 말인가? 비례세율이 된다는 말이다. 결국 누진세, 생활을 같이하는 부부나 가족 사이의 평등, 혼인의 중립성, 이 세 가지의 동시 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1, 229-232면.

152) BVerfG 1957.1.17 BGBl 1957 I, S. 186.

153) 먼저 最高裁 昭和 36. 9. 6 昭和 34년(オ) 제 1193호로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처의 내조의 공을 인정함이 없이 전액 남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민법 제 762조 제 1항(부부별산제)이 헌법 제 24조에 위반하고, 따라서 위의 민법규정에 기초를 둔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부부간에 실질상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내지 부양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 762조 제 1항은 헌법 제 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법도 헌법 제 24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清永敬次, “夫婦合算果税,” 『憲法判例百選 II』, 別冊ジコリスト No.69, 有斐閣, 1980. May, 340面 參照.

또 最高裁 昭和 55.11.20., 昭和 53(行ツ)제 55호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이 형법 제 13조·제 14조·제 29조·제 30조 및 제 84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헌법상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하는 바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소론은 결국 특정의 법률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세액계산규정에 관한 입법정책상의 적부를 다루는 것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

marriage penalty를 합헌이라 판단하였다.¹⁵⁴⁾ 국민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가치판단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법은 납세 의무자를 미혼자, 부부 등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별개의 세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율로 과세하므로, 결국 합산과세하는 셈이 된다. 최종결과만 보자면, 혼인의 중립성과 가족 간의 공평, 두 가지를 모두 깨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 보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marriage penalty를 없애는 세제를 들여오자는 주장을 거듭 내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공화당 집권 하의 현행법은 marriage penalty를 없애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결국 2002년 6월 혼인에 대한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가 마련된 참이다.

한편 1957년 이후의 독일 세법은 결혼한 부부에게 선택권을 주어, 가)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결혼에 관계없이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나) 부부의 소득을 합한 뒤 이를 둘로 쪼개어 각자의 세금을 계산(합산분할주의, 2분2승제)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한 방식을 고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처럼 소득을 쪼갤 수 있다면, 결혼을 통하여 세금을 오히려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런 세제는 혼인을 장려하는 셈이 된다. 프랑스는 소득을 부부에게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머릿수에 넣어 쪼개어 아이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들므로 혼인의 장려를 넘어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의 경우에도 종래 부부합산과세를 하다가 이제는 개인과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에서는 수직적 공평과 혼인의 중립성은 달성되지만 가구간의 수평적 공평은 달성되지 않으며, 아울러 부부재산제의 실질과 조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三木義一, “資産所得合算課税制度の合憲性,” 『租税判例百選(第2版)』, 別冊ジコリストNo.79, 有斐閣, 1983. May, 40面 참조.

154) *Drucker v. COmr.*, 697 F.2d 496 (2nd Cir. 1982), cert. denied 461 U.S. 957.

4. 한국 소득세제와 과세단위

1) 개인단위 원칙과 예외

우리나라는 개개인을 과세단위로 삼는다. 따라서 한 해에 1,000만원을 버는 여자와 한해에 4,000만원을 버는 남자가 결혼한다 하여, 세금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구별로 비교했을 때는, 이와 같은 부부가 내는 세금과, 같은 5000만원이지만 남자가 2,500만원 여자가 2,500만원을 버는 집이 내는 세금을 비교한다면 양자는 서로 다르다. 누진율 때문에 전자가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우리의 개인과세단위에는 예외가 있었으니, 1974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공동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가계단위로,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조치로써 한 가족의 자산소득은 모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 이후 자산소득 부부합산제도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1978년 개정시에는,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은 단순히 명의에 따라 그 소득자를 달리하여 누진과세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는 다른 사람의 자산소득에 대하여서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즉, 주된 소득자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움으로써 자산합산과세의 실효를 거두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소득세법의 전면개정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면서 부부단위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했고,¹⁵⁵⁾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단위를 종래의 세대단위에서 부부단위로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뒤의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2002.8.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어 2002년 12월 18일 다시 개인단위주의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었다.

2) 종래의 자산소득 부부합산제도의 내용

종래의 부부자산 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61조). 이때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로 간주되어 그의 소득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단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한 것은, ① 자산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② 자산의 명의를 위장분산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155)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금융소득이 4,500만원이고 부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500만원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5%라고 한다면 8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또 금융소득금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이란, 당연분리과세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인 경우이다. 즉 부부의 당연분리과세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금융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당연분리과세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하는 것이었다.

가) 대상 및 주된 소득자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구 소득세법 제61조 1항)이며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대상이 될 수 없다.

주된 소득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판정한다(구 소득세법 제61조 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 120조).

- ①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②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 ③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단,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않을 때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함.

그리고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봤고(소득세기본통칙 61-3),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았다(소득세기본통칙 61-1).

나) 세액계산 방식

합산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구 소득세법 제61조 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 121조).

종합소득금액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포함
- 세액공제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관련된 세액감면 포함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관련된 가산세 포함
= 총결정액	
- 기납부 세액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관련된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포함
= 차감납부할 세액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했다(구 소득세법 제 61조 3항).

그리고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했다(구 소득세법 제 2조 3항).

다) 합산과세 소득공제의 합리화

다만 2001년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소득세법 제5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01조) 자산소득(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합산과세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합산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합산소득에서 지출하는 공제대상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즉 종래 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②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③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배우자,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합산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했는데(단, 기부금 소득공제만 허용) 자산소득 등의 합산과세의 경우 배우자,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합산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도 : 합산소득금액 이내)한 것이다.

3) 종래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문제점 및 위헌결정

위와 같은 종래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 11조 또는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36조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부부는 다시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받게 됐다.

가) 자산소득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의 문제점

기존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첫째,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는 자산소득이 있는 부부에 대하여 결혼 전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 36조 제 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인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결혼을 억지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소득, 예를 들면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등과는 달리 자산소득만을 부부단위로 단순히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 61조는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었다. 즉 일방 배우자의 고유재산에서 가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방 배우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산소득을 다른 소득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특히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고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명백하게 소득세의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까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 61조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¹⁵⁶⁾

넷째,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소득 귀속에 관한 실질과 세원칙에 대한 예외였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하에서 실제 소득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⁷⁾¹⁵⁸⁾

또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증여의제규정, 명의신탁의 금지와 처벌규정¹⁵⁹⁾을 적용하거나 질문조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일적으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2002.8.29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

결국 2002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부자산합산과세조항인 구 소득세법 61조가 위헌이라는 판결¹⁶⁰⁾을 내렸다. 부부 모두에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자산소득이 있더라도,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머니 돈이 째지돈’이라는 조세당국의 논리를 사법부는 혼인부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156) 한국조세연구소,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65면.

157)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소득세법상 명의자 과세, 무기명 공채 등의 이자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자의 소득 귀속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상에는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이 있다.

158) 노영훈,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재정포럼』 2002년 11월호, 33면.

15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참조.

160) 2002. 8. 29. 2001 헌바82결정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소

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이 조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의 나머지 조항들인 제2항 내지 제4항도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내렸다.

위와 같이,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해 2002.8.29 헌법재판소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율성과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개인단위로 복귀하게 되었다.

<표 3-1>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규정의 개정 전후

소득세법 개정전	소득세법 개정(2002.12.18) 후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p> <p>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p> <p>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p> <p>제61조(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p> <p>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p> <p>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p> <p>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p> <p>④ 제 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 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p> <p>③----- -----.</p> <p>4.-----거주자의 당해소득금액-----</p> <p>제61조 <삭제></p>

따라서 이제는 민법상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와 조응하여 세제 문제도 각각 처리하게 됐지만 민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부부재산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민법상으로는 비록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형성의 공동성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행해지고 있으며, 소득세법상으로도 여전히 3개이하의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의 경우 부부 각각이 가진 주택을 합산(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¹⁶¹⁾하고 있는 등 부부자산합산과세제도의 흔적은 남아 있다.¹⁶²⁾

16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5.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6.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登記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밑줄은 필자).

162) 동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임대소득세는 부부 각각이 내면서 임대소득세 비과세기준인 3개이하주택인지 여부의 계산에서는 부부 각각의 보유주택을 합산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4) 가족조합에 대한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됐지만, 개인단위주의 예외로서 가족조합에 대한 합산과세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

즉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동법 제43조 제3항, 1996.12.30 개정)¹⁶³⁾ 소비단위로 합산과세하게 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¹⁶⁴⁾ 제1항에 따르면 그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16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6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

자는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족조합소득에 대하여 소비단위주의를 적용하는 가족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즉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을 다 포함시킴으로써 성년인 직계비속과 孫인 직계비속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의 경제생활과 달리 소비단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고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II. 과세소득 범위

1. 과세소득의 개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란 소득 중에서 실정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물건으로 규율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소득의 개념을 어떤 입장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대립되어 왔다.

F. Neumann과 B. Fuisting 등에 의해 주창된 소득원천설(Quellentheorie)은 소득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파악한 학설로서, 소득을 노동·사업 또는 재산과 같은 특정 원천으로부터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수입으로 정의한다.

그에 비해 G. V. Schanz, R. M. Haig, H. C. Simons 등에 의해 주창된 순자산증가설(Reinvermaegenszugangstheorie)은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천을 달리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이 그 형태나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소득을 구

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 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성한다.

현행 우리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과 포괄적 소득개념을 절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과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소득을 포괄주의방식에 의해 정의하느냐 아니면 열거주의방식에 의해 규율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방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물건을 규율하고 있지만 과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 경우 포괄주의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소득원천 내지 종류별로 차등과세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채택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내국세법 제61조(a)¹⁶⁵⁾ 및 우리의 구 법인세법¹⁶⁶⁾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과세소득을 우선 특정한 소득의 발생원천 내지 종류별로 나누어 열거하고 특정한 소득의 발생원천 내지 종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하자의 所得群으로 포괄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소득세법이 이에 해당한다.

2. 가사노동과 소득세

과세소득 범위가 확정되어야 과세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범위를 잡는 데 있어 귀속소득을 포함시킬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귀속소득(imputed income)이란 자기소유주택의 귀속임대료·가사노동·농가에서의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의 소비·여가 등, 시장거래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되어 소비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 재산의 사용·자기가 생산한 재화의 소비나 자신의 노동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 또는 만족을 가리킨다.

포괄적 소득개념에 의할 때 귀속소득도 과세소득을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

165) “총소득은 원천에 관계없이 다음에 계기하는 항목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16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동법 제9조).

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행정상 또는 납세순응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귀속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가정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그 귀속가득액(imputed earnings)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음의 이유¹⁶⁷⁾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첫째, 가사노동에 따른 귀속가득액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

둘째,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비화폐소득인 귀속가득액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이처럼, 가사노동의 가치를 소득세제상 고려하지 않으므로, 가사활동에 투입된 경비 및 상품으로 구입한 가사경비 등은 필요비로도 묶이지 않는다.¹⁶⁸⁾ 즉 소득세법상 세금이나 과태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필요비로 보지 않는데, 가사경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167) 한국조세연구소,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40면.

168)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부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밑줄은 필자)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3. 소득세 비과세대상과 성 평등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의 필요 때문에 특정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상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소득세법 제12조¹⁶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자소득, 배

169)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해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보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차.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

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비과세소득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비과세근로소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제20조¹⁷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¹⁷¹⁾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

-
-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너. 대통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 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170)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중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중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협의의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할 때에는 전자를 가리키나, 후자도 실질적으로 비과세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통상 비과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세소득이라고 할 때에는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비과세소득의 범주 및 그 포괄방식이 여성의 삶을 고려하고 양성 평등하도록 잘 짜여져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 순서에 따라 지적할 만한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3주택과 부부주택수 합산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3개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이 가진 주택은 합산(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실질적인 공동생활단위라는 점에 입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래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하고 있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부부를 묶어서 본 것으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2) 실업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비과세와 여성복지수준 진작

소득세법은 2001년말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등을 비과세로 하였다.

2000년 현재 반환일시금은 수급자의 43.5%,¹⁷²⁾ 사망일시금은 수급자의 29.9%가 여성¹⁷³⁾으로서 여성수급자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는 여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3) 유족연금 비과세와 여성복지수준 진작

그런가 하면 2001년말 소득세법 개정시에는, 종래 유족연금은 과세, 장애

172) 박영란·황정임·김진경(2002),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18면.

173) 박영란·황정임·김진경, 2002, 위의 책, 120면.

연금은 비과세함으로써 장애연금과 장애연금에서 승계된 유족연금과의 형평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족연금(유족보상금 포함)도 유가족의 생계보조차원에서 비과세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를 배제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및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등은 다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4의3호 가,나목).¹⁷⁴⁾

이러한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는 장애연금과의 형평성문제의 해결도 가져왔지만 여성의 경우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피부양자로서 유족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실생활을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 국민연금 가입종별·성별 가입현황(2002년 9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16,390,464	100.0	6,225,730	9,974,818	27,768	162,148
남 자	11,111,482	67.8	4,354,643	6,659,765	4,521	92,553
여 자	5,278,982	32.2	1,871,087	3,315,053	23,247	69,59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

예컨대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9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은 32.2%로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2000년 현재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92.2%가 여성이고 전체 수급액의 94.6%를 여성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⁵⁾

174) 이처럼,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병연금 등은 비과세하는 데 비해 노령연금은 과세를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가 이혼한 후 60세가 되거나 60세 이후 이혼한 경우 지급되는 배우자분할연금 역시 노령연금의 일종이므로 세금이 부과된다.

4) 양도소득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 그리고 여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 농지의 代土,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법 제89조¹⁷⁵⁾), 벤처기업주식(조세특례제한법 14조 1항, 54조 3항, 55조 4항)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등기양도가 아닌 한(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 중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¹⁷⁷⁾

175) 박영란·황정임·김진경, 2002, 위의 책, 110면.

176)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77)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가) 1세대의 개념과 미혼모세대의 배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전원을 말한다. 또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납세의무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②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③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납세의무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¹⁷⁸⁾

따라서 이를 엄격히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없는 30세미만의 미혼모(또는 미혼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나) 공동상속주택의 남성 소유자 간주

현재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은 어느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1주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유자의 결정은 최대상속지분자→당해 주택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의할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최대상속지분자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고,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만 상속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미결혼 필자)

178) 이준규, 『소득세법』, 경영과 회계, 2002, 375면.

당해 주택 거주자가, 주택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의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취급된다.

그런데 호주승계인의 경우 민법상 남성이 여성보다 호주승계에 있어 우위에 있으므로¹⁷⁹⁾ 결국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이지만 남성이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는 당해 남성은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다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 보유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남성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은 단순히 보자면 여성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는 것으로서 여성에게 이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는 호주승계인, 즉 남성이라는 관념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성 평등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다) 동거봉양 직계존속 남녀연령 차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병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후 2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함)에 대해서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을 규정함에 있어 남성은 60세이상인데 비해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볼 부양가족공제

179) 민법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노동연한을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성 평등의 관점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 공동소유주택과 부부재산공동명의에의 부정적 영향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모두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어느 한 주택을 공동소유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다면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그 일방배우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근래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부부재산공동명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예컨대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던 아내가 혼인후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기여하여 마련한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당해 여성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같은 상황의 여성이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마련한 주택을 남편명의로 할 경우에는 부부는 각각 1채씩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공유자 각각의 소유 간주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부부의 경우 과세단위를 선택하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공제제도

1. 공제제도의 의의 및 내용

1) 공제제도의 의의와 역할

소득세가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실질소득수준과 객관적 생활조건에 상

응하는 적절한 면세점과 부담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공제제도이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당해 납세자의 최저생활비를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인,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¹⁸⁰⁾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수급자의 구직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제도가 가장 발달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TANF/CalWORK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달 근로소득 중 225달러는 벌어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이러한 공제혜택으로 수급자는 직접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 국가로부터 급여만을 받을 때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었다.¹⁸¹⁾

그렇지만, 당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양을 꾀한다는 의미로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은 당해 납세자의 근로활동을 고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반면, 배우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180) TANF는 1996년 8월 클린턴 행정부가 근로기회조정법(PRWORA: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면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ant Children)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이다.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수급기간을 제한(5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만 하게 하고, 각 주 정부에게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복지수급자의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필요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마련한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지침에는 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근로참여비율을 확대할 목적으로 매년 달성해야 할 참여수준을 책정하고 있는데, 1997년 이후 매년 5%씩 증가시켜 2002년까지 수혜가구의 50%가 근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만일 주에서 이러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규모를 줄일 수 있다. 김재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재정포럼』 2002년 6월호, 32-33면.

181) 김재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재정포럼』 2002년 6월호, 33면.

2) 우리 소득세법상 공제제도

우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공제,¹⁸²⁾ 연금소득공제,¹⁸³⁾ 퇴직소득공제,¹⁸⁴⁾ 산

- 182)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천500만원 이하	
1천500만원 초과	9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천17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이하	
4천500만원 초과	1천32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자가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 183)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 184)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	-------

립소득공제¹⁸⁵⁾에 대해 각각 규정하는 한편, 종합소득공제도 규정하고 있다.

또 종합소득공제는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¹⁸⁶⁾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등으로 나뉜다.

5연이하	30만원×근속연수
5연초과 10연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연)
10연초과 20연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연)
20연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연)

②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85) 소득세법 제49조 (산립소득공제) ①산립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년 600만원(이하 “산립소득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연도의 산립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립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86)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의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본조신설 2000.12.29]

<표 3-3> 종합소득공제의 구분

종합소득공제		공제가능한 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제외)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특별공제	실비공제시(기부금공제 제외) 기부금공제 표준공제시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및 연금저축소득공제 정치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자료: 이준규(2002), 『소득세법』, 경영과 회계, 243면.

한편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도 행해진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즉 산출세액 자체에서 공제를 가하는 것이다.¹⁸⁷⁾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적 공제

187) 참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삭제<1998.12.28>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emptions, Private Abzge)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등에 근거해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 과세단위간의 상이한 인적 구성에 상응하는 공평한 소득세의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족구성이 다른 과세단위간의 세부담은 인적 공제와 함께 복수세율표에 의하여 조정되는데, 우리는 단일세율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공제라는 수단만 사용된다.

인적 공제에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소수공제자추가공제¹⁸⁸⁾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인적 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우리 소득세제상의 공제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성 평등의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기본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기본공제의 내용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자신의 몫으로,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몫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 몫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동법 제50조)¹⁸⁹⁾(<표 3-4>).

188) 소득세법 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89)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표 3-4> 기본공제의 내용

공제대상가족		공 제 요 건	
		연령(장애인은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요건
본 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 우 자		제한없음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또 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여자 55세) 이상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여자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제한없음	

가)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당해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종합소득 금액 계산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가족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적공제 적용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당해연도 과세표준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사업소득 연말정산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대상자로 한다. 다만, 6세이하인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50만원)는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 (2) 2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신고한 때,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한다.
 - 공제대상배우자와 공제대상부양가족의 경합시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경합시 → 직전연도 공제대상부양 가족으로 한다. 단,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당해 연도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 추가공제대상자의 경합시 → 위에 따라 기본공제하는 자가 공제한다.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 부부의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당해 미성년자는 부모의 혼인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소득46011-1245, 1999.04.02).

2) 기본공제의 문제점

가) 배우자공제: 혼인의 중립성 위배, 배우자의 경제활동 저해

납세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의 공제가 주어진다. 여기서의 배우자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배우자공제는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가 당해 배우자가 부양한다는 전제하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서 배우자부양을 위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배우자공제는 기혼자와 미혼자와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액은 1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 부양의 효과는 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는 배우자로 하여금 주된 소득자의 지원에 전념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지원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가사업무 등 그들의 지원활동의 비중을 생각하면 100만원의 배우자공제라는 적은 비용으로서 남녀의 성별분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남성의 근로자로서의 지원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은 여타의 공제를 거친 후의 수준을 말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연소득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의 혜택을 입는 반면 800만원을 상회하면 그렇지 못함으로써 임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의욕은 감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표 3-5>에서 보듯이 1994년과 1995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배우자공제를 받은 인원은 각각 967,633명(522,522백만원), 1,054,947명(569,671백만원)인데, 이는 당해 연도에 기초공제를 받은 인원(1994년 1,266,489명, 1995년 1,356,606명)의 대부분(1994년 76.4%, 1995년 77.8%)이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서 당해 납세자의 배우자가 공제금액 이하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현황(1994~2000)
(단위: 명, 백만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4,108,710	2,344,710	4,807,591	2,720,604	6,725,900	5,924,382	6,970,576	6,222,429	7,059,938	6,201,706	7,973,048	7,012,155
인적공제계	4,025,946	2,296,543	4,673,780	2,634,780	4,962,113	4,752,775	5,350,637	5,117,064	5,250,580	4,981,476	5,767,187	5,426,625
기초공제	1,266,489	911,872	1,356,606	976,756	-	-	-	-	-	-	-	-
배우자공제	967,633	522,522	1,054,947	569,671	-	-	-	-	-	-	-	-
부양가족공제	1,529,338	734,082	1,942,575	935,436	-	-	-	-	-	-	-	-
장애자공제	17,398	9,395	22,081	11,924	-	-	-	-	-	-	-	-
경로우대공제	227,917	109,400	278,257	133,563	-	-	-	-	-	-	-	-
부녀자세대주공제	17,171	9,272	19,314	10,430	-	-	-	-	-	-	-	-
기본공제	-	-	-	-	4,532,563	4,532,563	4,868,784	4,868,784	4,696,609	4,696,613	5,067,908	5,067,913
추가공제	-	-	-	-	394,582	197,291	437,290	218,645	508,686	254,345	651,292	325,646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	-	-	34,968	22,921	44,563	29,635	45,285	30,518	47,987	33,066
기부금특별공제	25,345	21,105	32,478	27,798	-	-	-	-	-	-	-	-
특별공제	-	-	-	-	108,623	221,073	210,914	259,623	227,183	274,585	232,097	326,225
표준공제	-	-	-	-	1,449,592	869,755	1,291,058	774,624	1,454,288	872,560	1,609,968	965,996
조감법상 소득공제	57,419	27,062	101,333	58,026	133,572	80,779	117,967	71,118	127,887	73,085	363,796	293,3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부양가족공제와 남녀연령차별

원칙적으로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씩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성의 경우는 55세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남녀의 나이에 5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이러한 부양가족공제는 여성의 체력이 남성에 비해 약하므로 여성의 일할 수 있는 연령을 55세까지 본 데 따른 것인데,¹⁹⁰⁾ 예전에는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남녀간에 정년차이를 두는 것은 고용불평 등¹⁹¹⁾으로서 위법하게 된 오늘날에는 더는 그 정당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조기 퇴직 등 그간의 성별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3. 추가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추가공제의 내용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외에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데,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자녀양육비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대상 인원수에 50만원(경로우대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51조)¹⁹²⁾(<표 3-6>).

190) 최광, 앞의 책, 1994, 119-120면.

191)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92)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65세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표 3-6> 추가공제의 내용

추가공제의 구분	공제조건	공제액 (1인당)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100만원
부녀자공제	①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①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소득자 ②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소득자	50만원

즉 우선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역시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이 추가공제에는 여성만이 받는 것도 있는데, 배우자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세대주에 및 맞벌이여성에게 주어지는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그것이다. 또한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소득자는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그렇지만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남성근로소득자가 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2) 추가공제의 문제점

가) 여성세대주 추가공제

배우자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근로소득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이는 여성가구주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남자인 세대주는 비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
- 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삭제 <1996.8.14>
④삭제 <1996.8.14>.

불 때 조세법상 여성의 우대이며,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온정적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시혜라고 할 수 있다.¹⁹³⁾

나) 맞벌이여성 추가공제

그런가 하면 맞벌이남성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추가공제를 받지 않는데 맞벌이여성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이 맞벌이여성추가공제는 1992년 12월에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없다면 여성의 경우 연간소득이 배우자공제액보다 많으면 남편의 소득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득도 배우자공제보다 많기 때문에 맞벌이 여성배우자는 남편을 배우자로 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맞벌이부부공제는 여성에게만 그 공제를 허용하여 여성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고 기혼여성의 근로를 유도하는 의미는 있지만, 역시 성 평등에는 어긋난다.¹⁹⁴⁾

다) 여성위주의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소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없이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남성근로소득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 역시 기본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서, 자녀양육은 이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가 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성 평등원칙과는 위배된다고 하겠다.

193) 최광, 앞의 책, 1994, 119면.

194) 최광, 앞의 책, 1994, 119면.

4. 특별공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특별공제의 내용

그밖에, <부록 1>에서 보듯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특별공제가 행해지며, 근로자가 이상의 특별공제를 모두 합해도 60만원 미만일 경우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가 행해진다.

또한 예규(법인46013-150,2000.01.15)에 따르면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방법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기본공제(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지출액을 공제요건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액은 각자의 소득에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다른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맞벌이 부부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당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특별공제의 문제점

특별공제 중 성 평등과 관련해서 문제될 만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주택자금특별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주택자금공제가 특별공제로서 행해지는데(소득세법 제52조 2항, 3항), 그 공제자격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 다만,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나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

족이 없어도 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5항).

즉 이는 세대주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공제혜택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실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는 남성이 되므로 여성의 재산권획득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기부금특별공제와 여성복지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의 경우 전액이 소득공제되는데, 여성인권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적정한 범위로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지도 문제이다.

이를 보면, 2000년 10월 23일의 소득세법 개정 이후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여성복지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여성인권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¹⁹⁵⁾.

195)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장애인생활시설
 -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은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동 시설¹⁹⁶⁾ 역시 중요한 인권관련시설이며, 더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강조는 필자)

19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당해 법률상의 활동을 윤락행위등방지법이나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한 시설과 함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나 청소년재활센터가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을 전액공제받는 시설에는 청소년보호센터나 청소년재활센터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참조: 이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16.17조.

제15조 (보호처분)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제17조 (상담시설) ①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

육이 명시적으로는 여성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주로 그 대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 제외

근로소득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또는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부금은 오직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하고 있는 것도 여성의 사회활동과 관련해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들의 사회단체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¹⁹⁷⁾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V. 부부재산관계와 세제

소득세법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간 재산이동이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그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97) 그 때문에 회비는 자신의 이름으로 냈지만 연말 영수증은 소득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발급받는 일도 더러 있다고 한다. 사례는 <한겨레> 2002.12.30일자 26면 참조.

1. 혼인중 부부간의 소득·재산문제와 과세

1) 혼인중 배우자간 재산이동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유상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¹⁹⁸⁾인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이다. 양도소득은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따라서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대신 무상양도받는 자에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198)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게 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유상양도에는 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우자간의 재산이동도 양도세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로 인한 공유지분변경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공유지분 변경없는 공유물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신탁해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지분 변경 등도 유상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¹⁹⁹⁾ 그렇다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간에 기존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중 상대방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지분 변경없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배우자간의 부동산이나 주식의 이전은 뒤에서 보듯이 아예 무상양도, 즉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며 증여세 공제금액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2) 혼인중 부부간 재산이전과 증여세

부부가 혼인중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아예 공동명의로 혹은 소득은 없지만 가사노동으로 재산획득에 기여한 쪽의 명의로 하고자 한다면 어떨까? 이는 당해 재산의 생성 원천을 정확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실명제 하에서도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²⁰⁰⁾ 그러나 이 역시 세제상의 문제로 난점이 있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

199) 이준규, 2002, 앞의 책, 368면.

200) 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되지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조 1항) 배우자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동법 8조). 다만 그 경우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세제상의 조사는 받게 될 수 있다.

아 일정 가액 이상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받기(동법 45조, 동법시행령 34조)²⁰¹⁾ 때문에 자신의 금전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명의를 확보하는 것은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혼인중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가 행해진다.

더욱이 부부자산합산과세제도가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부부자산합산과세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고 자산소득의 인

201) 소득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1998.12.31>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적인 분산을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증여세 배우자공제수준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증여세법개정법률도 통과되었다.

즉 상속세법증여세법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2002년 9월 28일 회부되어, 동년 10월 30일 수정가결되었다. 동 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른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축소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 회피를 위한 자산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견해를 피력하였고, 결국 동 개정안은 2002년 11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수정가결되었고 200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²⁰²⁾²⁰³⁾

위와 같은 부부간의 자산이전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세제상 고려의 빈약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나아가 그 배우자 증여세공제수준을 소득의 인위적 분산이라는 명목하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나아가 그 수준을 하향한 것은 그나마 간접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여성의 기여도를 평가절하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 소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3) 다만 동 개정법률안 제19조에서는 배우자공제한도의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였으나 이 경우 증여시 공제하였던 증여재산공제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수정하는 한편 우리의 상속관행상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 분할등기등을 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부간에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 소유권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

1) 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런데 종래 상속세법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의 형평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1990.12.31.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배우자가 재산상속에서 공제받는 인적공제액을 초과하여 분할취득하는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었고, 이에 따라 이혼시 여성들은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위자료를 선호했다.²⁰⁴⁾

그렇지만 다행히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해 위헌선언했고, 이후 부부사이에 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재산분할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또한 재산분할은 비록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 자체가 자신의 몫을 이혼시 찾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로 해석하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4) 1991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이뤄진 총 27,697건의 이혼소송사건 가운데 위자료청구소송이 1,630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284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61건으로 집계되어 위자료 청구에 비해 재산분할청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여성에게 아직은 개정가족법의 내용이 널리 홍보되지 못한 점, 재산분할 액수가 많을수록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추정된다.

판례도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한다.²⁰⁵⁾

우리 국세청 역시 예규로써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다(제도46014-12608, 2001.08.08).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도 유상양도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²⁰⁶⁾

205) 대판 1998.2.13 96누14401판결(공보 98.3.15, 797면).

206) 다음의 예규 참조

(제도46014-12608, 2001.08.08) : 부인 김○○와 남편 정○○는 이혼을 하고, 남편명의의 소유부동산을 1/2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따라 부인 김○○는 결혼 후 취득한 남편 정○○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 받으려고 등기부 열람한 바, 남편 정○○는 부인 모르게 부동산을 시가(기준시가 : 7억8천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4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부당함을 법원에 소송제기하여 부동산을 환원받은 바 있음. 환원(분할)의 조건은 부인 김○○는 남편 정○○이 동 물건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4억원을 남편대신에 갖고, 별도로 9천만원을 남편 정○○에게 지불하는 대신에 부동산은 전체를 부인 김○○의 소유로 하는 것이었음. 단 부부의 소유재산은 당 부동산 뿐임.

(재산46014-579, 2000.05.13) 문: 본인은 98. 8. 22 이혼한 자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 남편으로부터 문제의 단독주택을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하는 경우에
 - 양도소득세를 남편에게만 부과하는지?
 - 1가구 2주택자였던 본인에게도 공동부과되는지?
- 남편명의인 단독주택을 남편협조로 본인이 팔아서 그 대금을 본인이 수령한다면,
 - 양도소득세가 남편에게만 부과되는지?
 - 1가구 2주택이었던 본인에게도 공동부과 되는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남편의 소유 위의 단독주택을 본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면서 등기이전 원인을,
 - 1998. 7. 29자 법원의 결정인 화해조서 내용과 같이 재산분할로 하는 경우에, 이혼신고 처리후 20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타인간의 증여로서 본인이 증여세

3) 재산분할과 취득세·등록세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공유물 분할이므로 취득세 역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지방세법 110조)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실무상으로는 2%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또한 등록세도 공유물의 분할로서 0.3%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실무상으로는 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지방세법 131조 1항)이다.²⁰⁷⁾

따라서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이와 같은 조세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이혼 위자료와 과세

이혼위자료 역시 손해배상 및 보상금액의 지불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상속세법 기본통칙 86 29-2) 증여

부과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

- 또한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

답: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혼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3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46014-192 생산일자 : 2001-02-26) 문: 저는 국내에 13년간 보유한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가지 채무관계로 처와 이혼한 뒤 2000.8월 처에게 동 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줄곧 동 주택에서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날부터 3년이 안된 지금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 둘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07) 이찬진(1999), “부부재산제도 관련 법 개정방향”, 여성의전화연합내부자료.

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판례는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그 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²⁰⁸⁾ 이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위자료지급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여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4. 배우자 상속과 과세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제외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동법 19조 3항).

그런데 위와 같은 배우자상속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잔존배우자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몫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하다. 더욱이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시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1세대 1회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1세대 2회 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208) 대법원 89.6.29. 선고 88누10183판결, 동지 84.6.26. 선고 84누153판결; 大判 1993.9.14. 92누18191판결, 공보 955호; 大判 1995.11.24. 95누4599판결, 공보 1008호.

V. 소결: 우리 소득세제의 문제점

앞서 본 소득세법에 대한 분석 결과,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과세단위의 비적절성

앞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비단위주의를 택하다가 최근에 다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부부합산비분할주의는 물론, 개인단위주의도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와 조응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지는 않아서 적절한 과세단위를 모색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과세단위의 선정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실증적인 연구는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의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증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임금수준의 증대는 노동공급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부부합산비분할과세는 세부담의 누진적 증대로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행의 개별과세는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단위주의는 가족 중 제 2차적 노동공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적고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결혼에 대한 중립성 보장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공평성의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의 횡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²⁰⁹⁾

더욱이 소득을 단순히 명의 또는 외관을 기준으로 남편만의 소득으로 보아

209) 김완석, 2000, 앞의 책, 80-82면.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의 개인단위주의는 부부재산제의 실질 및 재산분할 청구제도와 배치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

나아가, 현행 개별과세는 소득을 부부간에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부부의 세부담총액이 달라지고 두 가계가 같은 소득을 얻는 경우라도 결혼 부부의 가계와 성년자가 2명 또는 그 이상이 있는 가계가 세법상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남긴다.

개별과세와 합산과세에 따른 효과분석을 <표 3-7>의 가상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3-7>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하에서 부부소득의 세부담 비교

		결 혼 전		결 혼 후			
		개별소득	개별세 부담	합산소득	개별과세에 따른 세 부담	합산과세에 따른 세 부담	
						단순합산과세	2분2승법
A	남	1000	220	2000	220	540	220
	여	1000	220		220		220
B	남	1700	450	2000	450	540	220
	여	300	30		30		220

주 : 적용한계세율 400만원 이하 10%, 400만원 초과 30%

자료: 최광(1990), “여성과 세법 개정”, p.8에서 인용

위의 모형을 보면 개별과세는 결혼을 전후하여 세부담에 변화가 없으며 여성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을 부부간에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세부담 총액이 달라져서 A와 B의 경우 2000만원이라는 소득을 얻었음에도 세부담액은 440만원과 480만원으로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합산과세제도에서는 A, B 부부 모두 540만원으로 같은 소득의 부부가 같은 세부담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가정 모두 결혼 후에 결혼전보다 세부담이 증대하게 된다. 더구나 누진소득세제하에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얻는 아내의 소득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응능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세단위는 세대단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합산의 경우에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결혼이 전보다도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개별과세는 각 가계의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부인의 직업노동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일정비율을 특별히 공제하는 제도 또는 부부소득의 이분이승법(Splitting System) 등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어 왔다. 특히 이분이승법은 부부는 소득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각각의 소득의 1/2을 자기소득으로 하고 (2분) 그것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2승)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써 많은 나라에서 세제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²¹⁰⁾

다만 이분이승제 역시, 위의 모델 B부부와 같이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일방에 대해서는 혼인에 대한 억제로,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혼인에 대한 혜택을 작용하고 그 전체로는 혼인전에 비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혼인에 대한 중립성은 확고하게 지켜내지는 못한다.

결국 어느 과세단위도 단점이 있는 만큼, 그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중요하게 취급할 것인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성맹적(gender-blind)인 비과세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12조가 제시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1년 11월부터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들이 시행됨으로써 산전후휴가가 종래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고,²¹¹⁾ 그 비용의 사회

210) 정승은,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본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50-52면.

211)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분담화도 실현됨으로써 60일간은 직장에서, 추가된 30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고용보험에서 이를 부담하게 되었다.²¹²⁾ 또 종래 무급이었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씩의 급여가 지급되게 되었다.²¹³⁾

21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지급기간 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8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213)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①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그에 따라 소득세법도 2001년말 개정에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제4항).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인 환급부보장성보험(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의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당해 환급금과 함께,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도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렇지만 정작 모성보호급여와 관련한 세제 문제는 아직 명시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예컨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금, 실업급여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장애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급여도 비과세²¹⁴⁾(소득세법 제12조 4호 아목)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추가된 1월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해 모성보호급여가 다른 근로소득이 주어지지 않는 기간의 것이고 더구나 모성 건강 및 육아비용보전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성질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준해야 할 것인데 이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고려 미약

상당한 여건에 처한 가정을 세법상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부부 중 한 사람-현실적으로는 주로 여성-이 가사노동만을 하는 가정과 부부 모두 직장노동을 하는 가정의 세 부담 형평문제이다.

남편만 일하는 경우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일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두 가족 모두 같은 소득을 얻어 부부합산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같은 세금을 납

-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과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 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 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부하더라도 두 가정의 복지나 효용수준이 다르게 된다. 이는 한 사람이 가사를 통하여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소득이 같아 같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아내가 직장을 갖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에 실질소득에 차이가 생긴다. 아내가 집에 머무는 경우 집안일을 하여 창출되는 귀속소득(imputed income)²¹⁵⁾은 그 가정의 후생을 증대시키지만 과세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직장을 가진 아내가 일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두 가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일하는 부부에 비해 추가로 교통비, 점심값, 택아비 등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근로자들의 교통비와 점심값 등이 남녀 모두 같거나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노동공급에 수반된 비용은 근로자 한 사람의 경우의 두 배일 것이므로 같은 소득 때문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공평하다.

물론 이러한 추가적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의 소득세제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표준공제제도(standard deduction)를 채택하고 개별공제제도(itemized deduction)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여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근로남성에 대해서도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과세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바람직한 것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택아비 또는 파출부 등의 근로관련비용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이 세부담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직장노동 여성의 근로관련비용 공제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직장노동여성과 가사노동여성을 세법상 어떻게 형평하게 취급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 소득세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가사전업주부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직장노동 참여여성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여성의 의존적·종속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

215) 귀속소득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이용 또는 자기 노동에 따라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가사전업주부가 됨으로 인해 남편의 세부담이 낮추어지고 직장여성은 결혼 후 세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²¹⁶⁾ 가사전업여성과 결혼함으로써 남성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세법상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등에 의해서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직장노동과 관련하여 등장한 조세정책상 정책과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탁아비를 중심으로 한 직장여성의 근로관련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문제, 둘째,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세부담 공평문제, 셋째,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본 과세단위 선정문제 등이다.

그렇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가사노동을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한 증여세공제수준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그나마 간접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가사노동의 가치도 일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경우 부부가 같이 일하는 가족에게 취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가사와 육아비용을 세제상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같이 가사일을 하면서도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부부 사이의 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된다. 따라서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취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가사와 육아비용을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하거나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상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도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즉 여성가장)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즉 소득이 있는 주부)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 5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즉 취업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는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연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하고 있다(소득세법 51조). 그러나 이 정도의 소득공제금액은 현실적인 가사노동의 가치에는 비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평등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다른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216) 1970년 중반의 자료와 제도에 의하면 남성이 가사전업여성과 결혼함으로써 미국의 경우 세부담이 소득기준으로 41% 감소했고, 프랑스, 영국, 독일이 각각 5.1%, 3.1%, 그리고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여성이 결혼함으로써 나타나는 세 부담 증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각기 10.3%, 14.9%, 2.6% 그리고 7.6%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광, “부부재산제와 조세정책”, 정책연구, 1993, 153면.

4. 전형적 남녀관계의 고착

우리나라 현행 세법이 전형적이고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기본원리 및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²¹⁷⁾

첫째, 세법은 1인의 생계부양자와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및 자녀 기타 가족으로 구성되는 특정 형태의 가족을 전형적인 것으로 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고 독신이나 맞벌이 부부로 구성되는 가족 기타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고려는 취약하다.

예컨대 주택자금특별공제의 경우 여전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다른 가족형태 및 가족 구성원과 주로 남성인 세대주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둘째, 기본적으로 여성을 의존적인 피부양자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가사 및 육아를 여성의 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배우자공제, 남녀의 나이에 5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부양가족공제,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녀자추가공제, 기본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전제에 의한 자녀양육비공제전제가 그 예들이다.

그런데 세법상의 이러한 성 평등성 취약은 무엇보다도 가족법의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1989년 12월에 가족법의 상당부분이 남녀평등하게 개정됨에 따라 세법상의 성차별적인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가족법과 세법은 각기 체계와 논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용면에서도 각각 다르지만 법체계 전반에서 상호 관련되어 일관된 논리와 체계를 갖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세법 역시 성 평등의 관점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217) 동지로, 정승은, 1995, 앞의 논문, 33-34면.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외국의 소득세제

I. 소득세 과세단위	133
II. 과세소득 범위의 성 평등성	152
III. 공제제도와 성 평등	160
IV.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각국의 세제	178
V. 소결: 성 평등 관점에서의 각국의 소득세제의 정리 및 시사점	187

I. 소득세 과세단위

1. 각국의 과세단위의 변화

과세단위(tax unit)란 어떤 사람의 과세소득이 계산되는 기준(basis)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과세단위(tax uni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다. 또 이로 인해 혼인의사결정 및 기혼여성노동력 공급 등 경제활동 참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진다.

조세를 부과하는 데는 국가별로 다양한 과세단위들이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에서는 개인, 혼인부부, 또는 가계(families)중 하나를 과세 단위로 삼고 있다. 많은 조세이론가들은 개인(individuals)이야말로 표준적 소득세제(benchmark income tax system)하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단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과세단위의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적·정치적 고려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소득세법, 예를 들어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1799년의 영국세법에서는 미혼개인들과 혼인부부들을 동등한 과세단위로서 취급했었다(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한 부인들이 법적으로 별도의 개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1세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소득세를 채택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소득세법에서도 혼인을 했건 안했건 개인을 과세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미국법원들은 ‘부부공유재산세 채택주(州)들(communitary property states)’은 기혼 개인들에게 조세목적을 위해 그들의 소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고²¹⁸⁾, 미 하원은 결국 조

218) 미연방 내의 각 주들은 각자 그들 나름대로의 재산법 및 가족법을 포함한 개인법(private law)들을 갖고 있다. 부부재산공동주의를 채택한 주들에서는 혼인부부의 소득은 재산법목적상실제소득발생 상황에 관계없이 부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

세목적상 소득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기혼자들에게로 확대하였다. 미국 내에서의 동등분할(equal splitting)은 부부합산소득에 적용되는 ‘특별공동신고’ 세율체계를 채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세율체계를 채택한 것은 기혼부부의 개별 소득이 매우 불평등할 경우 그들 소득을 합산할 때 내는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의 소득이 비교적 비슷하다면 결혼하지 않고서 동일한 소득을 거둘 때 내는 세금보다 더 많게 된다. 미국 내 기혼자들은 공동신고하지 않고 각자 별도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별도신고시 기혼자들 각자에 적용되는 세율체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²¹⁹⁾

과거 부부(과세)단위를 사용하던 OECD회원국 중 몇몇 국가들도 최근 수십년간 기혼자들에 대해 강제적 또는 선택적 개별과세단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권을 부여하는 사회적·법적 변화를 의식하여 이루어졌다.

몇몇 국가들은 선택적 개인과세단위를 적극적·능동적, 즉 ‘땀을 흘리는(earned)소득’들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투자소득은 여전히 합산하여 부부 중 고소득배우자에게 귀속하는 방법으로 과세한다.²²⁰⁾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부소득은 개인단위 또는 공동신고 양쪽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공동신고자에 적용되는 세율체계에 의한 세부담이 개인별 세율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부부소득을 이분하였을 때와 비슷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1972년부터 아내의 근로소득은 남편과 아내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남편의 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신고단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혼인부부에게 제공하는 소득공제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²²¹⁾

된다.

219) 왜냐하면 미혼개인들에 대한 과표구간이 기혼부부가 공동 신고할 때 적용 받는 세율체계내과표구간(rate bands)의 절반보다 더 넓기 때문이다. USA IRC(c) 참조.

220)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하이브리드(hybrid)과세단위제도를 갖고 있는데, 기혼부부의 땀흘리는(earned)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과세하나 부부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체계이다.

221) 이러한 조세경감을 기혼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라고 부르며 남편에게 제공된다. GBR ICTA§257BA에 따라 부인은 동경감혜택의 절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단위합산에서 가장 과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프랑스 소득세의 ‘가족제수(quotient familial)’에서 나타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모든 가족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들이 적용되기 전에 총 가족소득은 2 또는 그 이상의 분모로 나뉘진다. 기본 분모인 2는 자녀가 없는 부부에 적용되며, 이 수치는 두 자녀까지는 매 자녀 당 0.5씩 증가하고 그 이후의 추가자녀 한 명당 1씩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된 총소득 제수(fraction)에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한 후 구해진 세액을 분모로서의 제수에 곱하여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하에서의 세금경감액은 부양가족당 일정금액으로 제한된다. 프랑스식 제도의 명백한 효과는 대가족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명시적인 정책목표가 공공연히 인용되기도 한다.

만일 결혼한 부부를 과세단위로 삼는다면 납세자가 혼인을 했는지의 여부인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 상황이 관찰된다. 어떤 납세자의 민법상 지위(civil law status)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형식적인 법률행위 없이 그들 자신이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관할국(지역) 내의 민법하에서는 혼인했다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어떤 부부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결혼식을 하거나(예, 일방이 기혼자인 경우), 법률적 유효성이 의문시되는 혼인식(예, 일방의 이전 혼인으로부터 이혼을 했지만 이혼의 효력이 불확실한 경우)을 치렀을 수도 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 후 정식절차 없이 별거함으로써, 비록 법률적으로 여전히 혼인중이라도 그들 자신이 더 이상 혼인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혼인부부를 과세단위로 삼는 경우 혼인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법상의 규칙에 의존한다. 동성결혼과 같이 민법 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는 적절한 과세단위를 결정하는 목적에서 부부로 취급되지 않는다.²²²⁾ 별거중이지만 이

222) 어떤 목적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파트너십 상대로 동거하는 개인들을 혼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소득세법들도 있다. AUT EStG§33(4)(1);NLD WIB§56.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은 사생활 침범을 근거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혼은 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해 적용하는 원칙들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혼인중인 개인으로서 취급되는 반면, 독일에서는 함께 거주하는 혼인부부에게 공동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케냐와 잠비아에서는 현재별거중이면서 별거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부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연도 중에서 발생하는 결혼, 별거, 이혼의 문제는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납세자의 지위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과세연도 중 지위의 변화에 비례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과 혼란성 때문에 부부를 과세단위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혼인 상태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상의 제약문제이다. 그러나 부부 및 가족이 아닌 개인을 과세단위로 삼는 다 하더라도 조세당국에서는 개인의 혼인상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혼인 상태는 인적공제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소득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중소득자(associate)’에 대한 정의와도 관련되어 있다.

결국 소득세 과세단위의 결정에 있어 많은 국가들은 첫째,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개인별 과세제도를 채택하여 왔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세문제를 떠나서 주로 기혼 또는 미혼의 개인들에 대한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일반적인 추세에 호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중요하다고 입증된 것이데, 합산제 또는 공동신고제가 현재는 비취업 중이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배우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만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배우자가 버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주소득자의 최고한계세율에 달려있다. 그 결과 특히 부인들이 육아기간 후에 취업 또는 재취업하려는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어, 이러한 우려가 많은 나라들이 부부합산제 또는 공동신고제로부터 이탈하게 된 배경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고려사항 또한 개인과세단위를 선호하게 만든 주요 요

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적 원천징수제도를 설계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표 4-1> 주요국의 과세단위비교²²³⁾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대 만
-독신자 -부부별산 부부합산	-독신자 -부부합산 -부부별산 -특정 세대주	-부부별산	-독신자 -부부합산	-가족합산 -분할과세방식	-부부합산	-독신자 -부부합산 -부부별산

선진국의 경우에도 덴마크²²⁴⁾를 비롯한 북구 및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권리, 혜택, 의무에 관한 대부분의 법규가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²²⁵⁾ 조세 역시 개인을 단위로 하지만 몇몇 나라는 여전히 부부의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고,²²⁶⁾ 이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²²⁷⁾ 과세단위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단위²²⁸⁾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223)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 166면.

224) 덴마크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나 1970년에 개별과세로 전환하였다. 한도숙,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0년, 28면.

225) 이탈리아는 1977년 합산과세에서 개별과세로 전환했다.

226) 폴란드의 경우 부부간의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산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박창균, “폴란드의 조세개혁”, 『재정포럼』 2001년 6월호, 70면.

227) 예컨대 네덜란드의 치과의사인 납세자 Y의 사건이 있다. 1975년부터 동거녀 A가 치과의사일을 보조했다. 그녀의 수입은 치과순수익의 일부분이었다. 그들은 1980년 결혼했고, 협조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 아내의 몫은 NLG26955였지만, 1964년 소득세법(1981년 text) 5조 2항에 근거, 참여하는 아내에 대한 보수는 NLG16176으로 제한되었다. 또 1964년 소득세법(1981년 text) 5조 1항에 의해 아내의 예금이익은 남편의 소득에 부가되었다. 납세자는 이 두 조항이 ICCPR 26조 위배라고 법원에 제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네덜란드 세법상 세금산정이 된 사람만이 제소할 권한을 가지므로, A는 그녀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해 남편에게 부과된 산정액에 대해 항의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그녀의 이익은 Y의 소득의 일부일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228) 이하는 주로 김완석, 2000, 앞의 책, 67-72면; 한국조세연구소,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한다.

2. 미국의 과세단위와 혼인세 논쟁

1) 미국의 과세단위의 변화

미국은 1913년에 항구적 조세로서 소득세를 채용한 이래 계속하여 개인단 위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 전체를 규율하는 통일적 재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각 주가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재산제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부재산제도 또한 각 주의 자주적 규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주에 따라서 제각기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거나 부부공유제 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1930년에 연방 대법원은 *Poe v. Seaborn* 사건에 대한 판결²²⁹⁾에서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분한 것이 각각 부 및 처의 소득이기 때문에 부부는 합산소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등분한 금액이 각각 부 및 처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분2승제(二分二乗制)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부부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 사이에는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의 주에서는 단지 주민의 세부담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부부공유 제로 이행하였고,²³⁰⁾ 또는 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거나 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빈번하게 시도되었다.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68-74면; 노영훈, 2002, 앞의 논문, 38-42면 등을 참조했다. 229) 282 U.S. 101 (1930).

230) John K.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West Publishing Co., 1988), p.346; Joseph A. Pechman, *Federal Tax Policy*, 4th edition(The Brookings Institutions, 1983), pp. 96~97.

때문에 1948년에는 부부재산제의 차이에 따른 각 주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선택적인 2분2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부부는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거나, 2분2승제에 의하여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일세율표 아래에서의 2분2승제는 독신자에 비하여 기혼자, 특히 혼자 버는 부부를 우대한다는 점과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독신세대주에게 가혹하다는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1969년에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단일세율표제에서 복수세율표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세율표를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 공동신고를 선택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person),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4종으로 세분하여 다음에서 보듯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단위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³¹⁾

<표 4-2> 미국의 연방개인소득세율²³²⁾

1) 부부합산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43,050	-	15
43,050	104,050	6,457.50	28
104,050	158,550	23,537.50	31
158,550	283,150	40,432.50	36
283,150	-	85,288.50	39.6

231) 노르웨이의 경우도 2인 소득 가정과 1인 소득 가정 및 독신가장 가정이 다른 과세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2인 소득 가정은 과세 제1등급(tax class 1), 1인 소득 가정 및 독신가장 가정은 과세 제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등급의 경우는 25000NKK(2835달러)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제2등급은 50000NKK(5670달러)가 허용된다. 한도숙, 2000a, 앞의 책, 50면.

232) 재정경제부,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2002.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2002,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II,” 『재정포럼』(69호, 3월), 82-83면에서 인용.

2) 부부별산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21,525	-	15
21,525	52,025	3,228.75	28
52,025	79,725	11,768.75	31
79,725	141,575	20,216.25	36
141,575	-	42,644.25	39.6

3) 독신자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25,750	-	15
25,750	62,450	3,862.50	28
62,450	130,250	14,138.50	31
130,250	283,150	35,156.50	36
283,150	-	90,200.50	39.6

4) 세대주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34,550	-	15
34,550	89,150	5,182.50	28
89,150	144,400	20,470.50	31
144,400	283,150	37,598.00	36
283,150	-	87,548.00	39.6

2) 미국의 혼인세 논쟁

그런데 위와 같이 혼인 부부가 각자 개별신고(married separate filing)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미국의 세율체계 및 공제 등은 여전히 개별신고 할 경우 공동 신고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방소득세 하에서 부부 공동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부부가 각자 개별납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속칭 혼인세(marriage tax, marriage penalty)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²³³⁾

혼인징벌세(marriage penalty or tax)라고 하여 수년간 논란을 빚고 있는

현상은, 혼인 상태를 과세당국에 밝히지 않거나 실제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임에도 법률적으로 혼인 상태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혼인세는 혼인한 부부가 마치 혼인을 안 한 것처럼 각자 독신자신고(single filing) 유형을 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표 및 공제금액에 따라 개별신고하였을 때의 합계세액보다 부부공동신고를 할 때의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에 존재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혼인 보너스(marriage bonus)라고 부른다.

<표 4-3>은 미국연방소득세법 하에서 부부개별 및 공동신고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하여 적용한계세율에 속하는 소득을 상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다. 독신 상태인 2인의 납세자와 혼인한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통해 일정 소득수준별 또는 소득부담비율별로 혼인징벌세 또는 혼인보너스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독신 2인의 또는 혼인한 부부의 소득 합계가 32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40,000달러인 상황에서 각각의 소득부담비율이 1:9, 2:8, 3:7, 4:6, 5:5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독신인 2인의 납세자는 각각 본인 1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부부공동신고의 경우도 부양자녀 없이 납세자와 배우자에 해당하는 2인의 인적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는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를 적용하였으며, 표준공제금액은 독신의 경우 각각 4,550달러, 부부공동신고는 7,600달러로 정하였다.

233) 노영훈, 2002, 앞의 책, 28-29면.

<표 4-3> 미 연방소득세의 부부 개별 및 공동신고 세부담 상대비교(2001년 귀속)
(단위: 달러)

사 례		개 별 신 고							공 동 신 고			세액 차이
		A			B			세액 합계	소득 (A+B)	과세표준	세액	
		소 득	과세표준	세 액	소 득	과세표준	세 액					
A	1	32,000	25,300	4,133	288,000	275,500	93,742	97,874	320,000	300,800	89,656	8,219
	2	64,000	57,300	13,013	256,000	243,500	81,230	94,243	320,000	300,800	89,656	4,587
	3	96,000	89,300	23,075	224,000	211,500	68,718	91,793	320,000	300,800	89,656	2,138
	4	128,000	121,300	34,435	192,000	179,500	56,206	90,641	320,000	300,800	89,656	986
	5	160,000	153,300	45,962	160,000	147,500	43,694	89,656	320,000	300,800	89,656	0
B	1	20,000	13,300	1,995	180,000	167,500	51,514	53,509	200,000	180,800	46,932	6,577
	2	40,000	33,300	6,333	160,000	147,500	43,736	50,069	200,000	180,800	46,932	3,137
	3	60,000	53,300	11,833	140,000	127,500	36,636	48,469	200,000	180,800	46,932	1,537
	4	80,000	73,300	17,893	120,000	107,500	29,536	47,429	200,000	180,800	46,932	498
	5	10,000	93,300	24,495	100,000	87,500	22,436	46,932	200,000	180,800	46,932	0
C	1	15,000	8,300	1,245	135,000	122,500	34,861	36,106	150,000	130,800	30,967	5,140
	2	30,000	23,300	3,583	120,000	107,500	29,536	33,119	150,000	130,800	30,967	2,152
	3	45,000	38,300	7,708	105,000	92,500	24,211	31,919	150,000	130,800	30,967	952
	4	60,000	53,300	11,833	90,000	77,500	19,174	31,006	150,000	130,800	30,967	40
	5	75,000	68,300	16,368	75,000	62,500	14,599	30,967	150,000	130,800	30,967	0
D	1	10,000	3,300	495	90,000	77,500	19,174	19,669	100,000	80,800	16,570	3,099
	2	20,000	13,300	1,995	80,000	67,500	16,124	18,119	100,000	80,800	16,570	1,549
	3	30,000	23,300	3,583	70,000	57,500	13,074	16,656	100,000	80,800	16,570	86
	4	40,000	33,300	6,333	60,000	47,500	10,238	16,570	100,000	80,800	16,570	0
	5	50,000	43,300	9,083	50,000	37,500	7,488	16,570	100,000	80,800	16,570	0
E	1	5,000	-1,700	0	45,000	32,500	6,113	6,113	50,000	30,800	4,620	1,493
	2	10,000	3,300	495	40,000	27,500	4,738	5,233	50,000	30,800	4,620	613
	3	15,000	8,300	1,245	35,000	22,500	3,375	4,320	50,000	30,800	4,620	0
	4	20,000	13,300	1,995	30,000	17,500	2,625	4,320	50,000	30,800	4,620	0
	5	25,000	18,300	2,745	25,000	12,500	1,875	4,320	50,000	30,800	4,620	0
F	1	4,000	-2,700	0	36,000	23,500	3,638	3,628	40,000	20,800	3,120	518
	2	8,000	1,300	195	32,000	19,500	2,925	3,120	40,000	20,800	3,120	0
	3	12,000	5,300	795	28,000	15,500	2,325	3,120	40,000	20,800	3,120	0
	4	16,000	9,300	1,395	24,000	11,500	1,725	3,120	40,000	20,800	3,120	0
	5	20,000	13,300	1,995	20,000	7,500	1,125	3,120	40,000	20,800	3,120	0

주: 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함.

2. 사례 A~F는 총소득에 대한 가정(A는 320,000달러, B는 200,000달러, C는 150,000달러, D는 100,000달러, E는 50,000달러, F는 40,000달러)이고 사례 1~5는 A와 B의 소득비율에 대한 가정임(1은 1:9, 2는 2:8, 3은 3:7, 4는 4:6, 5는 5:5).

3.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인적공제(exemption)의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4. 주소득자(B)의 소득에서 3명의 인적공제(exemption)를 적용하고 주소득자(A)의 소득에서 1명의 인적공제를 적용하였으며, 인적공제금액은 1인당 2,900달러임.

5.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아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가정하였으며 개별신고시 표준공제 금액은 각각 3,800달러, 공동신고시 표준공제 금액은 7,600달러임.

예를 들어, 소득 320,000달러의 경우 부부공동신고 시 과세표준은 300,800달러가 되고 최고 한계세율인 39.1%의 세율이 적용된다. 320,00달러를 부부가 각각 1:9의 비율로 벌어들일 경우 개별신고와 공동신고의 차액은 8,219달러다. 이는 개별 신고하는 경우 공동신고에 비해 8,219달러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소득을 2:8의 비율로 벌어들일 때의 차액은 4,587달러, 3:7일 경우 2,138달러, 4:6의 경우 986달러로, 부부간의 소득부담비율 격차가 작아질수록 추가적인 세부담이 적어지며 5:5의 비율로 부담할 때 차액은 0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320,000달러, 200,000달러, 150,000달러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 100,000달러인 사례 D의 경우 소득비율 5:5의 경우뿐만 아니라 4:6의 비율에서도 공동신고와 개별신고 간의 세액에 있어 차이가 없고 소득 50,000달러인 사례 E의 경우 3:7의 비율에서부터, 그리고 소득 40,000달러인 사례 F의 경우 2:8의 비율에서부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의 총 소득 규모가 작아질수록 개별신고와 공동신고 간의 세부담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40,000달러의 경우 1:9의 비율에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A의 소득이 4,000달러로, 최소한 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2,900달러와 표준공제 3,800달러를 차감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0,000달러 소득 중 A의 소득이 6,700달러(17%), B의 소득이 3,800달러(83%)라고 가정하면 개별신고와 공동신고 간의 세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어진다. 즉, 소득이 40,000달러 미만 이면서 A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이상이면 개별신고와 공동신고간의 세부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논의는 부부가 혼인 상태를 과세당국에 은폐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면서 신고유형을 부부공동으로 할지 부부개별로 할 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부공동신고가 부부개별보다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설계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행 미국 연방소득세법 하에서 발생하는 혼인징벌세나 혼인보너스의 규모는 부부 각자의 소득규모, 부양가족수, 그리고 항목별 소득공제 상환

에 따라서도 다르다.

<표 4-3>에서 보면, 소득이 320,000달러인 경우 모든 비율에서 부부합산 과세의 세액이 독신의 세액을 초과함으로써 소득부담비율과 관계없이 혼인 징벌세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200,000달러인 경우에는 소득비율이 1:9인 상황에서 부부공동신고의 세액이 독신의 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보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100,000달러와 50,000달러인 경우에는 소득부담비율은 3:7, 4:6, 5:5인 상황에서는 혼인징벌세를 부담하고 소득이 40,000달러로 감소하면 소득부담비율 1:9를 제외한 모든 비율의 경우에서 혼인징벌세를 부담한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부부간 소득비율이 7:3보다 더 균등하게 나누어져 발생할 경우에 혼인징벌세를 물게 되고 부부의 총소득이 부부 중 일방에 거의 치중될 경우에는 혼인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세 문제 때문에 2001년 1월부터 혼인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경주되었다.²³⁴⁾ 그 중 2001년 부시 대통령의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법안 내에 포함되었던 혼인징벌세 경감안은, 부부 공동신고자에 대한 표준소득공제액을 독신신고자에 대한 표준소득공제액의 두 배가 되도록 연도별 인상계획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한계세율인 15%에 해당하는 과표구간 중 부부공동신고자 소득상한 금액을 독신신고자

234) 2001.1.22 Marriage Tax Penalty Elimination Act of 2001 상원 제출(S.11), 2001.2.6 Tax Relief and Marriage Penalty Elimination Act of 2001 하원 제출(H.R.456), 2001.2.14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개정안 하원 제출(H.R.672), 2001.3.15 Marriage Tax Penalty Elimination Act of 2001 하원 제출(H.R.6), 2001.3.15 Marriage Penalty and Family Tax Relief Act of 2001 (H.R.6) 하원 보고, 2001.3.28 (H.R.6) 심의, 2001.5.9 Marriage Tax Penalty Relief Act of 2001 상원 제출(S.853), 2001.3.29 Marriage Penalty and Family Tax Relief Act of 2001 하원 안건 채택 (H.R.6), 2001.4.26 Marriage IRA Fairness Act of 2001 하원 제출(H.R.1611), 2001.6.6,7 Marriage Penalty and Family Tax Relief Act of 2001(H.R.6) 상원에서 두 차례 검토, 2001.10.9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개정안 상원 제출 (S.1513), 2002.6.13 the marriage penalty relief provisions of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의 영구화 결의(H.R.4019) 및 상원 제출 (S.2620), 2002.6.27 Marriage Penalty Tax Relief Act of 2002 하원 제출(H.R.5043), 2002.9.24 (H.R.4019)에 대한 의회의 처리 촉구 및 2002.10.2 동 결의(H.RES 543) 등 참조.

의 두 배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2002년 6월 13일 미국하원에서는 혼인세를 완화하기 위해 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이다. 이는 이러한 작년의 경감조치들이 상원의 절차적 규칙 때문에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만료하는 시한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것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3. 영국

근대적 소득세의 모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은 1799년에 소득세를 채택한 이래 일관하여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왔다. 즉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에 독신자와 동일한 세율표에 의하여 과세하는 합산비분할주의를 고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1972년부터 부인의 근로소득은 부부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남편의 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과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78년의 미드 보고서에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대하여는 개인단위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하여는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²³⁵⁾

그렇지만 1986년에 공표된 개인과세의 개혁에 관한 재무부의 그린페이퍼(Green Paper, The Reform of Personal Taxation)에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제개혁(Finance Bill 1988)에 의해 1990년 4월부터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²³⁶⁾

235) IFS, 1978, 앞의 책, p. 395.

236) Chris Whitehouse & Elizabeth Stuart-Buttle,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ition(Butterworths, 1992), p.653.

4. 독일

1920년에 개정된 독일 연방 소득세법에서는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인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의 합산비분할주의가 채택되었다. 다만 1921년 법개정에 의해 처의 소득 중 독립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부와 관계없는 사업에서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부의 소득과 구별해서 독립적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찌 시대에 들어선 193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이러한 예외는 배제되어 완전한 합산비분할주의가 부활되었다. 이것은 부인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41년 12월에는 전쟁의 격화로 부인노동의 필요성이 높아져, 妻의 소득 중 夫와 관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1921년 소득세법의 규정이 부분적으로 부활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1951년의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 EStG)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여 원칙적으로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소득세법 제 26조 및 제 27조에서 부부의 소득(처의 비독립적 근로소득 제외)과 18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비독립적 근로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부와 관계없는 사업에 있어서 처의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했다(독일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제각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혼인징벌세(Ehestrafsteuer)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단위주의는 누진세율구조로 말미암아 개인단위주의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합산과세를 정한 소득세법 제 26조²³⁷⁾가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 3조 제 2항(남녀평등), 제 6조 제 1항

237) EStG 제 26조 ① 부부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동시에 계속하여 별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에 관하여 합산과세를 행한다. 위의 요건은 과세기간에 있어

(혼인 및 가족의 보호)²³⁸⁾ 및 제 3조 제 1항(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7. 1. 17.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단순히 혼인 및 가족의 보호만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혼인 및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전의 세액보다 과중하게 되는 합산과세규정은 이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즉 기본법 제 6조는 혼인 및 가정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규범(Grundsatznorm)으로서 공법 및 사법에 대한 구속적 가치결정(verbindliche Wertentscheidung)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를 구속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 26조는 혼인에의 방해적 조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다른 규정의 판단을 기다릴 여지도 없이 위헌임을 선언한 것이다.²³⁹⁾

이와 같은 위헌 판결에 따라 독일은 소비단위주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단위주의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같은 2분2승제를 채용하여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5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합산분할과세 방법인 2분2승제와 개인단위과세 중에서 납세의무자 부부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즉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산과세(zusammen Veranlagung)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분리과세(getrennte Veranlagung)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이 비록 선택적이기는 하나 합산분할과세의 방법, 즉 2분2승제(Splittingverfahren)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독일은 종래부터 부부를 일체로 보아, 즉 세대를 단위로 하여 담세력을 측정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 세대합산을 계속하는 것이 세부담의 공평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② 부부의 소득의 합계액이 100일 경우에는 부부의 한쪽만이 100일 경우, 각

서 적어도 4개월 이상 존속함을 필요로 한다. ② 합산과세에 있어서 부부의 각 소득은 합산된다.

238) 혼인 및 가족은 국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39) 1957.4.17., BVerfGE Bd. 6, S.55.

각 70과 30일 경우 또는 각각 50과 50일 경우라고 하여 세부담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③ 합산을 폐지할 경우에는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세대는 매우 유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반부부공유제(allgemeine Gaeteregemeinschaft)를 계약함으로써 부부가 자산소득을 분할하거나 재산을 적당히 부부간에 분산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소득을 분산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단위 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공평에 배치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택된 2분2승제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부는 근로 및 소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부부는 수입을 반액씩 향수함과 동시에 지출 및 부담과 각각 반액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대의 실태에 맞는 것이다. 즉 합산분할과세의 방법인 2분2승제 방식에 따르면 부부의 쌍방 소득은 합산된 후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종래와는 달리 그 합산액의 반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 산출액에 2를 곱하여 얻어진 세액이 부부의 세액으로 된다. 결국 부부가 소득 및 소비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2인의 독신자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처의 입장을 특히 존중하여 남편의 직업에 대한 처의 조력을 세법상 인정하여 준 것으로서 195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법상의 증가재산공유제(Zugewinnngemeinschaft)와도 부합하는 것이다.²⁴⁰⁾

따라서 현재 독일은 동거하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개별부과를 선택하지 않는 한 합산부과하고 있으며,²⁴¹⁾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신납세자와 부부합산납세자에 대해 각각 다른 공제수준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단위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완화하고 있다. 기본공제한도는 1999년의 경우 독신은 1만 3067마르크, 부부합산의 경우는 2만6135마르크이며, 세율 역시

240) Klaus Tipke/Joachim 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ß, 13. Aufl.(verlag Dr. Otto Schmidt. 1991), S.396.

241) 이명헌, “독일의 조세”, 『재정포럼』 1999년 10월호, 116면.

다음에서 보듯이 독신과 부부합산을 달리 하고 있다.²⁴²⁾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27조의 자녀합산과세(Zusammenveranlagung mit Kindern)도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함으로써²⁴³⁾ 현재 자녀의 소득도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표 4-4> 독일의 독신납세자에 대한 세율

(단위: DM. %)

과세소득	한계세율	세액
13,067 이하	0	0
13,068~17,063	23.9~25.3	12~1,010
17,064~66,365	26.7~31.69	1,025~16,637
66,366~120,041	36.69~44.84	16,656~40,707
120,041이상	53	40,736

자료: IBFD Publications, *European Tax Handbook*, 1999.

<표 4-5> 독일의 부부 합산 납세자에 대한 세율

(단위: DM. %)

과세소득	한계세율	세액
26,135이하	0	0
26,137~34,127	23.9~25.3	24~2,020
34,128~132,731	26.7~31.69	2,050~33,274
132,732~240,083	36.69~44.84	33,312~81,414
240,083이상	53	81,472~

자료: IBFD Publications, *European Tax Handbook*, 1999.

242) 이명헌, 1999, 위의 논문, 120면 참조.

243) 1964. 6. 30., BVerfGE Bd. 18, S.97.

5. 일본

명치 20년에 제정된 일본 소득세법은 호주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의 민법이 가족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음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민법상의 가족제도와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와는 호홉이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昭和 22년에 민법의 친족편이 전부 개정되어 종래의 家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한편, 샤프권고에서는 가족단위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독립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제각기 납부하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昭和 25년(1950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가족단위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독립적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제각기 납부하는 개인단위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다음해인 昭和 26년에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폐지와 사무간昭和의 견지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昭和 32년의 ‘臨時稅制調査會’는 자산소득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하여 합산하는 것이 자산 명의의 분할 등 표면상의 위장에 의하여 부당하게 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동거친족의 자산소득은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 된다는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昭和 32년(1957년)부터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소득에 한하여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개인단위주의의 특례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8년 소득세법의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²⁴⁴⁾

244) 金子宏, 『租税法』, 第四版, 弘文堂, 1992, 168面.

6. 프랑스

프랑스는 1945년이래 家族除數制(system du quotient familial)라는 독특한 소득분할 방식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이는 가족의 과세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이것을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가족계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우선 세대(foyer)의 범위, 즉 합산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녀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자녀를 합산대상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자녀가 18세 이상이거나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때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21세 미만(재학중인 자는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군에 복무하는 자녀(연령에 관계없다)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²⁴⁵⁾ 한편, 부부의 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야 하나, 자녀의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즉 자녀의 경우에는 합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그 자녀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며, 뒤에서 설명하는 가족계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제외된다.

다음으로 소득분할방식은 가족제수제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족제수제는 독신자의 경우에는 1단위, 부부는 2단위, 부부 및 1인의 자녀는 2.5단위, 부부 및 2인의 자녀는 3단위, 부부 및 3인의 자녀는 4단위²⁴⁶⁾로 하여 과세소득을 가족제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제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녀의 수가 많은 만큼 세율의 누진도를 완화시키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홀아비 또는 과부인 경우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부의 소득에 대하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일반조세법 제6조).

245) 監査法人 トーマッEC綜合チーム, 『EC加盟國の稅法』, 中央經濟史, 1992, 163面.

246) 위에서의 단위수를 가족제수라고 하는데, 가족 1인당 가족제수는 1이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0.5로 계산하여야 하나, 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의 경우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가족제수제는 기혼자,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또 그 소득세 부담의 감소 정도는 자녀의 수가 많고 가족 중 부 또는 처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가장 현저한데, 인구증가 장려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²⁴⁷⁾ 동시에 고액소득자에게 보다 큰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부여하여²⁴⁸⁾ 누진소득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II. 과세소득 범위의 성 평등성

1. 미국

미국은 포괄주의에 근거해 개인의 소득을 포괄·합산하여 신고납부제도에 의거 보고한다. 그렇지만 우리와 달리 소득의 구성요소에 임금, 급여 및 기타 소득, 퇴직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의 기타소득, 임대소득, 연금, 퇴직연금, 사회보장급여, 기타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기타소득의 범주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대상소득을 가능한 한 넓게 잡고 있다.

1) 소득신고와 과세소득범위

미국의 경우 소득신고를 위한 간단한 형식(Form 1040) 및 이에 관한 설명서가 항상 첨부되어 있는데, 미국의 개인소득신고서의 순서에 따라 소득세를 보면²⁴⁹⁾ 다음과 같다.

247) 반면, 이 제도상 모든 자녀의 제수는 균일하게 0.5로, 자녀 1인당 세부담 감소액은 둘째 자녀 이하에서는 체감하므로 인구정책으로서도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있다.

248) 金子宏, “所得税における課税單位の研究,” 『公法の理論』 中 田中二郎先生古稀記念, 有斐閣, 1976, 721~722面.

249) 이하는 이철인,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재정포럼』 2000년 1월호, 25~29면을 참조했다.

가) 소득의 구성요소

(1) 임금, 급여

- 임금, 급여, 팁소득, 부양(보호)지원금, 입양지원금, 학자금, 연구장려금, 지급연기된 초과수당, 산재연금, 이익배분 형태의 지급 등을 포함함.

(2) 과세대상 이자소득

(3) 비과세 이자소득

- 연방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등 정부의 규제를 받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등

(4) 배당소득

(5) 주세, 지방세 환급액 등

(6) 이혼 생활보조금

(7) 사업소득

(8) 자본이익

- 설비재산, 광물재산, 자본재산(집, 가구, 자동차, 주식, 채권) 등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외되는 자본재산: 판매용의 주식, 당좌계정이나 당좌수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실용신안권, 예술(문학, 음악, 미술)창작물, 편지나 메모 등의 재산, 미국정부의 발행물
- 자본재산의 매매나 교환으로부터의 이익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
- 단기(1년 이하)와 장기의 구분 계산

(9) 기타 손실 및 이득

(10) 개별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소득

(11) 연금소득

(12) 부동산, 로열티, 사원권(partnership) 임대소득

(13) 농가소득

(14) 실업수당

(15) 사회보장보조비 수취분

(16) 기타소득

나) 조정항목²⁵⁰⁾

(1) 개인연금 공제

(2) 학자금융자 공제

(3) 의료저축액 공제

250) 조정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금 공제

- 70세 6개월 이하인 사람만 가능(이상인 사람은 지급된 연금에 대해 50%의 가산세를 납부함)
-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합산처리
- 금액은 소득금액과 부부, 독신 생활 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됨.

(2) 학자금융자 공제

- 학자금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자지금이 시작되고 나서 60개월 이내에 과세기간이 시작되어야 하고, 분리 신고하는 부부가 아니어야 하며, 독신자인 경우 총소득이 55,000달러 이하이고 부부인 경우는 75,0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융자 공제대상이 됨.
- 총소득에서 독신자는 55,000달러를 제외한 값(부부인 경우는 75,000달러를 제외한 값)을 15,000으로 나누어서 나온 소수에 총지급 학자융자 이자액과 1,000달러 중 작은 값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

(3) 의료저축액 공제

- 의료저축액 상당액 공제

(4) 이사비 공제

- 이사전보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50마일 이상 떨어진 경우에 해당

(5) 자가사업자(one-half of self-employment tax) 공제: 신규 항목

- 급여 및 편익제공 등의 소득이 72,600달러 이하인 경우 15.3%.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9%를 곱한 금액의 합에 50%를 공제

(6) 자가사업자 건강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지급액의 45%와 자가사업으로부터의 소득에서 제공제를 실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7) Keogh and self-employed SEP and AIMELE plans

- 자가사업자 및 소규모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연금, 퇴직금 관련 공제
- 최대 한도는 급여 및 편익 제공의 15%

(8) 저축중도해약 수수료

(9) 이혼 생활보조금 지급

- 소득이 94,975달러 이하인 경우는 이혼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해당 보조인원에 따라 각기 2,750달러씩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94,975달러를 초과하고 납세자의 결혼형태에 따른 소득감면 대상 소득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과세 체계(형식 1040)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됨.

- (4) 이사비 공제
- (5) 자가사업자(one-half of self-employment tax) 공제: 신규항목
- (6) 자가사업자 건강보험료 공제
- (7) Keogh and self-employed SEP and AIMELE plans
- (8) 저축중도해약 수수료
- (9) 이혼 생활보조금 지급

다)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 (1) 가)의 합계에서 나)의 합계 차감 금액

라) 공제항목(deductions)

- (1) 노령(65세 이상) 및 맹인 소득 공제
- (2) 부부개별신고 및 이중거주자 소득공제
- (3) 표준공제와 개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단, 위의 이중거주자 소득공제를 선택한 경우는 표준공제액이 0임. (표준공제 독신자: \$4,250, 가장:\$6,250, 부부합산신고:\$7,100, 부부개별신고:\$3,550)
- (4) 추가공제

다)의 조정총소득이 \$93,400 이하인 경우는 \$2,700을 공제 개수와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다)의 조정총소득이\$93,400 이상인 경우는 보다 복잡한 조정을 통해 공제액을 구함.

마)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

- (1) 다)의 조정총소득에서 라)의 공제항목들을 차감

바) 결정세액

- (1) 순자본이득이 있는 경우와 농가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기 별도의 이자율 적용

- (2) 과세 대상소득이 \$100,000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 각기 별도의 이자율을 적용

사) 세액공제(tax credit)

- (1) 아동부양비용 세액공제
- (2) 노인 및 장애인 세액공제
- (3) 아동세(child tax) 세액공제
- (4) 교육비 세액공제
- (5) 입양비 세액공제
- (6) 외국납부세금 세액공제
- (7) 기타 세액공제(주택저당부채권 이자세액공제, 전년도 최저한세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중소기업 합자사원 또는 소유주에 대한 세액공제, 채용장려부문의 채용세액공제, 콜럼비아지역의 최초 주택구입자 세액공제)

아) 납부세액

- (1) 바)의 결정세액에서 사)의 세액공제를 차감한 값

자) 기타세액

- (1) 자가고용세
- (2) 대용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일시상각이나 특별상각이 있는 경우, 주식옵션으로부터의 이익이 있는 경우, 사채권으로부터 비과세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대용 최저한세를 적용)
- (3) 사업주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회보장세 및 의료세
- (4)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금
- (5) 미리 획득된 세액공제
- (6) 당해연도(1998년)에 \$1,100이상 이전년도에 \$1,000 이상의 가계고용인을

고용한 경우

차) 총납부세액

- (1) 아)의 소득세 납부세액과 자)의 기타세액을 합친 금액

카) 지급액

- (1)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 (2) 기납부한 추정연방소득세
- (3) 수취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과세대상 획득소득에는 과세대상 장학금, 연구장려금, 연방정부의 일시 장려금 등이 포함됨): 부양하는 미성년이 1인일 때 \$341, 2인일 때 \$2,271, 3인 이상일 때 \$3,756
- (4) 추가적인 아동세액공제(부양아동이 2명 이상이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5) Amount Paid With Form 4868
- (6) 초과납부한 사회보장세 및 원천징수된 철도퇴직세
- (7) 2439형식과 4136형식에 규정된 기타지급

타) 반환금

- (1) 카)의 지급액 총액이 차)의 총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함.
- (2) 카)의 지급액 총액이 차)의 총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그 차액이 추가 납부 대상액임.

2) 성 평등 관점에서의 미국 소득세 산출의 시사점

성 평등성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미국의 소득세 산출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대상소득의 구성요소에 부양(보호)지원금, 입양지원금, 이혼생활 보조금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이혼생활보조금 자체는 소득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소득 이하의 자의 경우 이혼생활보조금 지급금을 공제함으로써 실제로 이혼 후 생활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셋째, 표준공제의 경우 독신자와 가장, 합산신고하는 부부, 개별신고하는 부부 등 네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 다른 금액을 정함으로써 과세단위 및 경제생활형태의 차이에 따른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교육비뿐만 아니라 입양비, 아동부양비용, 아동세(child tax)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양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 부양아동이 2명 이상이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아동세액공제도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의 경우 지극히 한정된 방식으로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더욱이 소득공제에 비해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육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의 미흡함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미성년이 있을 경우 수취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부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수취소득 세액공제는 미국정부가 매년 고시한 금액 이하의 소득을 획득한 납세자에게 정부고시금액과 실제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소득재분배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수취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팁 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소득이 해당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취소득세액공제액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으로써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수준 보조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표 4-6>에서 보듯이 1999년의 경우 수취소득이 있으면서 과세투자소득이 2,350달러 이하인 저소득 납세자가 이 혜택을 받았다.

<표 4-6> 미국의 부양자녀수에 따른 수취소득세액공제액(1999년 기준)

부양자녀 없을 때	347달러(수취소득 4,550달러에 공제율 7.7% 적용). 만약 과세소득(AGI)이 5,7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율은 10%씩 감소
부양자녀 한 명	2,271달러(수취소득 6,850달러에 공제율 34% 적용). 만약 과세소득이 12,5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율은 20%씩 감소
부양자녀 두 명	3,816달러(수취소득 9,550달러에 공제율 40% 적용), 만약 과세소득이 12,5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율은 28%씩 감소

자료: 전영준, “미국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0년 1월호, 111면에서 재구성

2. 기타 국가

캐나다의 경우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여비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²⁵¹⁾ 기타 선진국에서도 포괄적 소득개념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가사노동과 같은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의 범주에는 포괄되지만 종종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로는 여성의 인권과 복지가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위자료와 별거수당도 기본적으로는 과세대상이지만, 기간단위로 지급될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²⁵²⁾ 독일의 경우도 임신보조금, 법정 자녀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다.²⁵³⁾

251) 이장규, “캐나다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0년 8월호, 61면.

252) 이장규, 2000, 위의 논문, 63면.

253) 이명현, 1999, 앞의 논문, 117면.

III. 공제제도와 성 평등

인적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공제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⁵⁴⁾

1. 미국

미국은 총소득금액(gross income: GI)에서 사업관련비용 등과 같은 공제액(deductions: deductions for AGI)을 차감하여 조정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조정총소득금액에서 의료비 등과 같은 항목의 항목별 공제액(itemized deductions) 또는 표준공제액²⁵⁵⁾(standard deductions)을 공제하고 다시 인적공제액(exemptions)을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 TI)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총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deductions)은 항목별 공제액과 표준공제액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실질 비용 공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1) 소득공제

미국의 표준소득공제액은 1998년을 기준으로 독신자가 4,250달러, 합산신고부부가 7,100달러, 독인가장이 6,250달러, 별도신고부부가 3,550달러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에는 각각 850달러(독신자 또는 독인가장인 경우에는 1,050달러)씩 가산된다(IRC 63(f)). 또한 항목별 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액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액에는 지급이자, 조세, 의료비, 재해 및 도난손실(casualty and theft loss), 자선기부금·전근비용 및 기타의 공제가 포함된다.

254) 이에 대해서는 김완석, 2000, 앞의 책, 85-94면을 주로 참조했다.

255) 개산공제액이라고도 한다.

한편, 인적공제액(exemptions)은 납세의무자인 본인·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공제액은 2,700달러씩이다.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액 중 의료비와 자선기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적공제(exemptions)

인적공제(exemptions)는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subsistence)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을 과세에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²⁵⁶⁾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초공제(personal exemptions)와 부양가족 공제(dependency exemp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제액은 모두 1인당 2,700달러씩(1998년 기준)이다. 물가연동제에 의하여 매년 50달러 단위로 가산되고 있다.

첫째, 기초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공제인데, 부부가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부 및 처가 각각 공제를 받게 된다. 부부가 별산신고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한쪽이 총소득금액이 없을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조정총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부양가족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dependents)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 ① 납세의무자와 혈연 또는 혼인에 기인한 가까운 친척(IRC 152(a))이거나 친척 이외의 기타의 자(예: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그 전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로서 납세의무자와 동거하는 세대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
- 부양(support)에는 최소한 의·식·주를 비롯하여 의료보호와 교육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양가족의 부양비 중 50/10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부양가족은 다른 납

256) John K. McNulty(1988),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Publishing Co., p.261.

세의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지 않는 자에 한한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기혼자에 해당하는 경우(예: 총소득금액이 없는 부모 중의 한쪽)에는 그의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국한된다.

② 부양가족의 총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미만인 자

총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자녀로서 19세 미만이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이상의 총소득금액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미국의 국민이거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의료비(medical and dental expenses)

납세의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조정총소득금액(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은 조정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IRC 213). 부양가족이란 자녀·손자 및 손녀·형제자매·부모·조부모·계부 또는 계모·조카와 조카딸·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자와 동거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의료비란 질병의 진단·치료·진정·처방 또는 예방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의료비에는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데,²⁵⁷⁾ 특히 의치·의수족 및 콘택트렌즈 구입대금,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품과 인슐린 구입대금, 구급차의 비용 등도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용만을 위하여 또는 불요불급한 처치비용, 불법적인 수술이나 처치에 소요된 비용,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품비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상적인 의료비(조정총소득금액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 이하의 통상적인 의료비는 공제대상

257) John K. McNulty(1988),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Publishing Co., p.261.

이 될 수 없다.

다)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납세의무자가 주 및 연방정부, 미국 내의 종교·자선·과학·학술·교육 또는 어린이 및 동물학대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같은 공적인 단체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조정 총소득금액의 50%의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 이외의 사적인 단체(a private charity)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정총소득금액의 30%의 한도 안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2) 세액공제

그밖에도 미국의 세액공제 중 주목할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the Earned Income Credit²⁵⁸⁾

이는 부양자식이 있는 저소득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1987년의 경우 개인이나 커플의 소득이 \$15,432(4인가족의 빈곤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미만이면, \$851까지 환급받았다. 통상적으로 \$15,432 미만을 버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나) the Dependent care Tax Credit

부양자녀를 둔 가정에 주어진 세액공제로, 역시 돌봄노동을 맡고 있는 여성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하는 부모에게 유리했고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적게 버는 여성은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다.²⁵⁹⁾

258) Ruth Ruttenberg & Amy A. McCarthy, "Women and Tax Policy," in Mary Lou Kendrigan(ed.), *Gender Differences*, Greenwood Press, 1991, pp.134-135 참조.

259) Ruth Ruttenberg & Amy A. McCarthy, 1991, 앞의 논문, pp.136-137.

다) the Spousal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²⁶⁰⁾

일종의 배우자연금공제로, 개인의 경우 1인당 \$2000. 소득자가 혼자인 경우 둘을 위해서는 \$2250, 맞벌이는 \$4000이 주어졌고, 피고용인의 경우는 \$25000(1인가구), \$40000(기혼, 미망인), \$1(이혼소송중인 기혼자) 등이 주어졌다. 그러나 단시간노동자는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2. 영국

영국은 총소득금액(total income)에서 소득공제액(reliefs)을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산정한다. 소득공제액에는 이혼자의 생계부양비,²⁶¹⁾ 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 과부의 사별공제, 맹인공제 등이 포함된다.²⁶²⁾ 또 그와 같이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과세대상소득에 일차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정이 행해지는데, 세액공제에는 부부세액공제, 배우자 잉여세액공제 이전분, 미망인 공제, 이혼자 생계부양비 공제 등이 포함된다.²⁶³⁾

주요한 소득공제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personal relief)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외에 고령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할증된다. 납세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허용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영국의 공제체계의 특징이다.

또 부부추가공제가 있어서 기혼자인 남편은 추가공제(extra allowance)를 받고 남편의 소득을 초과하는 추가공제액은 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260) Ruth Ruttenberg & Amy A. McCarthy, 1991, 앞의 논문, p.138.

261) 이철인, “영국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0년 5월호, 92면.

262) Stephen W. Mayson & Susan Blake, *Mayson on revenue Law*, 13th edition (Blackstone Press Limited, 1992), pp.290~293.

263) 이철인, 2000, 위의 논문, 94면.

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는 남편의 소득에서 우선 공제하거나 부부가 추가공제액의 1/2씩을 각각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령자의 경우도 부부공제가 행해진다.

영국의 1996-2001년까지의 개인소득세 기초공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7> 영국의 개인소득세 기초공제

(단위: 파운드)

세율	1996-97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기본공제	3,765	4,045	4,195	4,336	4,385
부부추가공제	1,790	1,830	1,900	1,970	2,000
노령자(65~74세)					
기본공제	4,910	5,220	5,410	5,720	5,790
부부공제	3,115	3,185	4,965	5,125	5,185
노령자(75세~)					
기본공제	5,090	5,400	5,600	5,980	6,050
부부공제	3,155	3,225	5,025	5,195	5,255
노령자공제 · 소득상한	15,200	15,600	16,800	16,800	17,000
맹인	1,250	1,280	1,330	1,380	1,400

자료: FSBR,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1996-97*(1995), 1997-98(1996).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of UK. *Budget 99. Budget 2000.*

이철인, “영국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0년 5월호, 93면에서 재인용.

2) 추가적 인적공제(additional personal relief)

부모 중 한쪽만이 16세 미만 또는 학생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적공제가 허용된다. 혼자인 부모(one-parent)란 과부, 홀아비, 육체적인 무능력자 또는 정신박약자인 처의 남편 등을 가리킨다.

3) 과부사별공제(widow's bereavement allowance)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과부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맹인공제(blind persons' relief)

납세의무자가 등록한 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다같이 맹인인 경우에는 각각 공제를 받는다.

3. 독일

독일은 소득유형별로 산정한 소득(Einkunfte)을 합산한 소득의 합계액(Summe der Einkunfte)에서 노령자공제액(Altersentlastungsbetrag), 교육시설공제액(Ausbildungsplatz-Abzugsbetrag)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총액(Gesamtbetrag der einkunfte)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소득총액에서 특별지출과 임시부담을 공제하여 소득금액(Einkommen)을 산정하고 다시 자녀공제·세대공제 및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기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zu versteuerndes Einkommen)을 산정한다.

1) 필요경비의 개산공제

비독립적 근로소득·자산소득 및 기타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입증하지 않을 때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하는 것이다. 필요경비의 개산액(Pauschbetrage für Werbungskosten)은 다음과 같다(EStG 9a).

- ① 비독립적 근로소득 : 연 2,000마르크
- ② 자 산 소 득 : 연 100마르크
- ③ 기 타 소 득 : 연 200마르크

2) 노령자공제액 등

소득의 합계액에서 노령자공제액(Altersentlastungsbetrag), 및 농업·산림업종사자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의 총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중에서 노령

공제액은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에 64세를 넘은 자를 대상으로 노임(Arbeitslohn)과 비독립적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의 합계액의 40/100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은 연 3,720마르크를 한도로 한다.

3) 특별지출과 임시부담

특별지출 및 임시부담은 불가피한 개인적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이다. 즉 특별지출 및 임시부담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지출로서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가) 특별지출공제(Sonderausgaben)

이혼이나 계속적인 별거를 하고 있는 무제한납세의무를 지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연간 27,000마르크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의무에 따른 연금 및 계속적인 부담금, 생명보험·상해보험·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납부한 교회세, 세무자문료, 납세의무자의 직업훈련비 또는 종사하고 있지 않은 직업에 관한 훈련비로서 연간 1,800마르크 이하의 금액, 자선·교회·종교·학문 및 국가정책목적이나 특히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을 위한 기부금(소득의 총액의 5/100 또는 연간 총매출액과 급여 총액의 합계액의 1/1,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당에 대한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²⁶⁴⁾

나) 이상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불가피하면서 소득수준으로 보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행해진다. 즉 재화·도난 및 천재지변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임시거액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통상의 비용(gewonliche Aufwendungen)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64) Klaus Tipke/Joachim Lang(1991). 앞의 책, pp.377~379.

(EStG33 ①). 뿐만 아니라 편부모의 자녀양육비, 자녀 직업교육, 노인, 환자에 대한 가사지원자 고용비용 등도 이상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²⁶⁵⁾

4) 기초공제

독일은 최저생활비에 대하여 기초공제(Grundfreibetrag)를 인정하고 있다. 즉 현행의 소득세세율(1999년 기준)에서 과세표준이 13,067마르크를 넘지 않는 한 그 세액을 영(0)으로 하되, 단지 과세표준이 13,067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이 산출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EStG 32 a (1)).

5) 자녀보조금(세액공제)

독일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주어지는 자녀보조금에 의해 우선 일차적으로 행해진다(다만 거주납세자에 한해 지급된다). 자녀보조금은 매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두 번째 자녀까지는 3천 마르크(약 180만원),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3,600마르크(약 216만원), 네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4,200마르크(약 252만원)가 공제된다.²⁶⁶⁾

6) 자녀공제 등

납세의무자가 자녀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비용에 대해 자녀공제(Kinderfreibetrag)와 세대공제(Haushaltsfreibetrag) 등이 행해진다. 앞서 본 자녀보조금이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액에 못미치거나 자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매달 288마르크의 자녀공제(합산되는 배우자는 매달 576마르크)가 18세 이하의 각 자녀에 대해 인정된다(단 이 공제액은 자녀보조금 지급분만큼 상쇄된다). 편부모가정의 가장이

265) 이명현, 1999, 앞의 논문, 119면.

266) 전영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재정포럼』 2002년 2월호, 20면.

거나 자녀수당 또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독신의 경우 납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연간 5616마르크한도까지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하다.²⁶⁷⁾

또 21세 미만의 직업이 없는 자녀, 직업훈련을 받거나 법정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녀 27세 미만인 자녀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녀도 자녀공제의 대상이 된다(EStG 32⑥).

4. 일본

일본의 소득공제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기초공제(38만엔(약404만원)), 부양가족 공제(사유당 38만엔), 사회보험액 공제(전액 공제), 고용소득 공제, 주택구입공제, 생명보험 및 개인연금 납입액, 의료비 공제, 상해보험공제가 허용되고 있다.²⁶⁸⁾

일본의 공제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개산경비공제, 수입획득을 위한 경비는 아니나 개인적 지출 또는 손실을 공제하여 주는 개인적 지출공제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가 그것이다. 과세총소득금액²⁶⁹⁾의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각종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개인적 지출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총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²⁷⁰⁾ 인적공제는 다시 기초적 인적공제와 특수인적공제로 구분된다.²⁷¹⁾

267) 이명헌, 1999, 앞의 논문, 119면.

268) 전영준, 2002, 앞의 논문, 22면.

269) 과세총소득금액은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퇴직소득과 산립소득은 총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총소득금액과는 별개로 과세퇴직소득금액 및 과세산립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270) 藤田良一, 『所得税の基礎理論』, 中央經濟史, 1992, 35面.

271) 藤田晴, 『所得税の基礎理論』, 中央經濟史, 1992, 63面.

1) 개산경비공제

개산경비공제는 급여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가 있다.

가) 급여소득공제

급여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급여소득공제액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하여 40%(수입금액이 165만엔 이하인 경우. 다만, 급여소득공제액이 65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65만엔으로 한다)에서 5%(수입금액 중 1,00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까지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정지출의 합계액, 즉 실액경비가 급여소득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의 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액과 특정지출의 합계액 중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여 급여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所法 57의 2 ①). 다시 말하면 근로 소득자는 개산경비공제인 급여소득공제에 대신하여 실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지출이란 통근비, 전근에 따라 지출한 이사비용, 직무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연수의 비용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 단신 부임자의 귀가경비를 말한다.

나)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의 길이에 따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계산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80만엔, 2년 초과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40만엔, 20년 초과인 경우에는 800만엔에 20년 초과하는 근속연수에 70만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所法 30).

2) 개인적 지출에 관한 공제

수입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은 아니나 의료비·사회보험료 및 화재손실 등과 같이 담세력을 감소시키는 특수한 지출이나 자산손실에 대하여는 세부담

을 조정할당위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공익성 기부금이나 생명보험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유형의 지출에 대하여는 과세상 우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출 또는 손실을 개인적 지출이라고 한다.²⁷²⁾ 잡손공제 · 의료비공제 · 보험료공제 · 기부금공제가 이에 해당한다.

가) 잡손공제

재해 · 도난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자산(생활에 통상 필요하지 않은 자산 ·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손실을 입은 경우)재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일정액을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所法 72)

나) 의료비공제

거주자가 본인 또는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만엔을 한도로 한다(所法 73).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의 금액 - (보험금손해배상금등의 합계액)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10만엔 중 적은 금액)

한편, 의료비란 그 연중에 지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 또는 치료, 치료 또는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의 구입 기타 의료 또는 그와 관련된 인적 역무의 공제대가를 말한다.

다) 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에는 사회보험료공제, 소규모기업공제등세금공제, 생명보험료

272) 藤田晴, 1992, 앞의 책, 93~94面.

공제 및 손해보험료공제가 포함된다(所法 74 내지 77). 특히 사회보험료공제는 본인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세 기타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가리킨다)로서 당해 연도 중에 지급한 보험료의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료공제와 손해보험료공제는 지급한 보험료 중 일정한 금액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라) 기부금공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익법인,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특정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과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이하 ‘특정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所法 78).

특정기부금의 지출액 또는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
- 10,000엔

3)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다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와 같은 기초적 인적공제와 장애자공제·연로자공제·寡婦(寡夫)공제 및 근로학생공제와 같은 특수인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所法 79 내지 84, 86).

가) 기초적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에 관하여는 총소득금액 등에서 35만엔을 공제한다(所法 86). 납세 의무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서 기초공제라고 한다.

(2) 배우자공제

거주자에게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35만엔을 공제한다(노인공제 대상배우자인 경우에는 45만엔)(所法 83). 노인공제대상배우자란 공제대상배우자 중 연령이 70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그리고 공제대상배우자가 특별장애자인 경우에는 65만엔(동시에 노인공제대상배우자인 경우에는 75만엔)으로 할증하여 공제한다.

(3) 배우자 특별공제²⁷³⁾

거주자에게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35만엔에서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산정한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所法 83의 2). 다만,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거나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7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여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에서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소득의 가득에 타방 배우자가 상응하는 공헌을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세대로서 사업에 공헌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미 青色専従子給與의 지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득분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987년 9월 세법개정에서 신설되었다.²⁷⁴⁾

이 배우자특별공제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이 체감하지만 여전히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결국 전업주부에 대한 공제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배우자특별공제의 ‘시간제근무문제’가 있는데,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의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의 적용이 없고 그 주부 자신이 납세자로 되는 결과 오히려 세대 전체의 세공제 후 수취소득이 감소해 버리는 역전문제를 의미한다.

거주자가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다

273) 藤田良一, 『所得税法の重點詳解』, 中央經濟社, 1995, 300面.

274) 최광, 앞의 책, 1994, 138면.

음 금액을 공제한다(법 제83조 제1항).

- ① 일반 공제대상배우자-38만엔(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동거하는 특별장애자인 공제대상배우자는 68만엔)
- ② 노인공제대상배우자-48만엔(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동거하는 특별장애자인 노인공제대상배우자는 78만엔)

‘공제대상배우자’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청색전종자급여지불을 받는 靑色事業專從者에 해당하는 자 또는 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중, 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이하인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33호).

‘노인공제대상배우자’란, 공제대상배우자 중, 연령 70세이상인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33의 2).

(4) 부양공제

거주자에게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친족 1인에 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금액을 공제한다(所法 84)

- ① 일반의 부양친족: 35만엔(특별장애자인 경우에는 65만엔)
- ② 특정부양친족(부양친족 중 연령이 16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과 노인부양가족: 45만엔(특별장애자인 경우에는 75만엔)
- ③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노인부양친족: 55만엔(특별장애자인 경우에는 85만엔)

나) 특수인적공제

(1) 장애인공제

거주자와 그의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27만엔(특별장애자인 경우에는 35만엔)을 공제한다(所法 79).

(2) 노년자공제

거주자가 노년자인 경우에는 50만엔을 공제한다(所法 80). 노년자란 연령이 65세 이상인자로서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寡婦(寡夫)공제²⁷⁵⁾

거주자가 과부 또는 홀아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所法 81).

- ① 통상의 경우는 27만엔
- ② 다음에 해당하는 寡婦(부양자녀 있는 자에 한함)로서 그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인 경우는 35만엔.

이때의 寡婦란, 다음의 자로서 노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31호).

- ①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한 후 혼인하지 않은 자 또는 남편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특정의 자 중, 부양친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당해 연도의 총소득금액, 초단기소유토지등에관한사업소득등의금액, 토지등에관한사업소득등의금액, 단기양도소득금액, 장기양도소득금액, 주식등에관한양도소득등의금액, 산림소득금액및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초공제액 이하인 자녀(기타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으로 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
- ② ①의 자 외에, 남편과 사별한 후 혼인하지 않은 자 또는 남편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특정의 자 중, 순손실이월공제 또는 잡손실이월공제를 하기 전의 총소득금액, 초단기소유토지등에관한 사업소득등의금액, 토지등에관한사업소득등의금액, 단기양도소득금액, 장기양도소득금액, 주식등에관한양도소득등의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엔이하인 자

275) 藤田良一, 1995, 앞의 책, 298-299面.

寡夫란, 처와 사별 혹은 이혼한 후 혼인하지 않은 자와 처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특정의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당해 연도의 총소득금액, 초단기소유토지등에관한사업소득등의금액, 토지등에관한사업소득등의금액, 단기양도소득금액, 장기양도소득금액, 주식등에관한양도소득등의금액, 산림소득금액 및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초공제액 이하인 자녀(기타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으로 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로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이며, 노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31의 2).

(4) 근로학생공제

거주자가 근로학생인 경우에는 27만엔을 공제한다(所法 82).

5. 기타 국가

캐나다에서도 모든 개인은 기본적인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적인 세금공제가 가능하며²⁷⁶⁾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비지수에 의해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세액공제(tax credit)도 행해지는데²⁷⁷⁾ 2000년 7월부터는 자녀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높인 바 있다.²⁷⁸⁾

칠레도 기초공제(10%) 외에 부양가족공제(가족당 10%)를 두고 있다.²⁷⁹⁾

호주에서는 과세표준 6천호주달러이하(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5,400호주달러)의 소득에 대한 기본면세 외에 상당 수준의 연간소득에 대해서도 면세하고 있는데, 미혼자는 1만 3,550호주달러, 기혼자는 2만 2,865호주달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2만 7,065호주달러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세받을 수 있다.²⁸⁰⁾ 또 호주는 16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배우자공제도 가

276) 재정경제부, 2002, 앞의 책, 인용은 한국조세연구원, 2002, 앞의 논문, 84면.

277) 이장규, 2000, 앞의 논문, 64면.

278) 이장규, 2000, 앞의 논문, 65면.

279) 재정경제부, 2002, 앞의 책, 인용은 한국조세연구원, 2002, 앞의 논문, 86면.

지고 있다.²⁸¹⁾ 즉 호주는 배우자, 배우자연금부담금 등에 대해 환급 및 세금 감면(Rebate/Tax Offsets)을 하고 있는데,²⁸²⁾ 배우자에 대한 환급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최고 \$1340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고 \$1452까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5641(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6089)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부양자녀의 소득이 일정액(\$1785) 이상인 경우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이처럼 배우자 몫의 환급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의 중립성과는 위배되지만, 우리와 달리 환급이 가능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높게 잡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은 상당히 줄이고 있다.

태국도 납세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30,000바트) 외에 자녀(3인에 한함. 15,000바트)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배우자(30,000바트)공제도 행하고 있다. 또 자녀교육비(2000바트), 납세자 혹은 배우자의 Provident Fund 기금(7000바트 이하)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행해진다.²⁸³⁾

그에 비해 스웨덴은 소득에 따라 8,700크로네(약 112만원)에서 1만 8,100크로네(약 233만원)사이인 기본공제 외에 부부공제, 자녀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²⁸⁴⁾

280) 전영준, 2002, 앞의 논문, 19면.

281) 재정경제부, 2002, 앞의 책, 인용은 한국조세연구원, 2002, 앞의 논문, 94면.

282) 정재호, “호주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0년 11월호, 68면.

283) 재정경제부, 2002, 앞의 책, 인용은 한국조세연구원, 2002, 앞의 논문, 47면.

284) 전영준, 2002, 앞의 논문, 22면.

IV.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각국의 세제

1.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공제²⁸⁵⁾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에도 부부간의 재산이전은 혼인중에는 증여세로,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상속세로 처리하고 있다.²⁸⁶⁾ 그렇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제가 행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유형을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대별하면, 미국, 영국, 대만 및 한국은 전자에 속하고, 독일, 프랑스, 일본은 후자에 속한다. 배우자공제의 효과는 과세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분할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취득과세형에서는 배우자공제가 배우자에게 직접 귀속됨에 따라 그 효과가 분명하지만 유산과세형하에서는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이 과세물건이 되므로 배우자공제는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 효과가 다소 불분명하다.

배우자공제 방식에선 일본만이 세액공제 방식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재산가액공제 방식이다. 미국은 1981년 경제부흥법(ERTA)에 의해 부부간 재산이전은 전액 증여세가 공제되고 영국도 부부간의 모든 재산이전에 대해서 면세한다. 일본에서는 결혼기간과 연관시켜 배우자공제를 해 주고 혼인의 취소,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혼인 중 부부협력에 의해 얻은 재산액을 초과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수단으로 하여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 분여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285) 이에 대해서는 한상국,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48-55면을 주로 참조했다.

286) 다만 캐나다는 1979년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세제개혁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유산과 증여자산은 소득세제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즉 사망이나, 배우자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에게 얻어지는 소득은 이전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장규, 2000, 앞의 논문, 59면, 138면.

고 있다. 상속의 경우는 일본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많은 금액이 비과세된다(일본 상속세법 19조의 2). 그런가 하면 영국은 소득세에 있어서 사별특별공제제도를 두어 남편이 사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단 미망인이 과세연도 개시전에 재혼하지 않는 경우이다)에 대해 일정한 액수의 사별공제를 해 주고 있다.²⁸⁷⁾ 독일은 유산 취득세제를 채택하여 상속인 각자의 취득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는 25만마르크를 일반적으로 공제받고 추가로 25만마르크의 특별공제를 한다. 프랑스에서도 33만프랑의 배우자일반공제와 4천프랑의 특별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또 배우자공제 한도액 수준도 각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세유형의 측면에서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비교하면, 유산과세형의 미국과 영국에서는 유언²⁸⁸⁾에 의한 재산 분할이 일반적이고 또 우리의 협의분할과 같은 제도가 없으며 배우자상속분의 전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액이 동일하다면 배우자공제 한도액이 우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산과세형인 대만의 경우 유언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재산 분할이 일반적이고 우리보다 엄격한 부분공제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산액이 동일하다면 배우자공제 한도액이 우리보다 작다. 한편 취득과세형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공제한도액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세대1회 과세 원칙에 충실하려 할 경우 이들 국가도 배우자 상속 재산에 대해 전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부분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⁹⁾

287) 정승은, 1995, 앞의 논문, 46면.

288) 미국의 각 주는 의 법적 효력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망시 배우자에게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법적지분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소재하는 주의 재산분배법에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게 된다.

289)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의 납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에서 상이하므로 양 과세유형의 배우자 공제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하는 작업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납세액은 상속인수와 기타 공제의 유무, 그리고 공제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표 4-8>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국제 비교

구 분		공제방법	공 제 액
유산과세형	미 국	취득가액공제	전액공제
	영 국	취득가액공제	전액공제
	대 만	취득가액공제	200만원(NT\$)
	한 국	취득가액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30억 한도),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취득과세형	독 일	취득가액공제	일반공제 중 배우자분 25만DM와 배우자특별배려공제 25만DM
	프랑스	취득가액공제 세액공제	배우자공제 32만 프랑 및 4천 프랑의 세액공제
	일 본	세액공제	상속세총액×((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과 배우자의 과세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각 상속인의 과세가액의 합계액)

주요국가의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및 그 공제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916년과 1924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처음으로 각각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양자는 별개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 당시의 상속·증여세 체계하에서는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었다.

1939년의 세입법(Revenue Code)에 이르기까지도 미국에서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었고,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반을 피상속인의 총유산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다 1942년의 세입법에서는 부부독립재산제를 시행하는 주와 부부공동

재산제를 시행하는 주의 주민의 상속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유언 집행자의 조사를 통하여 배우자 일방의 독립재산 또는 그의 지분임이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부부공동재산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총유산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상속세에서의 배우자공제제도는 1948년의 세입법에서 비로소 나타났다. 그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조정유산총액의 50%이었다. 이는 사망한 배우자가 그의 독립재산의 반을 면세로 생존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1976년 이르러 의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해서 무상이전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누적합산하는 입법조치(조세개혁법: The Reform Act of 1976)를 취했다. 그 결과 재산상속은 사망자의 마지막 증여(final gift)로 취급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금액에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통합이전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을 적용해서 상속세액을 산출했다. 따라서 종전에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각각 별도로 인정되던 세액공제도 단일한 세액공제로 통합되었다.²⁹⁰⁾ 배우자공제액은 조정유산총액의 50%와 25만 달러 중 큰 쪽을 상한으로 허용되었다.

1981년의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에서는 (transfer tax)²⁹¹⁾의 과세단위를 개인에서 부부로 변경하는 개혁을 취함에 따라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금액 제한없이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배우자공제가 무제한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현행 제도가 형성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미국 국적자이면 기본적으로 전액

290) 즉 통합이전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를 말하며,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합이전세액공제한도는 \$192,800이다. 이는 과세가액 \$60만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개인은 자신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평생동안 이 한도액의 미사용잔액을 이월해가면서 공제받을 수 있다.

291)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전세(transfer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면제되지만, 받는 이가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적격국내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²⁹²⁾ 배우자공제는 조정총유산(순적격유산; adjusted gross estate)²⁹³⁾의 크기로 한정된다. 곧 연방 및 주정부의 사망세(death taxes),²⁹⁴⁾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장례비 및 유산관리비 등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정된다.

법개정 전까지는 25만 달러와 조정유산총액의 50% 중 큰 쪽을 상한으로 허용하였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배우자공제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첫째 1981년 9월 12일 이전에 행해진 유언이나 신탁에 배우자공제 상한조항이 들어 있고, 이 조항이 상기일 이후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수정되어 무제한적인 배우자공제를 허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둘째 주가 유산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가지이다.

2) 영국

영국에서는 현행 상속세의 모태가 되는 유산세(Estate Tax)가 1894년에 도입되어서 1974년까지 시행되었는데, 이는 유산과세형에 속했다. 자산의 생전이전(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망전 7년내²⁹⁵⁾에 행한 생전이전만을 사망유산에 합산해서 과세했다. 배우자간 자산의 생전이전에 대해서 1961년에는 Finance Act에 의해 비과세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유산세가 폐지되고 자산이전세(Capital Transfer Tax)가 시행되었다. 자산이전세에서는 증여자가 평생²⁹⁶⁾ 동안 행한 모든 증여액

292) NU Law Services National Underwriter.

293) 조정총유산액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장례비, 유산관리비, 부채, 각종 세금 및 상속재산 관리 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94) 상속세를 연방에서는 유산세(estate tax), 각 주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tax),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사망세(death tax)라고 부른다.

295) 1894년에는 1년으로 시작했으나 1910년에는 3년으로 1946년에는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증여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을 누적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자산이전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유산에 대하여는 생전이전과세시에 도달한 초과누진세율상의 한계세율점에서 그 세율 적용이 시작되도록 하였다.²⁹⁷⁾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했다.

1986년 3월에는 다시 이제까지 시행되던 자산이전세가 폐지되고, 동년 4월부터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시행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국 배우자간 재산이전은 완전면세로 이를 배우자면세라고(spouse exemption) 한다. 즉 증여이든 상속이든 그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특별신탁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 면세하고 있다.²⁹⁸⁾ 단 증여나 유증의 경우 일방의 배우자(증여자나 유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타방의 배우자(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해외에 주소를 두었거나 비영국인일 경우 면세액은 £55,000가 상한이다. 한편 증여나 유증이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이전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행해질 때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3) 독일²⁹⁹⁾

상속 및 증여과세제도의 연원은 1906년의 독일제국상속세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59년에 새로운 상속세법의 제정이 있었고, 현행법³⁰⁰⁾은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통합형으로 단순누진세율구조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독일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배우자 법정

296) 1981년부터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297) 최명근, 『상속과세론』, 세경사, 199, 137-138면.

298) IBFD(1995), *European Tax Handbook 1995*, Juhani Kesti, LL.M. ed, IBFD Publications, p.565.

299) IBFD, 1995, 위의 책, p.181.

300) 독일 상속·증여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재산취득자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의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4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류 내지 제3류는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로부터 분류하고 제4류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다. 신분관계에 따라 세율과 인적공제가 상이하게 적용된다.

상속분은 1/4이고, 나머지 3/4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³⁰¹⁾

그리고 혼인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재산은 증가재산공동제에 의하며, 이는 법정재산제이다.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증가재산은 증가재산공동제가 종료하는 때에 청산된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증가재산공동제가 종료하는 때에는 법정상속의 경우 생존배우자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며,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재산의 1/4만큼 증가해서 상속분이 상속재산의 1/2이 된다. 증가재산공동제에서 발생하는 청산채권은 부부재산공유제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때 청산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청산채권액은 증가재산공동제의 종료시에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재산가액에 의하여 정한다.³⁰²⁾

독일의 상속세는 상속취득분(Erbanfall)에 대한 과세이다. 즉 개인의 유산에 대해서(유산과세)가 아니라 상속인에게 유산으로부터 귀속되는 富의 증가에 대해 부과되는 것(취득과세)이다. 증여세는 생존자간의 증여를 통해 상속세가 회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증여도 상속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Erbbschaft steuerund Schenkung-steuergesetz, 1997)에 의해 규율된다.³⁰³⁾

독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중 상속인과 수증자별 신분에 따라 허용되는 인적 공제는 모든 상속인 및 수증자에게 허용되는 일반공제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특별배려 공제로 대별된다.³⁰⁴⁾ 공통으로 배우자 60만마르크, 자녀 및 양자녀 40만마르크의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그에 더하여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27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배우자 50만마르크, 자녀는 연령에 따라 2만마르크에서 10만마르크 사이이다. 이와 같은 공제는 동일인들 사이의 증여에 대해 10년간 동안 한 번만 적용받는다. 따라서 10년간의 증여는 합산되어 한 건의 증여로

301) 山田晟, p.166(최명근, 1990, 앞의 책, 118면에서 재인용).

302) 税法研究所, pp.5-6 (최명근, 1990, 앞의 책, 118-119면에서 재인용).

303) 이명현, 1999, 앞의 논문, 76면.

304) IBFD, 1995, 위의 책, p.181.

취급된다.³⁰⁵⁾

4) 일본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의 상속세제는 1950년 Shoup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승계과세형(accession tax type)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사회관행과의 충돌 및 세무행정상의 어려움 등³⁰⁶⁾으로 인하여 1953년에 이를 폐지하고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취득과세형 상속세제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의 폐단이 노출되자 세제조사회의 권고에 따라 1958년의 세제개정에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³⁰⁷⁾이라는 절충형을 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일본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배우자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그 법정상속분은 1/2이고, 나머지 1/2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분의 지정은 유류분(遺留分)을 어길 수 없으며,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때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일 때에는 피상속인 유산의 1/2이다.

1950년 Shoup의 권고에 따른 세법개정에서 배우자공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가액공제법을 채택했는데, 그 공제액은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의 1/2상당액으로 하였다. 1958년의 개정에서 가액공제법을 세액공제법으로 전환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1/2세액공제를 허용했다. 1966년~1974년의 기간중에는 결혼년수를 고려해서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했다. 1968년의 개정에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세액의 전액공제로 바꾸었다. 배우자 세액경감제도(공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배우자가

305) 이명헌, 1999, 앞의 논문, 77-78면.

306) 최명근, 『상속과세론』, 세경사, 1990, 137-138면.

307)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이란 과세되는 유산총액, 법정상속인의 수,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것이 많고 또 배우자의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배우자 세액경감제도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상속세 총액에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자의 상속세 과세가격의 합계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 배우자 공제 경감액이다³⁰⁸⁾.

① 과세가격 합계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얻은 금액. 이 금액이 1억 6천만엔에 미달할 경우에는 1억 6천만엔. 즉 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② 배우자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경감을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기간에 대해선 전혀 제약이 없으며 또한 배우자가 대상분할에 의해 다른 상속인에 대해 부담하는 대상재산을 급부하는 채무는 ②의 배우자 취득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다. 또한 상기의 ②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내에 분할(일부분할도 포함한다) 등에 의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계산한다.

5) 기타 국가

프랑스에서는 33만 프랑의 배우자공제가 인정되며, 이외에도 배우자에게는 4만 프랑의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고³⁰⁹⁾ 대만³¹⁰⁾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유산총액에서 200만원(NT\$)을 차감하고 있다.

308) 상기 내용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l} \text{상속세 총액} \times \frac{\left. \begin{array}{l} \circ \text{ 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 \\ \circ \text{ 배우자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nd{array} \right\} \text{중 적은 금액}}{\text{각 상속인의 과세가격의 합계액}} \\ = \text{배우자세액 경감액} \end{array}$$

309) IBFD, 1995, 앞의 책, p.163.

310) 한상국,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5, 104면.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과세

일본은 혼인의 취소,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여받은 경우(일본 민법 제768조)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혼인중 부부협력에 의해 얻은 재산액을 초과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수단으로 증여나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 분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에 의한 취득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相續稅基本通達 62條).³¹¹⁾

V. 소결: 성 평등 관점에서의 각국의 소득세제의 정리 및 시사점

1. 공평과 자율성에 입각한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개인단위주의와 합산분할주의 중 과세단위를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상 어떤 과세단위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선택가능성의 부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과세단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영국의 경우 종래 기혼자인 남편은 추가공제(extra allowance)를 받고 추가공제액이 남편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1993년부터는 남편의 소득에서 우선 공제하거나 부부가 추가공제액의 1/2씩을 각각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311) 이양자, “개정가족법과 세법상의 문제: 세법개정에 대한 제안”, 개정가족법과 한국사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가족학회주최 학술세미나 자료, 1990, 261면.

고 있는데, 이 역시 부부가 세금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한 예라고 할 것이다.³¹²⁾

2) 가구간의 공평 도모

또한 선진국의 경우 어떤 과세단위를 따르건, 가족구성 및 가구경제활동을 달리 하는 가구간에 공평성이 증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과세등급을 달리 하거나 세율을 달리 하는 것으로써 일차적으로 수행된다.

예컨대 미국은 세율표를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 공동신고를 선택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person),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4종으로 세분함으로써 과세단위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경감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사노동을 고려하는 세제

가사전업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배우자공제, 결혼공제, 인적 공제, 부부에 대한 표준공제의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경감하는 반면, 맞벌이부부는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가사노동을 평가하여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측정이 어렵고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서구에서도 이는 하지 못하고 대신 맞벌이가구의 가사 및 육아비용에 대해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일정 한도를 설정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는 실제의 비용을 설정된 한도까

312) 부부에게 합산 또는 개별신고의 선택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선진국만이 아니다. 필리핀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기혼자는 합산신고 혹은 개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2002, 앞의 책, 인용은 한국조세연구원, 2002, 앞의 논문, 51면.

지 소득공제하고 있다. 또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은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맞벌이부부에게는 실제 지출된 모든 탁아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3. 여성의 삶을 반영한 과세소득 범위

선진국, 특히 북구 국가들에서 과세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임금과 관련된 급여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예컨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국가의 경우 출산급여에 대해 다 과세하고 있고³¹³⁾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의 육아 및 입양관련 급여³¹⁴⁾도 통상임금과 같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에서도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둔 가정에 주어지는 간호수당³¹⁵⁾이 과세된다. 또 미국은 이혼위자료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여성의 삶 중 중요한 활동과 여성이 담당하는 주요한 활동에 따른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세제상 고려해 넣는 한편, 자녀수당 및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한 급여에는 과세가 면제되는 추세이다. 특히 가족과 자녀에게 주어지는 현금급여액은 가장 큰 비과세 항목이다.³¹⁶⁾

313) 한도숙, 2000b, 앞의 논문, 48면, <표4> 참조.

314) 노르웨이에서는 근로여성이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혜택을 받고 1년간의 부모 육아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후 일괄보조금으로 32,138NKK(약 3645달러)를 지급받는다. 또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시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입양시에도 양부모는 각각 4주의 입양휴가 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한쪽 부모가 이 의무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이전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만 나머지 입양관련 육아휴가기간은 부모간에 이전이 가능하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1765NKK(약 200달러)의 일괄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해외로부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22000NKK(약 2500달러)의 현금보조금이 지원된다. 한도숙, 2000a, 앞의 책, 43-44면.

315) 자녀가 16세미만이고 질병, 정신지체 또는 다른 형태의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최소한 6개월 동안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필요로 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한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자녀의 질병 또는 기능적 장애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면 부모는 간호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간호수당은 간호에 필요한 비용과 증가된 비용까지를 포괄한다. 한도숙, 2000a, 앞의 책, 67-68면.

316) 한도숙, 2000a, 앞의 책, 122면.

4. 육아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상 지원

부양자녀에 대한 공제도 육아에 대한 중요한 세제상의 지원이다. 앞서 본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자녀 부양에 대한 공제는 실질적인 양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일반가족수당과 자녀수당³¹⁷⁾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매 분기초에 지급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으로부터 지원된다.³¹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는 스웨덴도 자녀수당³¹⁹⁾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317) 일반적인 가족수당: 일반적인 가족수당은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연간 1인당 0세~2세의 자녀에게는 10,200DKK(1996년 기준), 3세~6세의 미취학 자녀에게는 9,100DKK, 7세~17세의 자녀에게는 7,100DKK가 각각 지급된다. 일반가족수당의 수급요건으로는 부모가 덴마크 납세자이며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결혼 또는 정부의 보조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자녀수당: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다양한 종류의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일반자녀수당(ordinary child allowance)은 독신 부모와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양부모가 대상이며 자녀 당 연간 4,520DKK(1996년 기준)가 지급되고 있다. 추가자녀수당(extra child allowance)은 일반자녀수당에 추가로 자녀와 동거하는 독신 부모에게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3,452DKK가 지급된다. 특별자녀수당(special child allowance)은 한 쪽이나 양쪽 부모가 연금수급자인 경우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도 특별자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별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 연간 8,676DKK가 지급되며 고아의 경우는 이 금액의 두 배가 지급된다. 다태아 출산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이 자녀가 7세가 되기까지 자녀 1인당 연간 5,888DKK가 지급된다. 입양수당(adoption allowance)은 인정된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아동을 자녀로 입양할 경우 일시불로 32,212DKK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입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녀수당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부모 중 1인이 덴마크 국적을 소유하거나 자녀수당을 지급받기 직전 최소 1년 전부터 덴마크에 거주하여야 한다. 특별자녀수당의 경우는 수급직전의 국내 거주기간이 최소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가 기혼이거나 정부로부터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숙, 2000a, 앞의 책, 33-34면.

318) 한도숙, 2000a, 앞의 책, 35면.

319) 자녀수당은 기초 자녀수당, 확대 자녀수당, 추가 자녀수당으로 구성된다.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녀가 16세가 된 해의 1/4분기까지 기초 자녀수당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이 이후에는 확대된 자녀수당을 자녀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는 추가적 자녀수당을 받는다. 한도숙, 2000a, 앞의 책, 60면.

노르웨이는 부양자공제(provider allowance)로 19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1998년의 경우 부양자공제는 16세이하의 부양자녀에 대해 연간 1820NKK(206달러)가 허용되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16-18세인 경우는 자녀 1인당 2540NKK(288달러)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³²⁰⁾ 16-18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독신부모가정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2540NKK(288달러)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그런가 하면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보육료 비용의 공제명목의 소득공제인 부모공제(parental allowance)가 허용된다. 부모공제는 자녀가 1인인 경우 최고 20700NKK(2350달러)가 허용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24700NKK(2800달러)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는 부모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또 장애인 자녀의 경우 관련비용에 대해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도 특별공제가 허용된다.³²¹⁾ 이에 더하여 노르웨이에서는 일반 자녀수당뿐만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³²²⁾ 즉 노르웨이는 육아 및 입양을 위한 일괄보조금³²³⁾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주어지는 자녀보조금에 의해 우선 일차적으로 행해진다(다만 거주납세자에 한해 지급된다). 자녀보조금은 매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두 번째 자녀까지는 3천 마르크(약 180만원),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3,600마르크(약 216만원), 네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4,200마르크(약 252만원)가 공제된다.³²⁴⁾ 프랑스 역시 부양자녀 공제를 두고 있는데, 자녀 당 2만 7,120프랑의³²⁵⁾ 공제가 허용된다.³²⁶⁾

320) 단, 16세 이상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감액되거나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321) 한도숙, 2000a, 앞의 책, 50면.

322) 한도숙, 2000b, 앞의 논문, 55면.

323) 노르웨이에서는 근로여성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 후 일괄보조금으로 32,138NKK(약 3645달러)를 지급받는다. 여성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1765NKK(약 200달러)의 일괄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해외로부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22000NKK(약 2500달러)의 현금보조금이 지원된다. 한도숙, 2000a, 앞의 책, 44면.

324) 전영준, 2002, 앞의 논문, 20면.

5. 돌봄노동에 대한 세제상 지원

호주는 가정부(간병인), 병약한 친척부양 등에 대해서도 환급 및 세금감면 (Rebate/Tax Offsets)을 하고 있다.³²⁷⁾ 즉 호주에서는 부양자녀, 병약한 친척, 장애인인 배우자를 위해 가정부(간병인)를 전일로 고용할 경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약한 친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한 명당 최고 \$603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처부모에 대해서는 최고 \$1204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독일도 노인, 환자에 대한 가사지원자 고용비용 등도 이상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돌봄노동(care labour)에 대한 호주나 독일의 세제상 지원은 우리의 경우 노인 등을 돌보는 주된 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만하다.

6.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폐지 추세

선진국에서의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의 흐름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을 필두로 하여 혼인중의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물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하는 등 부부의 공동생활성과 처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부의 자율성을 진작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325)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

326) 전영준, 2002, 앞의 논문, 21면.

327) 정재호, “호주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0년 11월호, 68면.

제5장

성 평등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I.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195
II. 과세단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201
III. 과세범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202
IV. 공제제도의 구체적 개편방안	204
V. 부부재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안	207

그 어느 영역보다도 세제는 매년 변화가 큰 분야이다. 소득세제만 해도 2003년에도 예외없이 몇 가지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중에는 성 평등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항목들도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2002년 8월 29일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동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자산소득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³²⁸⁾ 과세단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교육비에 대한 근로자 특별공제가 확대되는³²⁹⁾ 등 양육에 대한 지원수준도 상승되지만 남녀 모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조세제도상 좀더 성 평등이 보장되고 여성의 삶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I.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1. 남녀차별적 규정의 개정

특히 현행 소득공제 관련 규정은 남녀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전형적인 상에 입각해서 짜여 있는바,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요청된다.

예컨대 맞벌이여성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연 50만원씩의 소득공제(부녀자공제)나 6세이하의 직계비속여성이 있는 맞벌이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1인당 연 50만원씩의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여성이

328)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도 기존에는 배우자로부터 10년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됐으나 3억원으로 낮아진다.

329) 2003년부터 유치원생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육아를 담당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서, 부녀자공제의 경우는 독신여성 및 남성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는 독신여성 및 기혼남성에 대해 각각 차별적인 규정으로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여성의 삶을 고려한 과세

실질적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규정상의 남녀차별을 시정하여 조세제도 역시 남녀의 동등성의 기초위에 제도를 편성하는 것 못지 않게 남녀의 현실적인 삶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이혼생활보조금 자체는 소득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소득 이하의 자의 경우 이혼생활보조금을 조정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이혼 후 생활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호주나 독일은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직접적으로 여성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돌봄노동(care labour)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규정상의 남녀 구분의 위험을 방지하면서 여성의 활동이 세제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3. 적절한 과세단위의 채택

어떤 과세단위든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만큼, 혼인부부에게 적절한 과세단위를 채택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는바,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부부의 소득과세는 공평성, 효율성, 간편성, 결혼에 대한 중립성 등 소득세의 기본적 이념과 민법상 부부의 재산제도와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가계간 소득분배의 공평과, 결혼의 공동경영성을 참작한다면 소비단위주의가 개인단위주의에 비해 우월하다. 그렇지만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

게 되면 소득세제는 결혼에 대하여 중립성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산비분할주의는 결혼에 대한 제재(marriage penalties) 또는 결혼세(marriage tax)로 작용하며, 합산분할주의는 결혼에 대한 은전 또는 보너스(gifts or bonuses)로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단위주의 중 합산비분할주의는 2차소득자, 우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세무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단위주의는 세부담 절감을 위한 위법적인 노력때문에, 부부나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는 자료수집의 문제 때문에 양쪽 다 어려움이 있다.

민법상의 부부재산관계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부부별산제를 취하지만 각각의 명의로 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공유로 인정될 때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사실상의 공유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제상의 소비단위주의는 그 원칙에서, 개인단위주의는 그 해석에서 부조화를 나타낸다.

둘째, 독일이나 미국은 부부합산과세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선택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반면, 최근 위헌판결을 받은 우리나라의 자산합산과세규정은 강제적이었다. 그와 같이 세무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유사 추정규정들이 앞으로도 사법부의 도마에 오르기 전에 신고납세의무가 부과된 세목의 납세자들에게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³³⁰⁾

우리의 경우 개인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의 경우에도 종래 부부합산과세를 하다가 이제는 개인과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에서는 수직적 공평과 혼인의 중립성은 달성되지만 가구간의 수평적 공평은 달성되지 않으며, 아울러 부부재산제의 실질과 조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30) 노영훈, 2002, 앞의 논문, 42-43면 참조.

4. 맞벌이부부의 가사 및 육아비용의 보전

현행 소득세법은 가사노동을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 경우 취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가사와 육아비용을 세제상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같이 가사일을 하면서도 전업주부와 맞벌이주부 사이의 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가사와 육아비용에 대한 보전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현재 여성위주의 미약한 소득공제로 이를 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사와 육아가 비단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사회 역시 이에 공동책임이 지워져 있는 작금에는 그 정당성이 미미하므로, 향후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맞벌이가구의 남녀 모두의 가사와 육아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의 세제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스웨덴처럼 실제 지출된 모든 탁아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등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국가처럼 실제의 비용을 설정된 한도까지 소득공제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것도 차선일 것이다.

5.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 확대

선진국은 배우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폭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자녀양육이 다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출산을 저하의 우려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2001년 11월의 개정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모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며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양육에 대한 지원은 비단 일하는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의 경우는 향후 저소득가구의 만 5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

다는 방침³³¹⁾이지만 보육이 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보육에 대한 지원 역시 비단 저소득층에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세제상의 지원은 그에 대한 혜택을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도 육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자녀에 대한 50만원씩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나,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 대한 100만원씩의 교육비특별공제가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밖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3호)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 등도 보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봤듯이, 현재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여성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성 고정관념에 터잡아 그를 강화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 액수가 작아 비용보전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 모두의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좀더 현실적인 수준의 보육비 지원이 세제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모성보호에 대한 세제상 지원

2001년 11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 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모성의 건강 및 남녀 모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는 한편, 출산율저하 억제 및 양육의 사회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으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331) 만0~4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기준은 2002년도에 비하여 15만원 증액된 월125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로 결정하였고,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는 전년도 160만원 이하에서 215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2003년 1월 3일자 보도자료 참조.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1월분의 산전후휴가급여(상한: 135만원) 및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 등을 비과세로 하는 방법 또는 출산시 그해의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출산공제’를 도입³³²⁾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20만원에 불과하므로 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실비변상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하고 있는 점(소득세법 제12조 4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비추어 봐서도 비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부부간 재산이동에 대한 원칙적 면세

혼인관계 중 부부간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일률적인 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산명의를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문제가 우려되지만, 탈세 여부 역시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는 실무상 많은 곤란³³³⁾이 예상되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가사노동 및 재산관리활동에 대한 유형별 평가산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332)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권주미의 자문의견으로부터 따온 제안이다.

333) 실제로,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상을 서기관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을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판정하기는 실무상 거의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II. 과세단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1. 이분이승제의 선택적 도입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따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주부의 일의 가치를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고, 근로여성의 근로관련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각 가정의 실질소득 차이에 따른 응능부담원칙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합산과세가 바람직할 것이나, 결혼후 세부담의 급증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응능부담에 따른 수평적 형평과 여성의 고려에 가장 적합한 과세방법이 부부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다음 그 나눈 소득금액에 초과 누진구조의 소득세 세율을 각각 적용,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세액에 다시 2를 곱한 금액을 부부가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2분2승법이다.³³⁴⁾

이 제도는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가사관리 내지 가정관리에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것임을 소득과세에서 긍정하는 것이므로 남녀 평등의 원리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분2승제는 단순히 2분2승을 하기 때문에 혼인에 의한 규모의 이익(economics of scale)을 통한 비용의 절감을 전혀 무시함으로써 기혼자를 독신자보다 지나치게 우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분할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규모의 이익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크기의 가계의 생계비지수에 의하여 규모의 이익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기혼자와 독신자와의 세부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2분2승제는 맞벌이부부의 처가 얻은 소득은 합산하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관련한 귀속소득(imputed income)에 대하여는 측정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합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보다 어느 한쪽만 버는 부부를

334) 동지: 정승은, 1995, 앞의 논문, 75면.

우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육아비용(childcare expenses)의 공제와 직업에 종사함에 따라 일정한 귀속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한 일정한 특별 공제가 필요할 것이다.

2. 과세단위의 선택 보장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과 더불어 가족의 공동경제생활성, 그리고 과세단위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미국처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주의 중 이분이승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의적으로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간의 거래에 의하여 소득분산을 기도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되, 특히 이자소득³³⁵⁾ 및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맞벌이부부에 대하여는 한쪽이 버는 부부보다 추가비용 및 일정한 귀속소득을 고려하여 일정한 특별공제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율표는 규모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복수세율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과세범위의 구체적 개편방안

1.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비과세

2001년 11월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추가된 1월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근로소득이 주어지지 않는 기간의 것이고 더구나 모성건강 및 육아비용보전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

335)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한다(상법 41의4①).

지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급여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세대 1주택 판단의 남녀평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남녀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상속주택은 남성상속인을 우선적으로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는 것으로서 여성에게 이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는 호주승계인, 즉 남성이라는 관념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성 평등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했지만 2003년부터는 그런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 만큼³³⁶⁾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자격 및 상속으로 인한 2주택과세의 위험도 남녀 공히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결정에서 호주승계인을 삭제하여 남녀 모두 같은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현재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을 규정함에 있어 남성은 60세이상인 데 비해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성 평등의 관점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의 연령을 남녀가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36) 다만 2002년내에 상속받은 경우 2003년말내에 팔면 면세된다.

IV. 공제제도의 구체적 개편방안

1.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남녀 연령 차이 폐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두고 있는 남녀의 5년의 연령 차이는 폐지하여 남녀 공히 6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³⁷⁾

2. 배우자공제 폐지

결혼에 대한 중립성 및 남녀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과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적은 공제금액으로 전업주부에 의한 지원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배우자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녀자 추가공제 폐지

배우자가 있는 근로소득여성, 즉 맞벌이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1인당 50만원씩의 부녀자 추가공제는 기혼여성의 육아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의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독신여성과 기혼여성간도 차별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³³⁸⁾ 따라서 맞벌이여성에 대한 부녀자 추가공제는 폐지해야 한다.

337)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도 같은 의견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상을 서기관은 이에 대해, 남녀 모두 60세로 하여야 마땅하지만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의 전화 부부재산공동명의운동팀을 비롯한 여성계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 평등의 차원에서 남녀의 연령을 같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33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상을 서기관의 자문의견 및 同旨.

4. 여성세대주 추가공제의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로의 전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부녀자 추가공제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다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세대주와 대우를 달리 할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제는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도 남녀 가구주는 동등하게 대우하는 추세이므로 이 역시 폐지하고, 대신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모두 적용되는 한부모세대주 추가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자녀양육비 공제의 남녀 공동 혜택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소득자 및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1인당 50만원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양육비에 대한 보전의 의미는 있지만 여성이 육아를 전담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므로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모두에게 각각 25만원씩을 공제하여 남자 및 여자의 어느 일방에게만 주어지는 성 차별적 혜택을 반반씩 나누어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³³⁹⁾

다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나누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를 보다 단순화하자는 추세가 있는 만큼, 뒤에서 언급할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좀더 혜택이 큰 세액공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39)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의 자문의견 중 제안에서 따 왔다.

6.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하여 공제혜택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근래 출산율 저하현상과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진국처럼 양육비 세액공제는 부양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제 금액을 향상시킴으로써 출산장려책의 효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세대주 위주의 주택자금특별공제의 조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고 있는 주택자금특별공제는 비기혼독신자와 기혼자를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혼인관계중 대체로 세대주가 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산권획득과 세제혜택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일정연령 및 소득 이상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8. 기부금전액 특별공제시설에 청소년성보호관련시설 포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역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기부금도 전액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동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주로 여성청소년이 그 보호를 받는 시설이므로 여성인권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9. 특별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의 기부금 추가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또는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기부금은 오직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하고 있다. 때문에 주부들은 자신이 사회단체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단체에의 기부는 소수 부유한 계층만의 의무이자 특권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자연스러운 공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시점이므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역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그간 기부를 통하여 사회단체활동을 해 온 주부들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의미도 가지게 될 것³⁴⁰⁾이다.

V. 부부재산세제의 구체적 개편방안

1.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원칙적 면세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에 대해 일정 금액(종전 5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는 3억원)을 공제해 주는 배우자 공제제도로 실제상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에 있어 증여세가 문제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기혼여성이 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그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10년간 3억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부는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340) 참교육학부모회 이석재 총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인경 사무국장 등 관계자도同様이다. <한겨레> 2002.12.30일자.

나 영국의 예처럼, 원칙적으로는 부부간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한 혼인연수 이상의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도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당해 연수가 혼인유지를 강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부부의 공동경제성이 일정한 혼인연수를 전후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혼인연수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산소득도 부부개별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인위적인 자산은닉이 우려되므로,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차후에 배우자 협력분을 평가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배우자 상속세의 원칙적 면세

배우자의 협력의 가치와 그 중요성은 혼인중 배우자간 재산이전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을 통해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일어날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먼저, 현재 5억원인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제도상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혜택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한계가 있어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중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 원칙적 면세와 조응한다면 상속으로 인한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면세해야 한다. 더욱이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1세대 1회과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향후 당해 상속배우자의 사망시 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 상속세를 완전히 면세하기 전 단기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간 재산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타방

배우자의 협력을 먼저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몫을 분할한 후 자신의 지분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산분할 관련 지방세의 조정

1)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의 비과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역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지방세법 110조)이나 유감스럽게도 실무상으로는 2%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2) 재산분할로 인한 등록세의 세율 인하

등록세도 공유물의 분할로서 0.3%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실무상으로는 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지방세법 131조 1항)이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이와 같은 조세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이혼위자료 양도소득세 폐지

그간 이혼시 받는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조의 부동산이나 주식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과해 왔다. 그렇지만 같은 위자료에 대해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위자료의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인애(1981), 『소득세법』, 진영사.
- 국세자료편집회(1996), 『국세행정실무편람: 국세상담자료편람, 상,하』.
- 국세청(1995-2001),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2002), 『2002년 개정 세법 해설』.
- 고창현(1984), “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 가족법의 제문제, 법무부 법무자료 제 55집.
- 김덕환(199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고시계』, 통권 430호.
- 김명산(1998),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1994), “배우자 재산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1995),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석(2000), 『소득세법론』, (주)광고아카데미.
- 김정자(1990), “우리나라 탁아현실과 문제점,” 『여성』, 4월호.
- 김재길(1983), “조세법상의 소득개념에 관한 학설의 검토,” 『월간세무사』, 서울세무사회.
- 김재진(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72호, 6월).
- 김주수(1991), 『친족·상속법』, 법문사.
- 김준식(1996),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환(199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세법상의 문제점 : 배우자 재산상속과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권(1991), “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태종(1986), “인적공제제도를 통한 담세적정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 외(2001), “여성과 국가경쟁력,”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9주년 기념 심포지엄.

- 김혜진(198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혜(1990), “가내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노영훈(2002),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험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77호 11월).
- 류한성(1985), 『재정학』, 박영사.
- 명진숙, “생리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2002년 9월호.
- 박기백(1999),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36호, 6월).
- 박영란 · 황정임 · 김진경(2002),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창균(2001), “폴란드의 조세개혁,”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60호, 6월).
- 박현수(1990),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부(1992), 『보건사회백서』.
- 서희열(2002), 『소득세법』, 세학사.
- 신열호(1993), “근로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동훈(1984), “한국의 개인소득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후영 · 신인령(1989), 『법 여성학: 평등권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명현(1999), “독일의 조세,”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40호, 10월).
- 이신우(1997), “조세제도의 소득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범(1986), “개인소득세제에 관한 소고,” 『대구대경상과학』(7호, 12월).
- 이양자(1990), “개정가족법과 세법상의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5호.
- 이양자(1990), “개정가족법과 세법상의 문제: 세법개정에 대한 제안,” 개정가족법과 한국사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가족학회주최 학술세미나 자료.
- 이영환(1988), “개인소득세제의 주요쟁점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이노 야스시(2000), “세계상의 남녀불평등”, 테레사 쿨라빅 외 저,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이장규(2000), “캐나다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50호, 8월).
- 이재기(1990), “상속과세제도의 장기개편 방향,” 한국조세 연구 제6권.

- 이중남(1975), 『조세법연구』, 법조문화사.
- 이준구(2001), 『재정학』, 다산출판사.
- 이준규(2002), 『소득세법』, 경영과 회계.
- 이창희(2001), 『세법강의』, 박영사.
- 이철인(2000),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43호, 1월).
- 이철인(2000), “영국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47호, 5월).
- 장연충(1975), “종합소득세제도화에 따르는 인적 소득공제에 관한 고찰 : 근로소득자에 대한 인적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웅(1987),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재무부(1979), 『한국세제사』 상권.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02),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 전영준(2002),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68호, 2월).
- 전영준(2000), “미국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0년 1월호.
- 정승은(1995), “남녀 평등의 시각에서 본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진(1999),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호(2000), “호주의 조세제도(I),”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53호, 11월).
- 정재호(2000), “호주의 조세제도(II),”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54호, 12월).
- 최 광(1988), “세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 개인소득세 구조의 개편과 과제,” 『국회보』 (263호, 9월).
- 최 광(1990), “남녀평등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 제6권, 한국조세학회.
- 최 광(1990), “여성과 세법개정,” 세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
- 최 광(1990), “세법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 최 광(1994),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권 확립과 세제면에서의 보완방안』, 정무장관 (제2실).
- 최명근(1990), 『상속과세론』, 세경사.
- 최송열(1979), “소득세 적정부담에 관한 연구 : 인적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영주경상전문대논문집』(2호, 4월).
- 통계청(1991), 『장래인구추계』.

- 한국여성개발원(2001a),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30-7.
- 한국여성개발원(2001b), 『여성통계연보』, 연구보고서 230-13.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0), 토론회(2000.10.26) 자료집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조세연구소(1996),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1996), 『주요국의 조세제도』.
- 한국조세연구원(2002),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II,” 『재정포럼』(69호, 3월).
- 한규수(1986), “조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시립대 논문집』 20-2집.
- 한도숙(2000a),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한도숙(2000b), “북구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54호, 12월).
- 한상국(1998),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한상국(1995),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국외문헌

- 監査法人 トーマツEC綜合チーム(1992), 『EC加盟國の税法』, 中央經濟史.
- 金子宏(1976), “所得稅における課稅單位の研究,” 『公法の理論』中 田中二郎先生古稀記念, 有斐閣.
- 金子宏(1992), 『租稅法』, 第四版, 弘文堂.
- 吉國二郎(1975), 『法人稅法』, 財經詳報社.
- 吉良實(1984), 『所得課稅法の論点』, 中央經濟史.
- 藤田晴(1992), 『所得稅の基礎理論』, 中央經濟史.
- 藤田良一(1992), 『所得稅の基礎理論』, 中央經濟史.
- 藤田良一(1995), 『所得稅法の重點詳解』, 中央經濟社.
- 三木義一(1983), “資産所得合算課稅制度の合憲性,” 『租稅判例百選(第2版)』, 別冊ジコリスト No.79, 有斐閣, May.
- 稅務經理協會編(1986), 『稅制の抜本改革』, 稅制調査會 第2・第3特別部會中間報告, 稅務經理協會.
- 清永敬次(1980), “夫婦合算果稅,” 『憲法判例百選 II』, 別冊ジコリストNo.69, 有斐閣.

- Aronson, J. Richard; Lambert, Peter J.; Trippeer, Donald R. (1999), "Estimates of the Changing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U.S. Income Tax With International Conjectures," *Public Finance Review*(27, 2).
- Bittker, Boris I.(1975),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27, *Stanford L. Rev.*
- Bittker, Boris I.(1981),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Vol. 4, 2nd edition, Warren, Gorham & lamont.
- Bittker, Boris I. and Eustice, James S.(1990),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 Carter, Kenneth Le M. et al(1966),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Taxation of Income*, Vol. 3.
- Chirelstein, Marvin A.(1994), *Federal Income Taxation*(7th ed.).
- Cohen, Gustav(1885), *Grundlegung der Nationalökonomie*
- Dowell, Stephen.(1884), *A History of Taxation and Taxes in England*, Vol. II.
- Fuisting, B.(1902), "Die Preussischen Einkommen Steuern," *Grundzuge der Steuerlehre* (4. Bd).
- Grossfeld and Bryce.(1983), "A Brief History of the Origins of the Income Tax," 2 *Amer. J. of Tax Policy* 211.
- Haig, R. M.(1921), "The Concept of Income, Economic and Legal Aspects," *Reading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1959.
- IBFD(1995, 1999), *European Tax Handbook*, Juhani Kesti, LL.M.(ed), IBFD Publications.
- IFS(1978),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George Allen & Unwin.
- Mayson, Stephen W. & Blake, Susan(1992), *Mayson on revenue Law*, 13th edition, Blackstone Press Limited.
- McNulty, John K.(1988),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Publishing Co.
- Meade, J. E., George Allen & Unwin.(1978),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IFS.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1999), "The Equitable Redistribution White Paper,"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n Norway, *Summary of White Paper* No.50(1998-90), October.
- Musgrave, R. A. & Musgrave, P. M.(1980), *Public Finance in Theory & Practice*, New York, McGraw Hill, 3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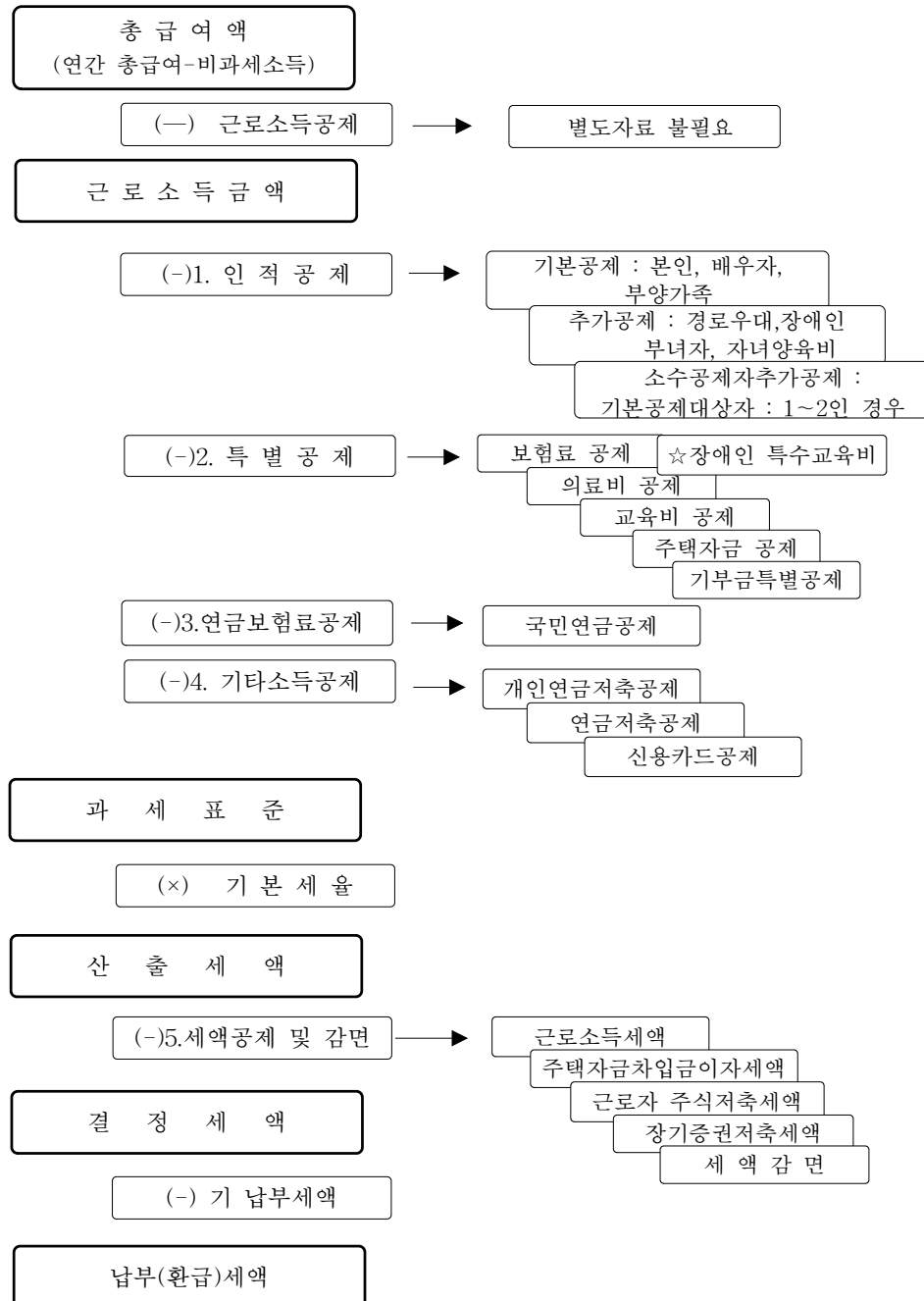
- Nyberg, Anita.(1998), *Women, men and Incomes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Independence*, Government Official Reports 1997, Ministry of Labor.
- Park, Thae S.(1998). "Federal personal income tax liabilities and payments, 1995-96," *Survey of Current Business*(78, 12).
- Pechman, Joseph A.(1983), *Federal Tax Policy*(4th edi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 Ruttenberg, Ruth. & Amy A. McCarthy.(1991), "Women and Tax Policy," in Mary Lou Kendrigan(ed.), *Gender Differences*, Greenwood Press.
- Schanz, G. v.(1896), "Der Einkommenbegriff und die Einkommensteuergesetz," *Finanz Archiv*, 13.
- Seligman, Edwin R.A.(1914), *The Income Tax*.
- Simons, Henry C.(1938), *Personal Income Taxation*.
- Skattemyndigheten.(2000), "The Swedish Tax System: Income From Wages and Capital Income Year 2000," *Sweden*.
- Smith, D.(1961), *Federal Tax Reform*.
- Soos, Pirooska.(1997), *The Origins of Taxation at Source in England*.
- Tipke, Klaus · Joachim Lang(1991), *Steuerrecht*, 13 Auf. 1991
- Wagner, Adolph(1892), *Grundlegung der Politischen Okonomie*(3rd. ed.).
- Wagstaff, Adam; van Doorslaer, Eddy.(1999), "Redistributive effect, progressivity and differential tax treatment: Personal income taxes in...," *Journal of Public Economics*(72, 1).
- Whitehouse, Chris & Elizabeth Stuart-Buttle(1992),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ition, Butterworths.



부 록

<부록 1> 연말정산개요(2002년)	219
<부록 2>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223

<부록 1> 연 말 정 산 개 요(2002년)



1.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요건 : 년소득 100만원(이자,부동산임대소득 모두포함) 이하 자		
	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직계존속	남 : 만60세 이상(42.12.31이전 출생) 여 : 만55세 이상(47.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만 20세이하(1982. 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남 : 만 60세 이상/ 여 : 만 55세 이상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		
	경로우대(100만원)	만 65세 이상(37.12.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100만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사본 제출	
	부녀자(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남편소득유무 관련 없음) - 여성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자녀양육비(50만원)	-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교육비 공제와 중복 불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가 1인일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가 2인일 경우 50만원 추가공제	

2.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전액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별도자료 불필요)
	한도공제 (납입증명서제출)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한도 7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한도 100만원)
의료비공제 (영수증 제출)	①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병원비, 약품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②추가공제대상은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의료비	
	- ①공제의료비(한도 300만원) = 의료비 총액-(총급여액×3%) - ②추가공제 : 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제 『의료비 총액-(연간급여액×3%)-300만원』과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 금액	
	※- 부양가족 중 연령, 소득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도 가능 - 영수증에 띄어 환자명, 질병명,약품명 기재되어 있을 것. - 공제대상 : 보청, 의치, 치열교정,임신중 조음파·양수검사, 분만비, 근시 교정 시술비, 스케일링비, 불임으로 인공수정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레 이저각막절삭 안경, 콘택트렌즈 등. 단, 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장애 진단서 첨부 - 정맥건강진단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은 제외	

교육비공제 (영수증 제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교육비를 부부 중 유리한 쪽에서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가능) - 영유아, 취학전 아동 : 1인 100만원	- 초·중·고생 : 1인당 150만원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 -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주택자금공제 (한도 3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불입액의 40%)	- 00.10.31이전 청약부금가입자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것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 ①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 무주택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원리금상환액(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이자상환액 전액/원금상환액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u>저당권을 설정</u> 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일 것(단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 가능) - 본인명의로 저당권 설정, 차입금상환기간 10년 이상 소유권이전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기부금공제 (영수증 제출) ①전액공제 ②50%한도 ③10%한도	전액공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무료이용가능)에 기부한 금품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에 기부한 금품(시설·교육·연구비)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금품
	일부공제	- 50%한도 적용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특정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10%한도 적용 기부금 : 노동조합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한 기부금(개정경제부흥페이지 참조)
표준공제	- 근로자가 위의 특별공제를 모두 합하여도 60만원 미만일 경우 연60만원까지 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납부전액)	-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별도 자료 불필요)
-----------------	--

4. 기타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00.12.31이전 가입자 ②만 20세 이상, ③불입기간 10년 이상, ④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 ⑤분기별 300만원내 불입 -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연 금 저 축 (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01.1.1이후 가입자 ②만 18세 이상, ③~⑤ 위와 동일 - 연간 불입액 전액(한도 240만원)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금액(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형제자매 제외) - 직불카드·백화점계 카드 포함, 단, 선불·외국에서 발행카드 제외 - 공제금액 : <카드사용액-(총급여액×10%)>×2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계산(별도 자료 불필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세대주가 95.11~97.12 기간 중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 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의 30% - 주택자금공제액의 ②와 중복해서 공제 불가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납입증명서 원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3.31까지 본인명의로 장기증권저축 가입하여, 불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경과한 경우 - 연평균 주식보유율 70%이상 - 2002년도 : 저축불입액의 5%, 2001년도 : 불입액의 7%

<부록 2>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판시 사항]

-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 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다.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결정 요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나.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다. 심판대상이 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이 조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의 나머지 조항들인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한다.

[당 사 자]

청 구 인 최○회

대 리 인 변호사 강인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184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참조 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36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참조 판례]

- 다.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판례집 13-2, 77

[주 문]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1)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48,996,506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748,546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권은 □□섬유공업사, △△염공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2,400,000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845원, 사업소득금액 -3,562,398,226원이었다.
- (2) 청구인은 2000. 정○근 30.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 48,996,506원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748,546원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김○권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845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274,882,897원, 과세표준 269,611,499원, 산출세액 94,844,599원 및 납부할 세액으로 94,406,597원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전부 자진납부하였다.
- (3) 그런데 청구인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결손금 공제에 관한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김○권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3,562, 398,226원(이하 ‘이 사건 결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김동권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25,886,391원(214,137,845원+11,748,546원)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8. 7. 종로세무서장에게 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결손금을 청구인과 김○권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55,973,654원, 산출세액을 11,792,096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은 2000. 9. 24. 소득세법 통칙 45-2 및 45-4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4) 이에 청구인은 위 종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2001구18496), 이 사건의 계속 중에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36조 제1항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1아96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1. 10. 11. 이를 기각하자, 2001. 10. 26. 위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 (1)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①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관련 법조문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부부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단순합산과세방식은 우리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체계에 비추어 개인단위 과세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인하여 혼인을 한 부부는 혼인하지 아니한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점에서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점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요지

-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가)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를 같은 소비단위로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 합당하고, (나)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부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다)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으며, (라) 소득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 및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2)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제 체계로 인하여 자산소득합산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부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독신자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 및 위에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3)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제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과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 (1)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가)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를 같은 소비단위로 담세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나)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부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다)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 (2) 현실적으로 부부의 경우 서로간의 소득을 공유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는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 (3)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제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납세자의 담세력과 생활실태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과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주요내용

- (1)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일정범위내의 가족에게 자산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 고소득층의 자

산소득에 대해서 중과세하기 위한 조치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의해서 채택되어 197정○근 1. 1.부터 시행되었다.

- (2)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자산소득은 통상 세대주의 지배아래에 있으며, 그 성질상 명의 분산이 용이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 (3)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법 제61조 제1항).
- (4) 소득세법상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자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이다(법 제61조 제1항). 여기서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또는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가 된다(법시행령 제120조).
- (5)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을 근거로 각종 세액산정절차를 거쳐서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한다(법 제61조 제4항).
- (6)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는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 자산소득금액 외의 기타의 종합소득금액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법 제61조 제3항).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적 효과 및 법률상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을 가진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는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종합소득과 세표준 대비 세율을 1천만원 이하 부분은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부분은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부분은 30%, 8천만원 초과 부분은 40%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 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법률상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을 혼인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 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2)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는 어떠한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차별금지 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혼인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차별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1)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의제규정(제44조) 등을 통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소득세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의 일방이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그 다른 한쪽의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부부자산소득합산제도가 추구하는 ‘부부의 소득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행정기술적인 관점은 헌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그 성질상 법적인 논거로서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하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기술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2) 개인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할 것인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급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부부의 가계공동생활에서의 절약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의 요소로서 고려될 사항이 전혀 아니다.
- 3) 소득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소득세에 의하여 시정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공평의 해소를 위해서 혼인과는 상관없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한 소득세부과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

록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자산소득 합산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소득세법의 본질상 혼인관계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자산소득을 가진 고소득계층뿐만 자산소득을 가진 중간 소득계층에게도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산소득자에 비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은 기대하는 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간에는 균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통하여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불필요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 부수적 위헌선언

- (1)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들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조항 이외의 나머지 법률조항들도 함께 위헌선언할 수가 있다. 즉, 합헌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법률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이 나머지 법률조항과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종합적으로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위헌인 법률조항만을 위헌선언하게 되면 전체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342;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29;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판례집 13-2, 77, 100).

- (2)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그에 부수되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비록 심판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조 제1항과 함께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2002 연구보고서 210-26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2003년 1월 21일 인쇄
2003년 1월 23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8,000원>

ISBN 89-8491-056-2 93360